창의기획과제 2020-01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충북사회의 구조변화

최용환, 정삼철, 양서우, 김미옥
김민정, 김학실, 김양식, 기정훈, 심재승

CRI 2020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제 I 장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5
3. 연구내용 및 방법 ····· 6
   1) 연구범위 ····· 6
   2) 주요 연구내용 ····· 6
   3) 연구 방법 ····· 6

제 II 장 전환기의 충북 : 기회와 도전 ····· 7

1. 주요이슈 : 현황 ····· 9
2. 충청북도의 인구구조 변화 ····· 11
   1) 충청북도 인구변화 ····· 11
   2) 충청북도 인구성장 추이 ····· 13
   3) 충청북도 노인인구 비율 ····· 14
   4) 충청북도 연령별 순이동 분포 ····· 15
   5) 충북과 타·시·도 간 전출입 ····· 17
   6) 지역별 출생·사망자수 ····· 21
   7) 20-39세 여성인구와 합계출산율 ····· 24
   8) 지역별 국제결혼 ····· 25
3. 충청북도의 위기인가? ····· 26
   1) 지역소멸위기 ····· 26
   2)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 ····· 27
   3)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28
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기회와 대응 ····· 31
   1)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기회 ····· 31
   2) 지역사회의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 32

제Ⅲ장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변화와 전망, 대응전략 ····· 35

1. 경제부문 ····· 37

1)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현황과 전망 ····· 37

2)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변화 ····· 40

3)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분야 대응전략 ····· 44

2. 노동부문: 충북 사회의 구조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55

1) 들어가며 ····· 55

2) 충북지역의 고령화 사회와 노동생산성 관계 ····· 62

3) 실증 분석 ····· 69

4) 요약 및 시사점 ····· 76

3. 식품소비 부문 ····· 79

1)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건강한 식품소비의 중요성 확대 ····· 79

2)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균형과 건강 악화 ····· 80

3) 고령친화식품 관련 정부정책 ····· 84

4) 고령자의 식품소비와 앞으로의 전망 ····· 89

5) 결론 ····· 99

4. 금융산업과 가계금융부분 ····· 100

1) 금융기관 점포수 ····· 100

2) 금융기관 여수신 구조 ····· 103

3) 충북도민의 금융생활에 대한 만족도 ····· 114

4)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변화와 문제점 ····· 117

5)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금융부문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 ··· 124

제Ⅳ장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활건강의 변화와 전망, 대응전략 ····· 133

1. 교육부문 ····· 135

1) 저출생 관련 교육 이슈 ····· 135

2) 고령화 관련 교육 정책 이슈 ····· 147

2. 문화부문 ····· 161

1) 서론 ····· 161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화환경 변화 ····· 162

3)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문화정책 방향 ····· 169
4)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충북의 새 문화정책 ····· 173
5) 결론 ····· 182
3. 지역개발부문 ····· 185
1) 서론 ····· 185
2)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 주요 이슈들 ····· 185
3)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도전 ····· 193
4)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지역개발정책의 변화와 전망 ····· 198
5) 결론 ····· 203
4. 행정부문 ····· 204
1)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충북전략의 필요성 ····· 204
2) 미래를 상정한 충청 행정의 과제 ····· 205
3) 민관협력에 의한 생활의 유지 ····· 214
4) 충북의 지자체경영관리와 2층제의 유연화 ····· 216
5) 충북도의 도시권 플랫폼 ····· 218
6) 미래를 상정한 충북도의 위기와 그 대응 ····· 220
7) 미래를 향한 충북 행정의 방향성 ····· 227

제Ⅴ장 결론 ····· 231
1. 결론 ····· 233
2. 정책적 제언 ····· 235

전문가 좌담회 ····· 236

참고문헌 ····· 242

표차례

〈표 Ⅱ-1〉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 (1992~2017) ····· 12
〈표 Ⅱ-2〉 연령대별 10개년간 인구성장추이 ····· 13
〈표 Ⅱ-3〉 충청북도 만65세 이상 인구비율 ····· 15
〈표 Ⅱ-4〉 충청북도 연령별 순이동 분포 ····· 16
〈표 Ⅱ-5〉 충청북도 인구이동 ····· 18
〈표 Ⅱ-6〉 충북과 타 시·간 전출결과 ····· 19
〈표 Ⅱ-7〉 충북과 타 시·도간 전입결과 ····· 20
〈표 Ⅱ-8〉 시·군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00~2018년) ····· 21
〈표 Ⅱ-9〉 지역별 출생·사망 ····· 23
〈표 Ⅱ-10〉 20-39세 여성인구와 합계출산율 ····· 24
〈표 Ⅱ-11〉 충청북도 외국인과의 혼인 ····· 25
〈표 Ⅱ-12〉 해외의 지방 인구감소 현상과 문제인식 ····· 27
〈표 Ⅲ-1〉 충북지역의 인구전망 ····· 37
〈표 Ⅲ-2〉 전국 및 충북의 경제활동인구 추이 ····· 38
〈표 Ⅲ-3〉 충북의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 ····· 39
〈표 Ⅲ-4〉 기초 통계량 ····· 71
〈표 Ⅲ-5〉 GDP 시계열 변화 추이 계수 및 충북 분기별 GRDP 추계 ····· 71
〈표 Ⅲ-6〉 충북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75
〈표 Ⅲ-7〉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 81
〈표 Ⅲ-8〉 그린바이오 주요 산업별 제품화 단계별 핵심요소 ····· 87
〈표 Ⅲ-9〉 고령자 연령별 주요 식품류별 일일 섭취량 ····· 89
〈표 Ⅲ-10〉 고령자 연령대별 주요 식품류별 일일 섭취 비중 ····· 90
〈표 Ⅲ-11〉 고령자 50대와 80대 이상의 끼니별 일일 섭취비중 비교 ····· 91
〈표 Ⅲ-12〉 고령자 연령대별 다소비 식품 비교 ····· 93
〈표 Ⅲ-13〉 고령자 세분 연령대별 원재료성 식품, 가공식품 섭취량 ····· 94
〈표 Ⅲ-14〉 충북지역 금융기관 점포수 변화 ····· 101
〈표 Ⅲ-15〉 충북지역 금융기관 점포수(예금은행+비은행)와 비중 및 1개 점포당 인구수 ····· 102

〈표 Ⅲ-16〉 충북지역 4개 시중은행 점포수와 비중 및 1개 점포당 인구수 ····· 103
〈표 Ⅲ-17〉 충북지역 금융기관 수신 ····· 104
〈표 Ⅲ-18〉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신 ····· 105
〈표 Ⅲ-19〉 충북지역 가계의 자산구조 ····· 111
〈표 Ⅲ-20〉 충북지역 가계의 부채구조 ····· 113
〈표 Ⅲ-21〉 충북지역 가계의 순자산 ····· 114
〈표 Ⅲ-22〉 충북도민의 금융생활에 인식(2019년) ····· 115
〈표 Ⅲ-23〉 충북의 주택연금 이용현황(2020년 6월 말 기준) ····· 121
〈표 Ⅲ-24〉 전국 재무설계전문가(CFP/AFPK) 등록 현황(2020년 6월 기준) ····· 130
〈표 Ⅳ-1〉 충청북도 합계 출산율 ····· 137
〈표 Ⅳ-2〉 충청북도 학생 수 비교 ····· 138
〈표 Ⅳ-3〉 충청북도 대학생 재학생수 추이 ····· 139
〈표 Ⅳ-4〉 지방소멸위험 지수 ····· 139
〈표 Ⅳ-5〉 충청북도 폐교 현황 ····· 141
〈표 Ⅳ-6〉 노인의 특성 변화 ····· 149
〈표 Ⅳ-7〉 노인의 평생교육참여 ····· 150
〈표 Ⅳ-8〉 고령자의 비형식교육 평생학습실태 ····· 153
〈표 Ⅳ-9〉 노인교육프로그램 ····· 155
〈표 Ⅳ-10〉 주요국가의 노인교육정책 비교 ····· 160
〈표 Ⅳ-11〉 한국인의 주여가활동 ····· 166
〈표 Ⅳ-12〉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 ····· 167
〈표 Ⅳ-13〉 워라밸 세대의 특징 ····· 168
〈표 Ⅳ-14〉 충북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추이 ····· 175
〈표 Ⅳ-15〉 인구 백만명단 문화시설수 ····· 176
〈표 Ⅳ-16〉 충북 박물관 보유자원 및 이용 현황 ····· 177
〈표 Ⅳ-17〉 충북 미술관 보유자원 및 이용 현황 ····· 177
〈표 Ⅳ-18〉 충북 문예회관 보유자원 및 이용 현황 ····· 178
〈표 Ⅳ-19〉 정보시스템의공통화를 활용한 행정사무의 효율화 ····· 205
〈표 Ⅳ-20〉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 요구의 대응 ····· 207
〈표 Ⅳ-21〉 도시의 스폰지화에 대한 대응 ····· 220
〈표 Ⅳ-22〉 충북의 대학 수의 변화 ····· 225

그림차례

〈그림 Ⅱ-1〉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9
〈그림 Ⅱ-2〉 연령대별 10개년 인구성장추이 ····· 14
〈그림 Ⅱ-3〉 지역소멸위험지역 현황 ····· 26
〈그림 Ⅱ-4〉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및 ICT의 역할 ····· 33
〈그림 Ⅲ-1〉 충북지역 인구전망 추이 ····· 37
〈그림 Ⅲ-2〉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 56
〈그림 Ⅲ-3〉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따른 충북의 인구구조 변화 ····· 59
〈그림 Ⅲ-4〉 시도별 고령 인구 비중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 61
〈그림 Ⅲ-5〉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고령 비중 변화 추이 ····· 63
〈그림 Ⅲ-6〉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1인당 자본량 변화 추이 ····· 65
〈그림 Ⅲ-7〉 충북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근로자 수 변화 ····· 66
〈그림 Ⅲ-8〉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근로자 비중 변화 추이 ····· 66
〈그림 Ⅲ-9〉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실업률 변화 추이 ····· 67
〈그림 Ⅲ-10〉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상용직 비중 변화 추이 ····· 68
〈그림 Ⅲ-11〉 고령자 세부 연령대별 소득/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 ····· 80
〈그림 Ⅲ-12〉 연령대별 유병율 비교 ····· 82
〈그림 Ⅲ-13〉 65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주요국과 비교) ····· 82
〈그림 Ⅲ-14〉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 ····· 88
〈그림 Ⅲ-15〉 충북지역 금융기관 수신 현황 ····· 104
〈그림 Ⅲ-16〉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신 현황 ····· 106
〈그림 Ⅲ-17〉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 107
〈그림 Ⅲ-18〉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방가계대출 ····· 107
〈그림 Ⅲ-19〉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월평균 가계소득 ····· 108
〈그림 Ⅲ-20〉 충북지역 가계소득/지역내총생산 비중 ····· 108

〈그림 Ⅲ-21〉 충북지역 가계자산 ····· 109
〈그림 Ⅲ-22〉 충북지역 가계자산 - 실물자산 ····· 109
〈그림 Ⅲ-23〉 충북지역 가계자산 - 금융자산 ····· 110
〈그림 Ⅲ-24〉 충북지역 가계부채 ····· 112
〈그림 Ⅲ-25〉 충북지역 가계부채 ····· 113
〈그림 Ⅲ-26〉 충북지역 가계 순자산 ····· 114
〈그림 Ⅲ-27〉 11개 분야별 충북지역 소비생활 만족도와 중요도 ····· 116
〈그림 Ⅲ-28〉 11개 분야별 충북지역 소비생활 만족도와 소비자문제 경험률 ····· 117
〈그림 Ⅳ-1〉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추이 ····· 162
〈그림 Ⅳ-2〉 성별 ·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 163
〈그림 Ⅳ-3〉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164
〈그림 Ⅳ-4〉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164
〈그림 Ⅳ-5〉 전국 시도별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 ····· 174
〈그림 Ⅳ-6〉 전국 시도별 자치단체 평균 생활문화시설 현황 ····· 174
〈그림 Ⅳ-7〉 전국 문화시설 현황 ····· 175
〈그림 Ⅳ-8〉 전국 시도별 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법인 · 단체 현황 ····· 179
〈그림 Ⅳ-9〉 2040년까지 5년 간격 농촌의 인구 구성 ····· 194
〈그림 Ⅳ-10〉 30년 이내 소멸할 위험이 높은 시·군 및 읍·면·동 ····· 194
〈그림 Ⅳ-11〉 전국 기초지자체 버블차트 ····· 195
〈그림 Ⅳ-12〉 지자체-페르소나 버블차트 ····· 195
〈그림 Ⅳ-13〉 파괴적 기술을 활용에 의한 업무의 자동화 ····· 206
〈그림 Ⅳ-14〉 충북의 연계중추도시권의 이미지 ····· 208
〈그림 Ⅳ-15〉 충북도의 경영관리 플랫폼 ····· 218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출생이 감소로 인해 총인구수가 감소하며, 연령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은 2012년 38.8세에서 2019년 42.7세로 상승하였다. 기대수명 역시 2012년 80.9세에서 2019년 83세로 증가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가속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는 경제기반, 소비시장, 노동시장, 주택시장 및 지역사회·기술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출산율 감소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할지라도 출산율 감소를 없애면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지만 일정 기간동안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아도 부모 세대의 인구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총 출생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인구증가를 멈추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단 인구감소가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지역으로 인구유입이 고갈되면 도시지역의 인구는 감소로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구감소는 일부 농촌지역에서 시작하겠지만, 그것이 도시지역까지 확산될 것이다.

○ 한편,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 식량과 경제 활동의 에너지 문제, 토지와 같은 생활공간과 같은 물리적인 문제가 집중된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력 감소 등 연령 차이로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다. 인구의 증가 혹은 감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는 지역사회의 문제이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자치단체 행정기능의 유지 곤란에 대응을 위해 매력적이고 활력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의 유지·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한층 더 진행되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느 한쪽의 방향성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어느 국가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 내에 출산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도 향후 세계에서 그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으로 충청북도는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감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 충청북도 전체 인구규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역사회에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충청북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으로 인구의 쏠림현상이 심화됨으로 인구 유출에 따라 자치단체는 인적자원의 고갈이 심화될 것이다. 반면에 인구감소 지역은 경제력과 정주 여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하여 인구구조의 연령분포와 지역 간 인구분포의 변화에 의한 불균형의 확대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응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에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행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기반과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책적 영향과 충격의 크기도 다르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는 예상보다 현실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충청북도의 큰 문제이며,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치를 줄이고, 정책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충북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인구변화가 가져올 장래 지역사회구조의 변화를 진단하는 데 있다. 즉,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사회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 11개 시·군이다.

2) 주요 연구내용

○ 내용적 범위는 전환기의 충북,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삶의 질 변화와 전망(교육, 문화, 지역개발, 행정),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와 전망, 대응전략(경제, 노동, 농업, 금융)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인구구조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검토, 학술논문, 국내·외 단행본, 통계자료 등을 통해 연구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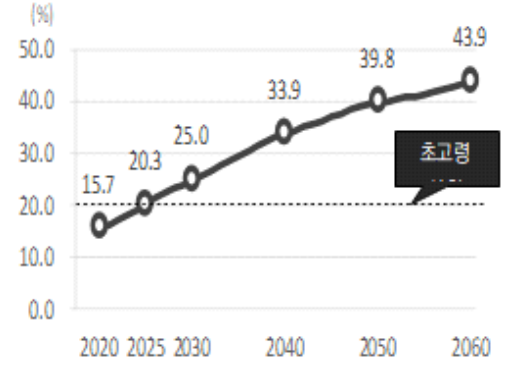
제 II 장

전환기의 충북 : 기회와 도전

1 주요이슈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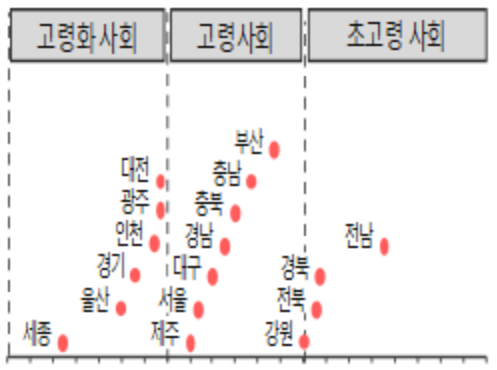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구문제는 국가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나갈것인가?는 중요하고 볼 수 있다. 마스다 히로야(2015)는 “인구감소는 일본 전체의 문제이지만 지방의 인구감소는 대도시보다 더 빠르게 시·정·촌의 절반 이상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에 있다고 ‘마스다 보고서’에서 제시하였. 이와같이 지방소멸의 위험성을 경고한 이후에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지방소멸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이상호, 2016)하였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사회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현재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2020)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그림 Ⅱ-3〉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통계청(2019)에 따르면 1990년에 5.1%였던 고령화율은 의료수준 향상 등에 의한 평균수명의 상승과 2000년 7.0%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어 2020년에 고령화율은 15.7%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향후에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20). 특히,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은 그 만큼 인구소멸도 빠르게 진행되어 세계에서 최초로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Coleman, 2006). 성별로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여자가 17.9%, 남자가 13.5%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4% 높다. 65세 이상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남자 고령인구는 '20년 76.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년 91.3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충북지역은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다. 즉, 인구감소 분포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농촌지역의 군 지역은 거의 일관된 양상을 나타났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수의 감소, 빈집 증가, 신규주택의 감소, 의료비의 증가, 공공시설의 축소, 대중교통이용 불편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 산업, 고용, 복지, 의료 등 사회·경제시스템을 새로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출산율이 높고, 고령화율이 낮은 시대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양적 측면이 아니라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한다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 사회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인구감소는 지역사회 구조가 전환되어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에 필요하다.

2 충청북도의 인구구조 변화

1) 충청북도 인구변화

○ 충청북도 인구는 2019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1,600,007명이며, 이 기간 동안 전국인구 51,849,861명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1992년 1,403,633명에서 2000년 1,497,513명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06년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충청북도는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연령구조는 과거와 현재를 합한 인구의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구구성을 예측과 전망을 할 수 있다. 1992년부터 2019년 사이의 충북인구는 196,374명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0.005%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충청북도의 출산에 의한 자연적인 인구증가와 사회적 인구이동에서 비롯된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출생자보다 사망자수가 많고 인구유출로 인한 것이다. 1992~2019년 충북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0~14세의 유소년층 인구의 구성비는 23.5%에서 12.5%로 감소하였으며,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는 69.4%에서 70.4%로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7.1%에서 17.1%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한다. 즉,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1〉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 (1992~2017)

구분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이상		증가율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1992	1,403,633	329,212	23.5	974,716	69.4	99,705	7.1	-
1993	1,418,403	328,792	23.2	986,234	69.5	103,377	7.3	1.1
1994	1,425,295	324,402	22.8	994,023	69.7	106,870	7.5	0.5
1995	1,439,346	321,868	22.4	1,007,037	70.0	110,441	7.7	1.0
1996	1,454,524	319,675	22.0	1,021,265	70.2	113,584	7.8	1.1
1997	1,470,776	317,604	21.6	1,035,186	70.4	117,986	8.0	1.1
1998	1,484,466	314,830	21.2	1,046,114	70.5	123,522	8.3	0.9
1999	1,492,077	313,250	21.0	1,049,618	70.3	129,209	8.7	0.5
2000	1,497,513	311,631	20.8	1,049,722	70.1	136,160	9.1	0.4
2001	1,496,520	307,415	20.5	1,046,308	69.9	142,797	9.5	-0.1
2002	1,492,713	302,338	20.3	1,041,488	69.8	148,887	10.0	-0.3
2003	1,489,635	297,119	19.9	1,037,477	69.6	155,039	10.4	-0.2
2004	1,488,945	292,090	19.6	1,034,108	69.5	162,747	10.9	0.0
2005	1,488,803	285,388	19.2	1,034,745	69.5	168,670	11.3	0.0
2006	1,494,559	278,673	18.6	1,039,972	69.6	175,914	11.8	0.4
2007	1,506,608	272,919	18.1	1,047,466	69.5	186,223	12.4	0.8
2008	1,519,587	266,295	17.5	1,060,750	69.8	192,542	12.7	0.9
2009	1,527,478	258,691	16.9	1,070,672	70.1	198,115	13.0	0.5
2010	1,549,528	252,406	16.3	1,092,652	70.5	204,470	13.2	1.4
2011	1,562,903	246,647	15.8	1,106,783	70.8	209,473	13.4	0.9
2012	1,565,628	239,803	15.3	1,110,580	70.9	215,245	13.7	0.2
2013	1,572,732	233,084	14.8	1,117,460	71.1	222,188	14.1	0.5
2014	1,578,933	226,373	14.3	1,123,660	71.2	228,900	14.5	0.4
2015	1,583,952	219,080	13.8	1,130,059	71.3	234,813	14.8	0.3
2016	1,591,625	214,519	13.5	1,136,416	71.4	240,690	15.1	0.5
2017	1,594,432	209,840	13.2	1,132,158	71.0	252,434	15.8	0.2
2018	1,599,252	205,759	12.9	1,131,730	70.8	261,763	16.4	0.3
2019	1,600,007	200,741	12.5	1,125,841	70.4	273,425	17.1	0.0

자료: 행정안전부, 전국주민등록인구현황

2) 충청북도 인구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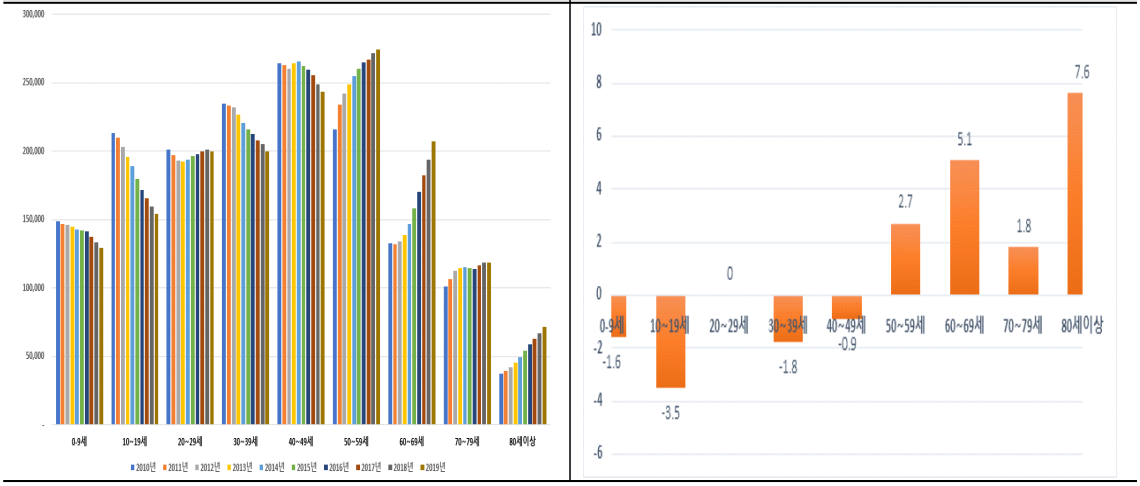
○ 2019년말 기준으로 충북의 50대 연령층은 1960년~1969년에 출생한 사람으로 274,429명으로 전체인구 1,600,007명의 17.2%로 가장 높은 연령대별 인구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0~49세는 15.2%, 60~69세는 13.0%, 20~29세와 30~39세는 각각 12.5% 순이며, 0~9세는 8.1%으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와 같이 인구규모가 가장 높은 연령층이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구집단 5060 뉴시니어 세대에 진입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연평균성장률은 0.4%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의 연령층은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60~69세는 5.1%, 50~59세는 2.7%, 70-79세는 1.8%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반면에 10-19세 연령의 연평균성장률은 -3.5%, 30-39세는 -1.8%, 0-9세는 -1.6%로 나타났다.

〈표 Ⅱ-2〉 연령대별 10개년간 인구성장추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성장률
0-9세	148,949	147,046	145,970	144,585	142,815	142,319	141,545	137,206	133,659	129,285	-1.6
10~19세	213,205	209,997	203,052	196,043	188,890	179,628	171,795	165,826	159,713	154,357	-3.5
20~29세	200,978	197,522	193,387	192,553	194,013	196,456	198,134	199,663	200,941	200,205	0.0
30~39세	235,106	233,527	232,019	227,068	220,756	216,258	212,590	207,682	205,568	200,080	-1.8
40~49세	264,274	262,692	260,120	264,661	265,726	262,133	259,637	255,596	248,623	243,597	-0.9
50~59세	215,919	234,051	242,364	249,069	255,182	260,270	264,834	267,036	271,428	274,429	2.7
60~69세	132,476	132,254	134,405	139,039	146,731	158,194	170,236	182,281	194,090	207,296	5.1
70~79세	101,425	106,523	112,392	114,404	115,403	114,586	114,117	116,357	118,431	118,902	1.8
80세이상	37,196	39,291	41,919	45,310	49,417	54,108	58,737	62,785	66,799	71,856	7.6
합계	1,549,528	1,562,903	1,565,628	1,572,732	1,578,933	1,583,952	1,591,625	1,594,432	1,599,252	1,600,007	0.4

자료: 통계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연령별 10년개년(2010-2019년) 인구성장추이(명)	연령대별 10개년(2010-2019년) 연평균성장률



〈그림 Ⅱ-2〉 연령대별 10개년 인구성장추이

3) 충청북도 노인인구 비율

○ UN에 의하면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한다[1]. 2019년 충북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73,425명으로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7.1%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 이후 노인인구의 완만한 증가로 인해 충청북도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992년 99,705명, 2000년 136,160명, 2010년 204,470명, 2015년 234,813명, 2017년 252,434명, 2019년 273,42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충청북도 고령화율은 2002년 10.0%, 2010년 13.2%, 2013년 14.1%, 2019년 17.1%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고령화율[2] 평균 14.7%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게

1) 선진국은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각각 40년, 25년이 소요되었으나, 한국은 각각 17년, 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다.
2)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3.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면 고령화율은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향후 시간이 경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증가하여 65세 이상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Ⅱ-3〉 충청북도 만65세 이상 인구비율

(단위: 명, %)

년도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2010	13.2	8.0	14.4	14.8	14.4	27.2	21.5	24.6	13.1	15.4	28.0	15.9	22.1
2011	13.4	8.3	14.7	15.1	14.3	27.7	21.9	24.9	13.3	15.5	27.9	16.1	22.5
2012	13.7	8.6	15.2	15.8	14.2	28.4	22.4	25.3	13.6	15.7	28.2	16.4	23.3
2013	14.1	9.0	15.6	16.3	14.5	28.7	23.2	25.8	14.0	15.9	28.5	16.7	24.0
2014	14.5	10.3	16.0	16.8		29.3	23.9	26.3	14.2	16.3	29.1	16.9	24.9
2015	14.8	10.7	16.3	17.3		29.5	24.7	26.9	14.0	16.2	29.5	17.1	25.5
2016	15.1	11.0	16.7	17.7		29.8	25.4	27.2	14.3	16.2	29.7	17.3	25.9
2017	15.8	11.5	17.6	18.8		30.7	26.5	28.1	14.9	16.1	30.5	18.2	27.0
2018	16.3	12.0	18.1	19.7		31.6	27.4	28.9	15.7	15.9	30.9	19.1	27.7
2019	17.1	12.7	18.9	20.6		33.1	28.5	30.0	16.4	16.0	32.0	20.1	29.1

자료: 통계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4) 충청북도 연령별 순이동 분포

○ 충청북도의 지역 간 인구이동은 1970-2000년대까지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가 유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및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00년 이후 충북지역 연령대별 인구유출과 유입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소년 인구(0-14세)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유출인구가 지속되었다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유입이 증가하였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유소년 인구의 유출은 자녀교육을 위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다. 유소년 인구(0-14세)은 교육문제로 청년층 인구(15-29세)에서 대학과 직장 등의 사회적 이유로 전출이 많았다. 특히, 청년인구(15-29세)는 순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것으로 유독 청년층의 인구가 많은 것은 학업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에 청년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자리 제공 등이 큰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II-4〉 충청북도 연령별 순이동 분포

(단위: 명)

구분	유소년 (0-14세)	청년 (15-29세)	핵심생산 (30-49세)	중고령 (50-64)	고령 (65세이상)	순이동
2000	-136	-5,418	266	811	73	-4,404
2001	-1,461	-6,206	-1,132	516	-245	-8,528
2002	-653	-6,621	-940	332	-320	-8,202
2003	-246	-6,592	271	658	-172	-6,081
2004	-330	-6,314	174	816	-163	-5,817
2005	-305	-5,677	182	1,134	-42	-4,708
2006	1,172	-4,069	2,905	1,550	192	1,750
2007	1,515	-1,933	3,681	1,841	588	5,692
2008	1,568	-1,524	3,882	2,236	751	6,913
2009	560	-2,811	2,386	1,676	710	2,521
2010	997	-1,679	3,641	2,369	636	5,964
2011	1,238	-1,813	4,493	3,035	1,126	8,079
2012	392	-2,196	2,827	2,850	768	4,641
2013	-192	-2,085	1,804	2,818	768	3,113
2014	-595	-1,487	1,106	2,621	722	2,367
2015	-1,110	-1,438	272	2,998	716	1,438
2016	242	-2,195	1,958	3,894	1,112	5,011
2017	-553	-2,173	694	3,457	837	2,262
2018	210	-1,932	2,546	3,349	976	5,149
2019	387	-2,829	1,484	2,801	722	2,565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충북 청년인구의 전체 순이동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학 진학인구가 감소할 가능성, 수도권 취업을 포기하고 지역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07년 이후 청년인구의 순이동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인구(50-64세)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함께 타 연령층에 비해 순유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3]는 지역사회의

3) 1차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생으로 2019년부터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 절벽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며, 2차 베이비붐세대는 1968-1974년간 태어난 세대를 의미함.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는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많으며, 성비는 경기도가 104.1명이며, 충북은 104.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

경제성장을 같이 하는 세대로서 은퇴를 하게 되면 생산가능인구의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투입량이 감소와 생산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충북의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를 고려하면 이들 세대의 고령인구로 편입되면 지역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가속화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지만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점증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을 것이다.

5) 충북과 타·시·도 간 전출입

○ 충북과 타 시·도간 전출입은 2005년까지 일자리 및 양호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의 순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충북과 타 시·도간 전출입은 순유입으로 전환하였다. 그 원인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정책과 함께 최근 수도권에서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또는 수도권 집중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지역발전위원회, 2018). 반면에 인구유출은 지방 인구감소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면 사회·경제·환경 등의 문제는 인구유출을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는 근본적으로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충북은,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주가 시작된 이후 세종시, 대전, 충남으로 순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로 이전한 충북도민이 이주한 것은 당초 국토의

• 시·도별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와 성비(2015년)

시·도	인구	베이비붐세대 내 비중(%)	성비	시·도	인구	베이비붐세대 내 비중(%)	성비
전국	7,110,237	100.0	99.8	경기	1,629,817	22.9	104.1
서울	1,360,092	19.1	92.4	강원	235,290	3.3	102.3
부산	552,168	7.8	91.5	충북	224,236	3.2	104.0
대구	363,149	5.1	96.8	충남	274,120	3.9	106.0
인천	417,996	5.9	102.3	전북	255,029	3.6	101.8
광주	191,637	2.7	98.5	전남	256,703	3.6	105.4
대전	207,429	2.9	99.4	경북	395,836	5.6	101.8
울산	170,005	2.4	105.7	경남	476,116	6.7	102.8
세종	21,123	0.3	105.1	제주	79,491	1.1	103.3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5〉 충청북도 인구이동

(단위: 명)

년도	총인구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내 이동-시 군구내	시·도내 이동-시 군구간 전입	시·도내 이동-시 군구간 전출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2000	1,497,513	235,155	239,559	-4,404	108,964	48,020	48,020	78,171	82,575
2005	1,488,803	235,907	240,615	-4,708	113,771	43,610	43,610	78,526	83,234
2010	1,549,528	235,671	229,707	5,964	108,942	44,125	44,125	82,604	76,640
2011	1,562,903	228,594	220,515	8,079	103,337	42,342	42,342	82,915	74,836
2012	1,565,628	212,263	207,622	4,641	94,467	38,994	38,994	78,802	74,161
2013	1,572,732	215,973	212,860	3,113	101,578	38,381	38,381	76,014	72,901
2014	1,578,933	215,944	213,577	2,367	105,337	31,277	31,277	79,330	76,963
2015	1,583,952	214,626	213,188	1,438	106,553	26,711	26,711	81,362	79,924
2016	1,591,625	202,679	197,668	5,011	100,466	23,690	23,690	78,523	73,512
2017	1,594,432	197,177	194,915	2,262	95,481	24,344	24,344	77,352	75,090
2018	1,599,252	218,886	213,737	5,149	112,186	26,684	26,684	80,016	74,867
2019	1,600,007	211,396	208,831	2,565	107,970	25,414	25,414	78,012	75,447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표 Ⅱ-6〉 충북과 타 시·간 전출결과

(단위: 명)

	2000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82,575	76,640	79,924	73,512	75,090	74,867
서울	18,321	14,561	13,197	13,032	12,961	13,783
부산	1,807	1,618	1,757	1,559	1,660	1,406
대구	1,799	1,655	1,450	1,517	1,443	1,450
인천	3,879	3,473	3,509	3,308	3,416	3,394
광주	676	906	711	647	680	729
대전	10,937	8,853	7,749	7,917	8,014	7,905
울산	901	755	1,057	716	633	576
세종	-	-	9,061	5,544	6,270	5,978
경기	22,065	22,388	20,075	19,803	19,833	20,949
강원	5,220	4,563	4,725	4,420	4,581	4,089
충남	7,550	8,376	6,580	6,056	6,387	6,087
전북	1,838	1,823	1,753	1,692	1,770	1,696
전남	1,336	1,199	1,344	1,233	1,232	1,133
경북	4,052	3,869	3,859	3,410	3,475	3,122
경남	1,834	2,115	2,259	1,751	1,726	1,731
제주	360	486	838	907	1,009	83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 충북과 타시·도간 전출결과를 보면 2000년 82,575명에서 2002년 86,176명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 83,234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증감을 지속하다가 다시 2017년 75,090명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 타지역으로의 전출은 2000년 82,575명중 경기 22,065명으로 가장 많은 전출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18,321명, 대전

10,937명 충남 7,550명, 강원 5,220명, 경북 4,052명의 순이다. 2012년 총 74,161명의 전출자 중에서 경기 20,48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 13,624명, 대전 8,803명, 충남 6,253명, 강원 4,312명, 경북 3,722명, 세종 2,797명으로 충청권으로 17,853명의 전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총 74,867명의 전출자 중에서 경기 20,94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 13,783명, 대전 7,905명, 충남 6,087명, 세종 5,97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7〉 충북과 타 시·도간 전입결과

(단위: 명)

구분	2000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78,171	82,604	81,362	78,523	77,352	80,016
서울	14,934	15,461	14,379	14,087	13,302	13,406
부산	2,191	1,986	2,023	1,877	2,050	1,980
대구	1,824	1,784	1,957	1,771	1,824	2,017
인천	4,074	4,347	4,624	4,303	4,051	4,191
광주	742	831	970	848	910	1,028
대전	9,361	8,847	8,265	7,748	7,653	7,902
울산	971	1,061	1,162	990	977	1,193
세종	-	-	2,308	2,626	2,815	2,973
경기	19,900	24,463	23,692	22,618	22,486	23,057
강원	5,512	5,144	4,706	4,890	4,764	4,650
충남	7,685	7,944	6,253	5,697	5,828	5,848
전북	1,990	2,216	2,271	2,159	2,195	2,415
전남	1,945	1,345	1,442	1,472	1,480	1,524
경북	4,511	4,290	4,225	4,141	4,044	4,407
경남	2,165	2,407	2,464	2,570	2,219	2,642
제주	366	478	621	726	754	783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6) 지역별 출생·사망자수

○ 충북차원에서 출생과 사망의 추이에 대한 특징적인 점은 사망자 수는 매년 소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출생자 수는 점증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자연증가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합계출산율[4]은 전국의 합계출산율과 비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으로 시지역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8〉 시·군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00~2018년)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충북	출생아수	19,471	13,075	14,670	13,563	12,742	11,394	10,586
	합계출산율	1.57	1.19	1.40	1.41	1.36	1.24	1.17
청주	출생아수	8,796	6,319	6,951	8,529	7,797	6,948	6,429
	합계출산율	1.58	1.15	1.34	1.44	1.35	1.28	1.16
충주	출생아수	2,652	1,581	1,722	1,430	1,428	1,234	1,155
	합계출산율	1.50	1.12	1.35	1.26	1.31	1.14	1.09
제천	출생아수	1,634	1,008	1,061	891	891	760	755
	합계출산율	1.45	1.12	1.34	1.30	1.33	1.17	1.19
청원	출생아수	1,474	1,174	1,828				
	합계출산율	1.51	1.40	1.66	-	-	-	-
보은	출생아수	370	242	182	185	185	174	178
	합계출산율	1.52	1.41	1.28	1.54	1.55	1.51	1.59
옥천	출생아수	629	353	354	279	274	209	172
	합계출산율	1.53	1.08	1.25	1.25	1.28	1.03	0.89
영동	출생아수	581	346	342	245	228	299	285
	합계출산율	1.57	1.24	1.45	1.21	1.19	1.62	1.58
증평	출생아수	473	338	406	390	402	367	324
	합계출산율	1.70	1.50	1.77	1.83	1.80	1.67	1.51

4) 합계출산율(Totlaal Fertility Rate)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진천	출생아수	835	552	629	590	533	513	545
	합계출산율	1.78	1.29	1.64	1.62	1.41	1.35	1.33
괴산	출생아수	406	178	179	128	120	128	101
	합계출산율	1.69	1.02	1.24	0.98	0.93	1.02	0.85
음성	출생아수	1,240	754	841	756	772	670	538
	합계출산율	1.85	1.34	1.56	1.52	1.56	1.37	1.16
단양	출생아수	381	230	175	140	112	92	104
	합계출산율	1.45	1.25	1.23	1.23	0.99	0.83	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00년 충북의 합계출산율은 1.57명, 2005년 1,19명, 2010년 1.40명, 2016년 1.3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0년에 1.57명 대비 2015년에 1.41명, 2018년 1.17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보은군 1.58명으로 가장 높고, 영동군 1.58명, 증평군 1.51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2000년에 음성군 1.85명, 진천군 1.78명, 증평군 1.70명, 괴산군 1.69명의 순으로 높고, 2010년에는 증평군 1.77명, 청원군 1.66명, 진천군 1.64명, 음성군 1.56명의 순이며,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전국평균이 0.98명이었으나, 충청북도는 1.17명으로 평균보다 높다. 2018년 충청북도 시·군의 합계출산율은 보은군 1.59명으로 가장 높고, 영동군 1.58명, 증평군 1.51명, 음성군 1.56명, 진천군 1.33명, 제천시 1.19명, 청주시 1.17명, 충주시 1.16명, 단양군 1.0명, 옥천군 0.89명, 괴산군 0.8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충북 출생아수는 19,471명 중 출생아수가 많은 지역은 청주시로 8,796명이며, 충주시 2,652명, 제천시 1,634명이며, 청원군 1,474명, 음성군 1,240명의 순으로 나타남. 다만, 보은군 370명, 괴산군 406명, 증평군 473명, 영동군 581명의 경우 낮은 출생자수를 나타났다. 2018년 충북 출생아수는 10,586명 중 청주시 6,4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주시 1,155명, 제천시 755명, 진천군 545명, 음성군 53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합계출산율의 감소하는 이유는 생활습관, 비만의 증가 등 환경적인 요인과 저렴한 주거문제, 여성들의 유연한 근무시간제 문제, 보육시설 부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충북의 출생자 수는 2000년 19,471명에서 2019년 9,350명으로 2000년대비 2019년에 -51.9% 감소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2000년 10,272명에서 2019년 11,373명으로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연증감의 추세는 2000년대 이후 출생아 수의 점증적인 감소에 의해 자연증가는 둔화되었으나, 고령화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과 사망의 차이로 나타나는 자연증감은 출생아 수 추이와 함께 청주, 증평, 진천의 경우 출생자 수가 많으나, 특히 2016년 충북전체 출생아 수 가운데 청주의 출생아 수가 61.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청주, 증평, 진천, 음성을 제외한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Ⅱ-9〉 지역별 출생·사망

(단위 :명)

구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충북	출생	19,463	19,471	14,670	14,804	15,139	13,658	13,366	13,563	12,742	11,394	10,586	9,350
	사망	11,998	10,272	9,825	10,176	10,478	10,371	10,174	10,638	10,787	11,104	11,334	11,373
	차이	7,465	9,199	4,845	4,628	4,661	3,287	3,192	2,925	1,955	290	-748	-2,023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이와 같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맞이한 지역은 역외로 부터 인구를 유입해야 하겠으나, 출산율이 낮을 경우 인구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에 도래한 지역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기반시설 조성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7) 20-39세 여성인구와 합계출산율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전국평균 0.918명이었으나, 충북 1.050명보다 다소 높으나, 아래의 〈표 Ⅱ-10〉에서 보는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은 점증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충북 11개 시·군 중 증평군(1.426명)으로 가장 높고, 영동군(1.325명), 단양군(1.303명), 괴산군(1.152명)의 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음성군(0.92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20~39세 여성인구는 청주시(111,818명), 충주시(21,722명), 제천시(13,409명), 진천군(8,975명), 음성군(8,832명)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Ⅱ-10〉에서 지역별로 20-39세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낮다. 즉, 지역의 가임여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만혼화, 만산화에 의한 초산 연령의 지연, 난임 부부나 고위험 산모의 증가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표 Ⅱ-10〉 20-39세 여성인구와 합계출산율

구분	2010				2019			
	전체인구	여성 (20~39세)	비중(%)	합계 출산율	전체인구	여성 (20~39세)	비중(%)	합계 출산율
충북	1,549,528	207,100	13.37	1.402	1,600,007	183,706	11.48	1.050
청주	655,971	102,172	15.58	1.34	839,566	111,818	13.32	0.999
충주	208,481	25,964	12.45	1.346	210,737	21,722	10.31	1.054
제천	137,264	16,423	11.96	1.343	134,617	13,409	9.96	1.086
청원	152,944	20,746	13.56	1.657	-	-	-	-
보은	34,956	2,893	8.28	1.281	32,949	2,157	6.55	0.975
옥천	54,025	5,539	10.25	1.248	51,023	3,999	7.84	0.957
영동	50,523	4,847	9.59	1.45	48,738	3,864	7.93	1.325
증평	33,533	4,404	13.13	1.639	37,392	4,209	11.26	1.426
진천	62,094	7,479	12.04	1.242	81,084	8,975	11.07	0.945
괴산	36,827	2,948	8	1.562	39,163	2,667	6.81	1.152
음성	91,093	10,709	11.76	1.225	94,982	8,832	9.3	0.92
단양	31,817	2,976	9.35	1.773	29,756	2,054	6.9	1.303

8) 지역별 국제결혼

○ 충북의 국제결혼 인구는 2000년 308명, 2005년 1,088명, 2010년 1,023명, 2015년 639명, 2017년 639명, 2019년 762명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결혼자의 수가 많았으나,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국제결혼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사회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정책적 측면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II-11〉 충청북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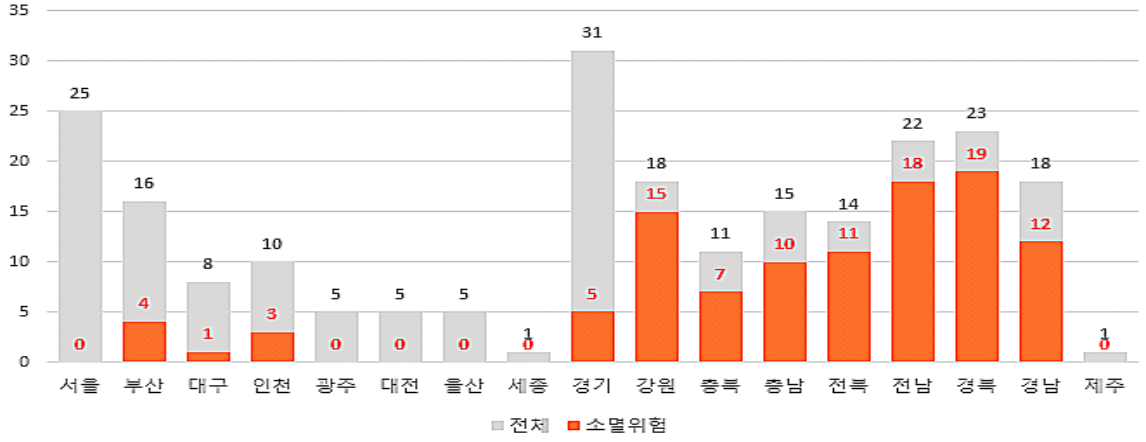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2000	308	80	47	26	36	16	15	15	22	18	13	8	12
2005	1,088	268	183	110	101	43	78	45	42	45	103	49	21
2010	1,023	329	135	91	111	31	55	30	63	33	97	22	26
2011	856	260	113	91	88	29	33	44	44	29	76	20	29
2012	801	247	93	70	97	23	34	33	63	25	78	19	19
2013	725	237	91	69	63	23	26	20	56	16	81	19	24
2014	660	257	96	58	-	11	38	27	53	16	73	11	20
2015	639	275	80	50	-	22	19	16	55	19	80	6	17
2016	666	277	82	47	-	20	21	37	56	19	70	14	23
2017	639	271	86	46	-	14	23	30	59	19	62	8	21
2018	766	335	100	55	-	13	30	26	58	17	94	15	23
2019	762	328	111	47	-	14	27	25	62	23	78	19	28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충청북도의 위기인가?

1) 지역소멸위기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은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호(2020)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 '19년 5월 93개에서 '20년 5월 105개로 증가"하였다. 전국 읍·면·동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17년 5월 1,483개(전체 3,549개)에서 '18년 5월 1,554개(전체 3,555개), '19년 5월 1,617개(전체 3,564개), '20년 5월 1,702개(전체 3,545개)으로 증가하였다. 충청북도 153개 읍·면·동 중에서 74개는 0.2 미만으로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11개 시·군 가운데 보은군(0.185), 옥천군(0.258), 영동군(0.243), 괴산군(0.180), 단양군(0.220), 음성군(0.437), 제천시(0.457) 등 6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천시는 새롭게 소멸위험 지역으로 진입하였다.



〈그림 II-3〉 지역소멸위험지역 현황

자료: 이상호. (2020), 재인용

○ 우리나라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2026년에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통계청(2020)의 2019년 기준으로 전체인구대비 가임여성(20-39세)들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급격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인구감소의 주요요인은 청년층의 대도시로 유출이다. 즉, 젊은층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한다. 젊은층 인구의 유출은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니라 미래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

○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하는 추세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인구감소는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로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인구수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대다수의 시·군은 인구 감소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군지역들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지역쇠퇴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과 함께 젊은층 인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표 Ⅱ-12〉 해외의 지방 인구감소 현상과 문제인식

구분	독일	일본	미국
현상	라인강 중심 대도시 인구밀집, 동독지역의 지방쇠퇴	농촌 및 대도시 주변(베드타운)의 인구감소, 대도시 밀집화	Rustbelt-Sunbelt, N/E to S/W, 교외화 (suburbanization)
문제인식 계기	80년대부터 지역 인구 발전에 관심, 통일 이후 본격화	총인구 감소, 마스다 보고서	디트로이트 등 일부 지역침체, 지역 불평등 문제(빈곤, 인종 등)
문제의 이해	지역평등성: 지역공동체의 붕괴	지방소멸로 인한 전체 인구감소의 위기 요인	일부 지역의 특수 문제
대응방식	중앙과 지방정부 + 민간 (demographic strategy)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 창생 전략	해당 지역 중심의 접근(특수성 강조), 전국화되지 않음

자료: Mallach, A., Haase, A., & Hattori, K. (2017). The shrinking c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trasting dynamics and responses to urban shrinkage. Cities, 69, 이상림(2018:29)에서 재인용

3)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1) 행정서비스 수준 저하

○ 출산율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행정서비스의 비중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감소는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주민 1인당 행정비용이 증가하여 지금까지 행정서비스가 유료화 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생활의 편리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지방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은 행정기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가 감소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행정서비스 최소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

(2) 주민생활서비스의 감소

○ 주민들이 일생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는 일정한 인구규모 이상으로 하며, 인구규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종류가 다르게 된다. 예를들면 의료·복지서비스는 시·군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규모가 일정한 수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구감소는 이러한 생활서비스의 입지에 필요한 인구규모가 되지 못할 경우 시장경제하에서는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은 운영되어야 한다.

(3) 대중교통의 감소

○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통근자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 통근자의 감소는 대중교통 운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로인해 지역의 쇠퇴를 발생하게 된다. 즉, 지역주민의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의 이용객이 감소하면 대중교통의 노선이 감소하거나 폐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은 더욱더 어려움이 예상

된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더라고 대중교통서비스 등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4) 빈집, 빈 상가 등의 증가

○ 인구감소는 소비활동이 감소되어 노후화된 건물이나 빈집, 빈 상가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인구감소에 의해 지역경제나 산업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집이나 빈상가 건물이 증가하면 지역경관의 악화, 치안악화, 화재 발생이라는 방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의 매력도가 저하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인구감소는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수립시 유휴 부동산 활용을 통한 압축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노후 공공시설의 유지

○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인프라 시설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프라시설의 노후로 인한 건축물 붕괴, 도로붕괴, 상수도 누수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6년 기준 30년 이상 된 주요 노후시설물은 2,274개로 전체의 10.3%에 달하고 10년 뒤엔 25.8%(6944개), 20년 뒤에는 61.5%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프라의 노후화는 그에 따른 인프라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국토매일, 2020.2.25.).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프라시설의 안전과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6) 지역교육의 붕괴

○ 인구감소는 지역사회교육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립대학교를 비롯하여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교육부의

’2020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601만 14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6,780명(2.1%↓)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는 3,276,327명으로 전년 대비 50,406명(1.5%↓)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 특히, 지역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사립대학은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로 인해 교육산업 전체가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기회와 대응

1)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기회

○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는 주민 1인당 이용 가능자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주민 1인당 토지이용면적이 증가할 수 있다. 토지이용량이 증가하면 현재 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Co^2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미래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문제의 해법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 첫째, 신산업과 지역공동체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들조차 수도권 혹은 해외로 이전하면서 최근에는 지역이 더욱더 쇠퇴하고 있다. 과거의 경제개발시대에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청년과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착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돋음하지 않고서는 인구가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세대들을 위한 의료·교육·복지·문화적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즉, 인구구조변화는 현재의 합계출산율을 고려할 때 인구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질 개선과 출산율 증가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출산율

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보육과 돌봄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삶의 질 개선정책은 지역에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주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젊은 층의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셋째, 지역차원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대도시와 고령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지역 내 농어촌 낙후지역에서의 고용서비스가 동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지역 간 경쟁을 방지하는 조정 역할 및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의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1) 인구구조변화에 ICT의 역할

○ 2018년 충청북도 640,978가구중 1인가구 204,109가구(31.8%)이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54,792가구(8.5%)이다(충청북도, 2020). 특히, 전체 가구중에서 노인가구 수의 비중이 적다고 인식할 수 있겠으나, 고령화의 속도를 고려하면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1인 가구의 비중이 31.8%를 고려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1인가구는 시간이 경과 할수록 노년층에 대한 돌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노년층의 돌봄비용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층에 비해 고령층이 인식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4차산업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은 고령층의 소외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세상은 더 손쉽고 편리해질수 있다. 그러나 노년층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점점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구조가 고령화 될수록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있어서 연령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고령화 문제에 ICT를 활용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Ⅱ-4〉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및 ICT의 역할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52)

(2)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

○ 인구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구조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문제는 단기간의 인구정책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단기적인 인구대응책을 포기하면 할수록 더욱 더 출생아수 감소 및 인구유출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인구정책은 인구구조와 거주지별로 주민들의 가치관과 선호도가 상이 할 뿐만 아니라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다.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자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 초래되기 때문에 원인과 해결책 간의 괴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문제를 현시점에서 초래하는 문제로만 인식할 경우에는 인구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 가능성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인구문제의 해결은 지역주민이나 지방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3) 미래세대를 위한 인구정책 기조 확립

○ 지방소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대응 수준이 달라질 것이지만 새로운 국면의 위기가 초래될 때마다 임기응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의 미래 예측역량을 높이고,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와 대안을 검토하여 한세대(30년, 최소한 20년)을 앞서서 정책믹스를 설계하는 정책기조 확립이 필요하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지방의 청년층이 대도시로 이동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 젊은 층 인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가까운 미래에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진학을 하고 있다. 즉,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지방에 거주하겠지만 지방에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으로 지방에서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III 장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변화와 전망, 대응전략

1 경제부문

1)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현황과 전망

(1) 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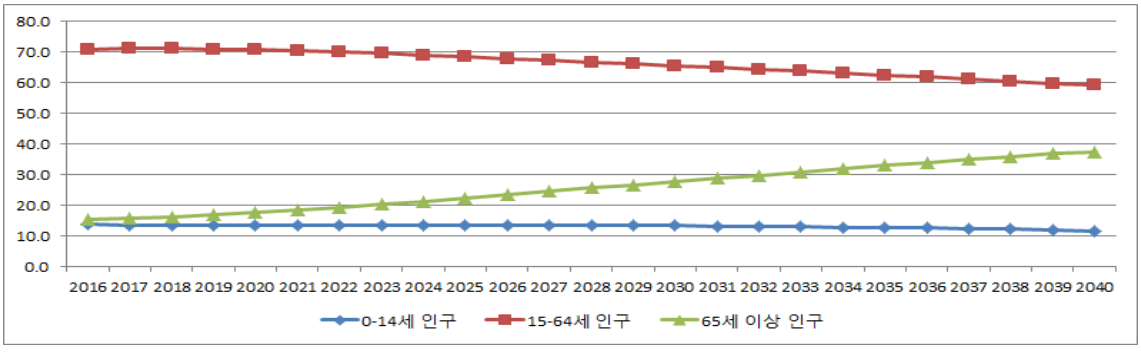
○ 통계청의 추계인구 전망 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지역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지난 2016년 71.1%에서 2040년에는 59.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Ⅲ-1〉 충북지역의 인구전망

(단위: 명, %)

구 분	2016		2040		증감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총인구	1,566,690	100.0	1,699,664	100.0	-
생산가능인구(15~64세)	1,113,358	71.1	927,830	59.2	11.8%p ↓
유소년인구(0~14세)	214,258	13.7	183,877	11.7	1.9%p ↓
고령인구(65세이상)	239,074	15.3	587,957	37.5	22.3%p ↑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그림 Ⅲ-1〉 충북지역 인구전망 추이

(2) 경제활동인구

○ 지난 2000년부터 최근 2019년까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과 충북 모두 경제활동인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15~`19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전국은 연평균 0.75% 증가하였으나 충북은 1.33%가 증가하여 충북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도 전국은 연평균 0.16%씩 증가했지만 충북은 연평균 0.31%씩 증가하여서 전국보다는 0.15%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2〉 전국 및 충북의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5-`19년 증가율
전국	경제활동인구	22,134	23,743	24,748	27,153	27,418	27,748	27,895	28,186	0.75
	경제활동 참가율	61.2	62.0	61.0	62.8	62.9	63.2	63.1	63.3	0.16
충북	경제활동인구	690	698	753	850	867	880	898	908	1.33
	경제활동 참가율	60.0	59.4	61.0	63.9	63.7	64.0	64.9	64.9	0.31

주: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인구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3) 산업별 지역총생산GRDP) 구조

○ 충북의 실질 GRDP는 2010년 이후 연평균 4.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18년 대비 66.1% 증가한 65.83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농림어업 부문의 실질 부가가치는 1.92조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광업은 0.22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실질 부가가치 총액은 29.83조원 규모이고,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제조업(13.57조원), 석탄 및 석유화학재품 제조업(5.77조원)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OC 부문에서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4.12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에서 부가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충북의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

(단위: 조원)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실질	실질	실질	실질	실질	실질	실질	실질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43.50	46.07	47.65	49.52	51.60	55.19	58.38	61.95	65.83
순생산물세		3.14	3.24	3.47	3.55	3.68	4.23	4.69	4.81	4.92
총부가가치(기초가격)		40.4	42.8	44.2	46.0	47.9	51.0	53.7	57.1	60.9
농림업	농업, 임업 및 어업	1.81	1.87	1.88	1.87	1.83	2.01	1.88	1.92	1.87
광 업	광업	0.21	0.00	0.20	0.17	0.16	0.16	0.20	0.22	0.24
제조업	제조업	16.55	17.98	18.57	19.70	20.96	23.11	24.56	27.11	29.83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1.91	1.95	2.13	2.36	2.31	2.38	2.49	2.61	2.57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제조업	0.38	0.37	0.36	0.40	0.40	0.39	0.30	0.31	0.31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0.70	0.82	0.89	0.79	0.84	0.84	0.89	0.80	0.80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3.61	3.62	3.64	4.06	4.23	4.92	5.43	5.30	5.77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2.33	2.44	2.59	2.74	2.90	3.36	3.57	3.90	3.80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5.65	6.60	6.95	7.10	7.79	8.79	9.32	11.46	13.57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2.03	2.22	2.03	2.29	2.52	2.43	2.55	2.78	2.96
SO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22	0.19	0.18	0.22	0.27	0.34	0.39	0.46	0.45
	건설업	2.98	2.75	2.70	2.72	2.67	2.79	3.27	3.57	4.12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1.60	1.77	1.94	2.02	2.05	2.11	2.11	2.17	2.20
	운수 및 창고업	1.19	1.23	1.27	1.32	1.37	1.42	1.46	1.45	1.51
	숙박 및 음식점업	1.02	0.97	0.98	0.97	1.00	1.01	1.05	1.05	1.11
	정보통신업	0.68	0.68	0.67	0.67	0.66	0.68	0.70	0.68	0.71
	금융 및 보험업	1.24	1.27	1.39	1.48	1.55	1.63	1.66	1.74	1.87
	부동산업	2.40	2.47	2.46	2.41	2.47	2.45	2.52	2.52	2.57
	사업서비스업	1.97	2.41	2.54	2.53	2.66	2.74	3.12	3.12	2.8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43	3.65	3.68	3.89	4.06	4.27	4.38	4.57	4.63
	교육 서비스업	2.59	2.70	2.79	2.87	2.95	2.94	2.95	3.07	3.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7	1.37	1.49	1.62	1.71	1.78	1.89	1.98	2.1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38	1.40	1.45	1.52	1.56	1.54	1.55	1.55	1.60

주: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변화

(1) 성장잠재력의 추락

○ 인구는 자본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이며,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나아가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수요처가 되기 때문에 인구 규모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거나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산업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고 생산소비 주체가 감소해 산업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인구가 2020년부터 고령인구로 편입되어 총부양비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면 총저축은 증가하지만, 고령화 추세로 인한 고령자의 비율 증가는 총저축의 감소를 초래한다. 총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조달 투자재원의 감소로 투자가 위축되고, 장기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게 되며, 성장 저하는 소비증가율을 감소시켜 산업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경제 상황이 나빠지게 된다. 대부분 연구에서도 2030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은 1.0%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마저도 인구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을 바탕으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인구 규모는 2020년 5,178만명에서 2060년 4,284만명으로 17.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GDP 성장률은 총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30년 이후 둔화하고, 2040년 이후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감소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에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노동의 경제성장기여도와 생산성의 저하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인적 역량 약화로 이어져 노동의 경제기여도와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모형을 이용해 생산연령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노동의 감소가 경제성장률의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요소 생산성이 일정할 때 노동의 경제성장기여도는 `10년 0.6%였지만, 2020년에는 -0.7%로, 2030년에는 -1.0%로 2020년 이후부터는 생산연령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OECD가 1,08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게 되고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노동생산성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이 평균 10%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1.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노동생산성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고령화가 진행되어 고령인구가 1.0% 증가할 때마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0.719%가 감소하고, 60세 이상 인구가 10.0% 증가할 때마다 GDP 성장률은 5.5%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3) 노후 소득의 불안정성 확대

○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평균적인 기대수명의 연장을 가져오고 있으나 지속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지만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불안정한 소득원은 소비위축으로 소비감소를 초래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소득은 전체인구의 소득 대비 65.1% 수준에 불과하고 OECD(평균 87.4%)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 66세 이상의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70%에 미달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66.1%)와 한국(65.1%)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의 심화는 노인에 대한 부양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노년부양비 상승과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담 증가

○ 지속적인 저출생·고령화의 심화는 노령계층의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인 부담과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으로 유지되면 이탈한 생산연령인구만큼 신규인구가 진입하기 때문에 노년부양비에 변동이 없지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생산연령 이탈이 신규진입보다 높아 노년부양비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4~2020년 동안 합계출산율의 하락으로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점차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진입하고,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명 이상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기대여명의 증가로 고령자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반전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노년부양비의 사회적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해야 할 조세,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사회적으로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현역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는 현역 세대인 청장년층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권자의 증가는 연금재정 위기를,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재정 보험 불안 등으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저출생·고령화는 지역의 인구기반을 저해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활력 저하를 초래하고, 사회적 총부양비 부담 증가와 복지재정 수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환경의 변화

○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산업 인력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산업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인력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장자동화와 산업혁신 가치의 반영을 위한 제조업의 고부가 서비스화가 활성화되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산업인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산업영역 전반에 걸쳐서 자동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산업구조 자체의 고도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해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종사자들의 직무교육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직무역량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성장 시기에 조성된 기존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은 인구감소나 고령화와 함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산업경제시설의 피폐화와 지역산업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존 산업단지의 리모델링과 노후산업단지의 혁신사업을 통한 첨단산업단지로의 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산업단지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과학기술 혁신기반 중심의 스마트 경제화 급진전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는 기존 전통 산업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과학기술산업의 육성과 경제 혁신의 활성화가 추진되어 다양한 성장유망 신산업의 출현과 전문화된 과학기술인력의 투입으로 대체되어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경제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존 전통산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급진전 될 가능성이 있고,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대체가 촉진되어 디지털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감소는 기존 노동력 중심의 단순한 경제기반산업을 쇠퇴시키고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의 혁신형 연구소기업과 산업의 출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기반과

경제시스템도 인력투입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점차 지능형 디지털 산업경제 시설과 융합과학 기술기반의 지식경제 시스템으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스마트형 공장, 스마트 농장 등 산업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융합적인 과학기술이 접목된 혁신기업과 혁신산업단지가 출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분야 대응전략

(1) 생산연령인구의 적극적인 확충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노동력의 부족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경제 현장에서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지역의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확충해 나가는 전략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의 정년연장은 산업 성격이나 직업의 형태, 기업 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단지 연령을 기준으로 강제 퇴출이 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이나 문화생활 여건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연령인구의 적극적인 확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첫째, 정년연장의 적극 검토는 액티브 고령층의 노동력 공급으로 실질적인 생산연령인구를 증가시켜 사회적 지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이나 법적인 정년은 60세이므로 정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실질적인 노동 공급 증가가 가능해질 수 있고 고령층의 소득보장으로 공적연금의 급여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금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이 동시에 추진되면 고령층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내 기업체 및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험지식이 필요하고 숙련된 기술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정연연장이 가능한 영역과 지식기반경제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충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 청년층 선호 산업경제기반의 적극적인 지역 유치와 확충전략의 모색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생산연령인구의 지역 유치와 확충을 위해선 그 핵심인 청년층의 적극적인 유입이 가능한 경제기반과 생활환경을 확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일자리를 얻어 입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층의 입직연령이 늦어지면 만혼과 비혼이 많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게 되므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청년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과 확충을 위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능력에 따라 임금보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전략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인구의 유입 확대와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단기간에 생산연령인구의 확충으로 노동력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젊은 연령대의 해외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전략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는 노동시장에 즉시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연령대의 애외인구가 유입되는 경우 단기적인 생산연령인구의 공급이 가능하고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5.0%를 해외인구로 유입시킬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상쇄는 물론 경제성장률을 2030년에 2.1%, 2040년에 0.7%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인구를 유입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면 일시적인 이민보다 정주형 이민의 경제적 영향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적극적 관리와 함께 농촌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확대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2) 생산성 향상 및 제고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산업·경제적 생산성 저하를 막고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훈련과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를 인구감소의 대응 전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인구감소의 부정적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과 외부적 인구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면 인구감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기존 노동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와 함께 지역의 산업경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의 확충과 육성을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과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 산업 경제의 자동화와 지능화, 디지털 스마트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동화와 지능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의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한 국가들은 고령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와 첨단과학 및 로봇기술 등의 확산은 기존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미가입 사각지대와 짧은 가입가간 등으로 연금수혜액이 낮아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고, 개인연금 적립자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및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운용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저연령층일수록 개인연금 적립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령별 및 소득수준별 세제혜택의 차등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산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 계층은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노후 대비에 현금지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활성화하는 전략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가급적이면 중도해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액티브시니어들의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맞춤형의 고령친화 산업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형태의 실버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전략의 고려가 필요하다.

(4) 지역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 추진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산업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선 지역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저기술 산업 및 기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기술 제조업 부문의 경우에 향후 수요감소가 예상되므로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과 고도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저기술의 전통제조업의 과감한 구조전환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전략의 강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산업경제 수요가 증대되어 성장이 예상되는 보건복지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공급기반 마련과 적극적인 육성을 도모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둘째, 고기술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인력공급 강화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산업영역이나 업종별로 노동격의 부족과 과잉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산업 인력의 적절한 수급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고기술 제조업과 상당수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 인력공급과 고용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기에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수급전략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제조업 부문의 빠른 산업구조 조정과 수요감소가 예상되므로 탄력적인 보완전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5) 과학기술 기반의 고부가 산업경제 및 지식정보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

○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대규모 기반시설의 전통산업에서 탈피하여 중소규모의 고부가 혁신산업경제 구조로의 변화와 지식정보기반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첫째, 고부가 산업 및 지식정보기반 서비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융합 신기술 기반의 고부가 두뇌기업이나 연구소기업 및 지식정보기반의 R&D 서비스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육성하여 첨단혁신형 산업경제로의 지역경제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고령친화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도래는 필연적으로 장수사회에 걸맞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고령친화 성장유망산업을 통한 지역산업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업의 경우에는 사적연금 시장 확대로 자산운용업의 성장과 재무설계사 직종의 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수요의 증가는 노화를 늦추거나 완화하는 제품과 서비스 중심의 고령친화 항노화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액티브 시니어 및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U-Health 의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친화 관련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인 다목적 여가산업, 정신건강 케어산업, 사회봉사 지원산업, 스마트 실버산업 등 미래 성장유망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그레이마켓(Gray market) 시장 육성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는 삶의 방식과 주거형태 변화를 가져와 개인화, 1인 가구의 증가와 노년의 외로움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수요를 증가를 초래해 이를 겨냥한 그레이마켓 신산업이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산업의 개척과 육성도 바림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은 지방을 중심으로 3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가족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가족중심의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차로 30분내 거리에서 따로 거주하는 변형된 느슨한 대가족 주거형태가 생겨나 세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주거산업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것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지역산업 경제의 활력 증진과 강화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기존산업의 쇠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생산가능인구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고착화 시켜 지역 활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적정인구 유지로 지역산업 경제의 활력을 증진해 나가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산업 경제의 활력 증진과 강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투자유치 대응책의 적극적인 강구가 필요하다.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강화는 양질의 일자리 지속 창출과 지역소멸을 최소화하고 생업 유지가 가능한 맞춤형 지역적합의 산업 육성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중소형 투자유치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나갈 필요가 있다.

○ 둘째, 지역자산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늦추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터와 지역에서의 생업 유지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부존자원과 자산 등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고유의 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상품화·산업화를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가칭) 충북자원 디스커버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가업 형태나 마을 단위로 전수되어 오고 있는 전통 기능과 자산 등의 지역 어메니티를 산업자원화으로 활용하고 비즈니스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전통의 정체성, 전통성을 활용한 기반자원의 명품화 사업추진 강화와 지역연고사업의 재가치화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치극대화와 장소마케팅을 통한 방문객 및 사회적 유동인구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관광개발자원으로 활용go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지역 유휴 공간자원 및 노후시설의 재활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는 무조건적으로 신규시설을 확충하기 보다는 유휴공간 및 노후시설의 재활용 및 재생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민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사회적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지역수요중심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간 및 시설로의 재활용과 경제자원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시설 및 공간의 재정비로 무조건적 채우기가 아닌 비우기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유휴공간 및 시설의 재생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청년층 인구의 유입을 위한 생활기반으로 활용해 나가는 전략 모델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7) 포용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지역경제공동체 기반의 활성화 촉진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개인주의의 팽배로 지역공동체 기반이 무너지면서 지역에서의 소통이 단절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 고립되고 소외된 지역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경제적 생활이 피폐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포용기반의 성장발전이 가능한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전략의 강구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공동체성의 회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촉진은 물론 적극적인 공동체 조직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생활권 단위나 특정 주제의 관심영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 추진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화된 삶의 방식은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과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 참여 및 지역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전략 기반의 일환으로 각 시·군별로 지역경제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따로가 아닌 함께 상생하고 포용성장을 이뤄가는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사업으로 활용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와 모델의 사회적경제 지역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더불어 지속적 컨설팅 지원을 통한 공유경제기반의 지역경제 상생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8) 지역 산업경제정책의 혁신과 콤팩트형 경제조직기반 강화

○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존 정책의 고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며, 전략적 대응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새로운 글로벌 메가트렌드 시대에는 보다 혁신적인 지역 산업경제 정책의 추진과 콤펙트형 경제조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글로컬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고려한 지역산업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의 지역경제 정책은 인구성장을 전제로 경제성장 및 인프라를 지향하는 분산형 정책이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시대의 지역경제 정책은 저성장과 인구감소를 전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지향하는 스마트 축소형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의 경제발전정책이 무차별적 경쟁을 통한 소외와 배제의 정책이 중심이었다면 미래에는 포용과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산업경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둘째, 콤팩트 스마트형 융복합경제 조직 운영을 고려해 나가야 한다.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전개되는 융복합경제 시대에는 지역의 산업경제 정책 추진 조직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의 혁신적인 경제조직으로의 획기적 전환과 창의적 모델시스템의 발굴과 접목 추진이 필요하다. 오늘날처럼 복잡다기하게 얽힌 산업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칸막이 중심의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조직형태로는 해결이 불가하므로 보다 콤펙트하고 스마트한 형태의 융복합적이고 유연한 경제조직으로의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서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경제 혁신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패키지형 네트워크 조직 운영과 상시적인 유연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산업경제 조직기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셋째, 콤팩트 산업경제 비즈니스 단지의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에 무조건적으로 대규모 산업경제 비즈니스 단지 조성을 무리하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규모는 다소 작더라도 기능적으로 집적화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혁신형 모델의 산업생산 및 경제비즈니스 단지의 조성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콤팩트 시티 개념의 `콤팩트 스마트형 비즈니스 직접화 단지` 형태의 산업경제 생산과 비즈니스 활동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지역에 적합한 형태의 다양한 모델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청년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기반 확충

○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등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간에 청년과 고령자들을 위한 산업경제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계획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청년과 고령자 수요를 반영한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정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고 원격의료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등으로 산업경제적 육성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의 종사업체도 복지분야만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규모도 영세하여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역차원에서 청년 및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지원전략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청년 및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 및 고령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의 육성기반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고, 필요하면 충북고령친화산업 육성조례의 제정과 충북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청년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및 고령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한 '리빙랩'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청년 및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우선구매 및 아이디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의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셋째, 청년 및 고령친화산업 중심의 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청년들을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선호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산업 경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사회적 경험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중년계층의 액티브시니어들이 함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산업경제 활동 무대를 확충해 나가는 전략의 추진도 바람직하다.

○ 뿐만아니라 고령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성장유망산업인 욜드산업 분야(보건의료 케어, 주거, 식품, 여가, 금융 등)의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고려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권역별로 필요하다면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 또는 융합(청년+신중년)세대 산업혁신센터 등도 마련하여 이들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10) 인구변화 유형별 맞춤형 지역산업경제 정책의 추진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산업경제 정책은 인구증가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같을 수는 없으며, 차별화되고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인구증가지역과 감소지역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의 추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구증가지역의 지역산업정책은 미래 신수요 중심형 전략산업의 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구증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잠재적 미래수요 충족을 위한 성장유망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두뇌서비스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에서 중심으로 삼을 수 있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 신수요 창출형의 혁신과학기술산업, 지식·창업 중심의 벤처산업, 고령친화 복지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형 문화여가 콘텐츠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빠른 시장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1인 가구 및 고령친화형의 복지·의료서비스 중심의 미래 신산업 수종의 확충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속성장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인구증가 지역도 시간적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지역기반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으므로 이들 산업이 지역특화 전략산업으로 성장되고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의 유도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특화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충과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 위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집적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혁신정책 지원전략 마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아 같은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국내외적으로 시장의 외연적 확산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진흥센터의 건립과 운영 등을 지원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인구감소 지역은 대체 전환산업의 지원과 귀농·귀촌·귀향 창업 지원, 지역 부존자원 활용 및 전통지식의 사업화 활용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통적 지역기반산업의 붕괴와 쇠태를 초래하여 지역의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 계층의 참여가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이나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새로운 대체산업의 육성과 산업전환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이다. 이를 위해서는 쇠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산업구조 전환 정책과 대체산업 육성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쇠태산업의 대부분은 산업경쟁력 상실과 인건비나 인력공급의 부족에서 초래되는 요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이 바람직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저개발국 노동인력의 원활한 유입으로 공급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인구감소 지역은 절대적인 사회적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데드크로스로 인한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베이비부머 은퇴세대 및 청년 농촌창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귀논·귀촌 인구유입의 지원책 강화와 청년 농촌 귀향창업 지원정책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잠재적 귀농·귀촌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귀농과 귀촌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귀향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농산업 귀향창업 공간 마련 지원과 공동작업장 등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 또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대체로 고령자 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서 이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 사장되고 노후화 되고 있는 전통시설자원 및 지식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지식정보 및 자원의 산업화 및 사업화 지원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전통지식정보의 자원화 사업 및 지역 전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전통기반산업 지원 플렛폼을 구축하고 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장되고 있는 물건이나 시설, 경험 등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지역산업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지역전통지 자원은행을 구축하고,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지원이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노동부문: 충북 사회의 구조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들어가며

(1)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따른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 변화

○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취업 인구의 노동생산성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 및 저축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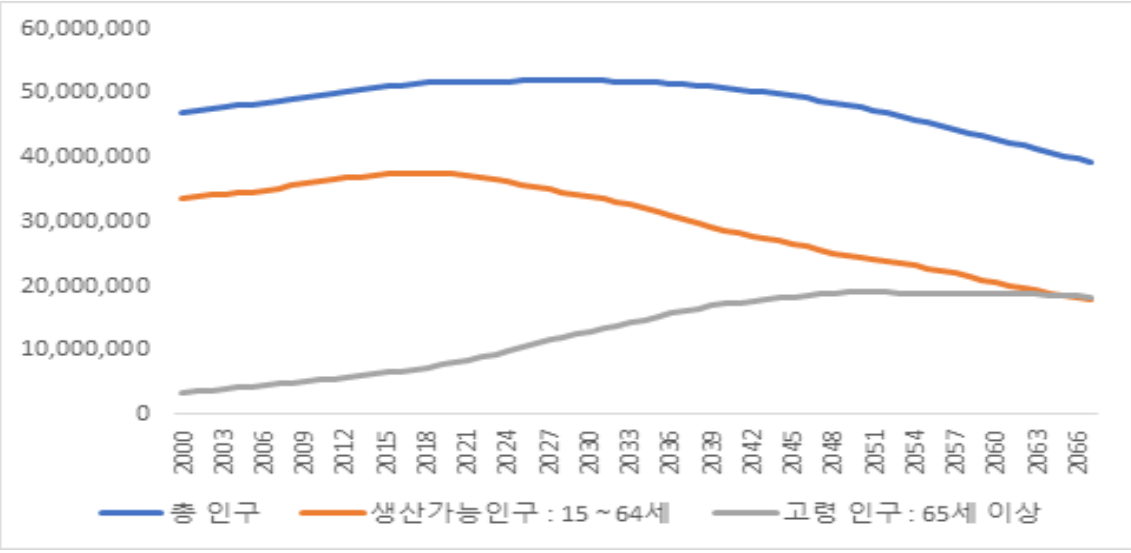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란 지역 또는 나라 전체의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은 줄어들고,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확정]」에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5]은 0.92명으로 나타나 지난 2018년과 비교하여 0.06명 감소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2018년 기준 OECD 합계 출산율 : 평균 1.62명)

○ 저출생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3년에 약 12%를 기록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uety)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2025년에는 약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post-aged socuety)에 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Ⅲ-2〉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의 양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5)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2000년 3,394,896명에서 2050년 19,007,129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50년 이후 저출생 심화에 따라 인구 전체가 감소하며 고령 인구 역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00년 47,008,111명에서 2028년 51,941,946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9년에 접어들며 총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2028년 대비 1,348명 줄어들며 2029년 총 인구는 51,940,598명에서 2067년 39,293,827명까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매우 증가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불가피하게 감소할 것이며, 200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33,701,986명에서 2018년 37,645,085명으로 완만히 증가하였지만 2010년 초·중반 시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2019년 이후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Ⅲ-2〉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명)

주: 각 해 자료는 중위 추계에 따른 값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저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CAGR)[6]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3.44%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고령 인구 역시 205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6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0.22%를 기록하였다. 저출생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총 인구,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2029년부터 2067년까지 총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71%로 2000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이후 206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51%로 감소 폭이 매우 크며, 이미 현 시점에서 부터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2000년~2067년 우리나라 인구구조 연평균 증가율(CAGR)』

- 고령 인구 : 2000년~2050년 연평균 증가율(CAGR) = 3.44%
- 고령 인구 : 2051년~2067년 연평균 증가율(CAGR) = -0.22%

- 총인구 : 2000년~2028년 연평균 증가율(CAGR) = 0.34%
- 총인구 : 2029년~2067년 연평균 증가율(CAGR) = -0.71%

- 생산가능인구 : 2000년~2018년 연평균 증가율(CAGR) = 0.58%
- 생산가능인구 : 2019년~2067년 연평균 증가율(CAGR) = -1.51%

(2)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따른 충북지역의 노동 공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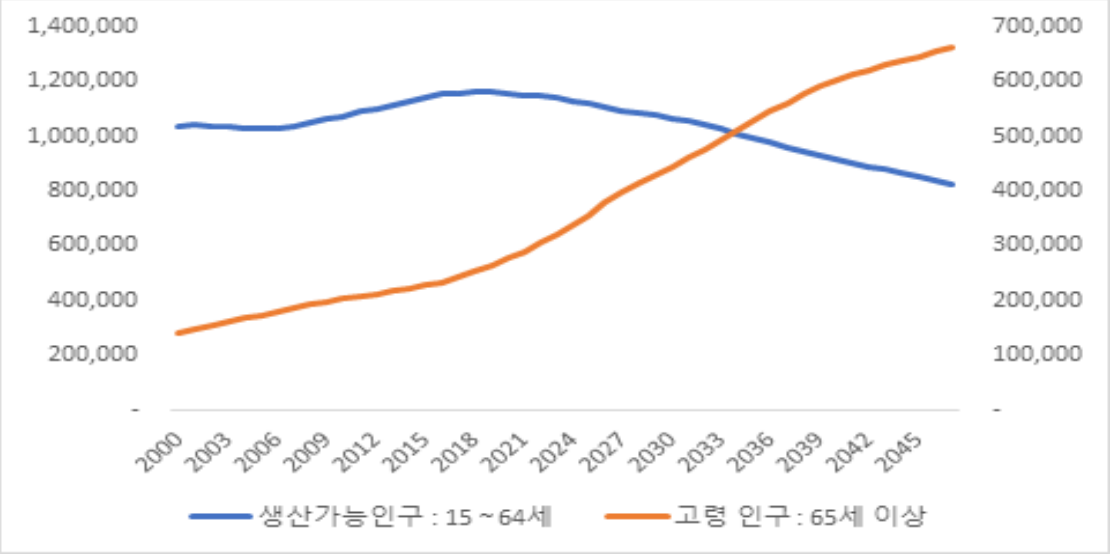
○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그 나라의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추이는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충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구 고령화 추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앞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6) 연평균 증가율(CAGR)은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즉, 기하 평균) 평균 성장률을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그림 Ⅲ-3〉는 충북의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장래인구추계[7] 2000년~2047년 기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 143,000명에서 2047년 664,000명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2047년 기간 동안 각 해의 전년비 증감은 평균 11,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충북의 고령화 추이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1,038,000명에서 2001년~2005년 기간 동안 각 해 전년비 증감은 평균 4,000천 명 감소하였고, 이후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해보면(전국 생산가능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 충북은 보다 이른 시기인 2020년에 접어들어 2019년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4,000명 감소하고, 이후 2047년까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충북은 2005년에 이미 고령 인구 비율은 약 12%를 기록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매우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이후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2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7) 장래인구추계 : 주1) 2019년 6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주2)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임, 주3) 작성 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는 인구임, 주4) 1970년~2017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 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주5)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2012년 충남과 충북의 인구에는 세종시로 편입된 인구가 제외됨, 주6) 중위추계(기본축))는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 고위추계(최대인구추계)는 출생-사망-국제이동 고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 저위추계(최소인구추계)는 출생-사망-국제이동 저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 무이동추계는 출생-사망 중위가정과 국제-국내이동 무이동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그림 Ⅲ-3〉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따른 충북의 인구구조 변화(명)

주: 각 해 자료는 중위 추계에 따른 값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다음으로 2000년~2047년 기간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충북의 인구구조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선 충북의 고령 인구는 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약 3.25%로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는 전국(연평균 증가율 3.63%)과 비교하여 다소 낮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 충북의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에 들어서 각 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0.56%와 비교하여 2020년~2047년 생산가능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70%로 저출생과 고령화 추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2000년~2047년 충북 인구구조 연평균 증가율(CA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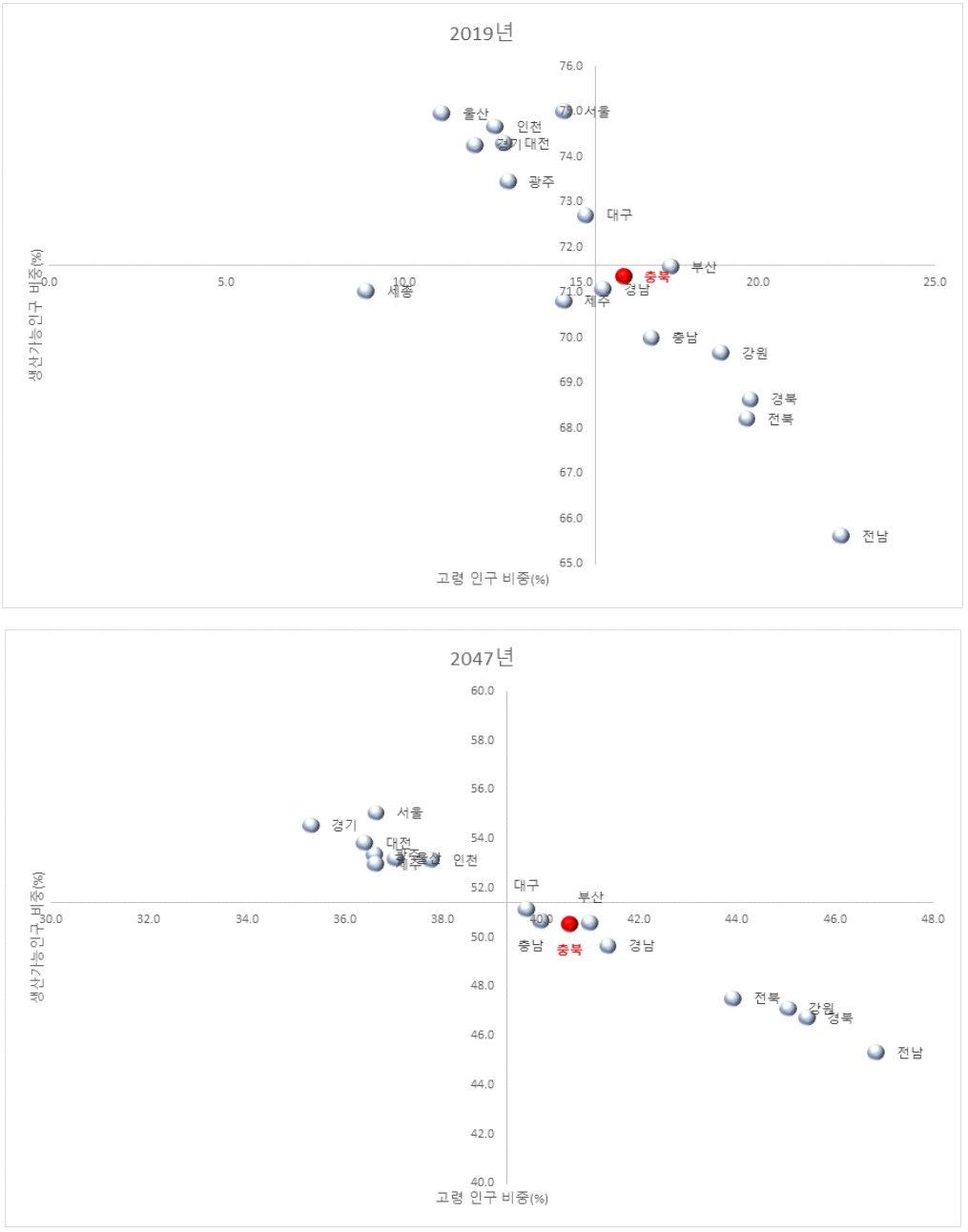
- 고령 인구 : 2000년~2047년 연평균 증가율(CAGR) = 3.25%
- 생산가능인구 : 2000년~2019년 연평균 증가율(CAGR) = 0.56%
- 생산가능인구 : 2020년~2047년 연평균 증가율(CAGR) = -0.70%

○ 〈그림 Ⅲ-4〉는 2019년과 2047년 각각 17개 시도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 인구 비중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추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9년 기준 충북의 고령 인구 비중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위치는 전국과 비교하여 고령 인구 비중 평균 15.4% 보다 높은 16.2%를 기록하였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71.6%와 비슷한 71.4%를 유지하고 있다.

○ 앞으로 전망되는 2047년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고령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39.3% 보다 높은 40.6%,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51.4% 보다 낮은 50.5%로 전망되었다. 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전국 17개 시도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고령화 추이와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간 수도권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충북은 고령 인구 비중이 더 높고, 저출생과 더불어 총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사회는 물론 충북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성(2008)[8]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는 소비와 생산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소비 측면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 보험 등이 성장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요소 투입량, 생산성, 등이 변화할 것이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충북의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 경제의 생산성(산출량)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2절에서는 충북의 노동생산성과 고령화 및 여러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3절에서는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통해 계량 모형을 활용하여 충북의 인구 고령화가 1인당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 4절에서는 요약 및 고령화에 따른 충북의 경제성장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8) 이영성(2008),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림 Ⅲ-4〉 시도별 고령 인구 비중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주: 각 해 자료는 중위 추계에 따른 값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충북지역의 고령화 사회와 노동생산성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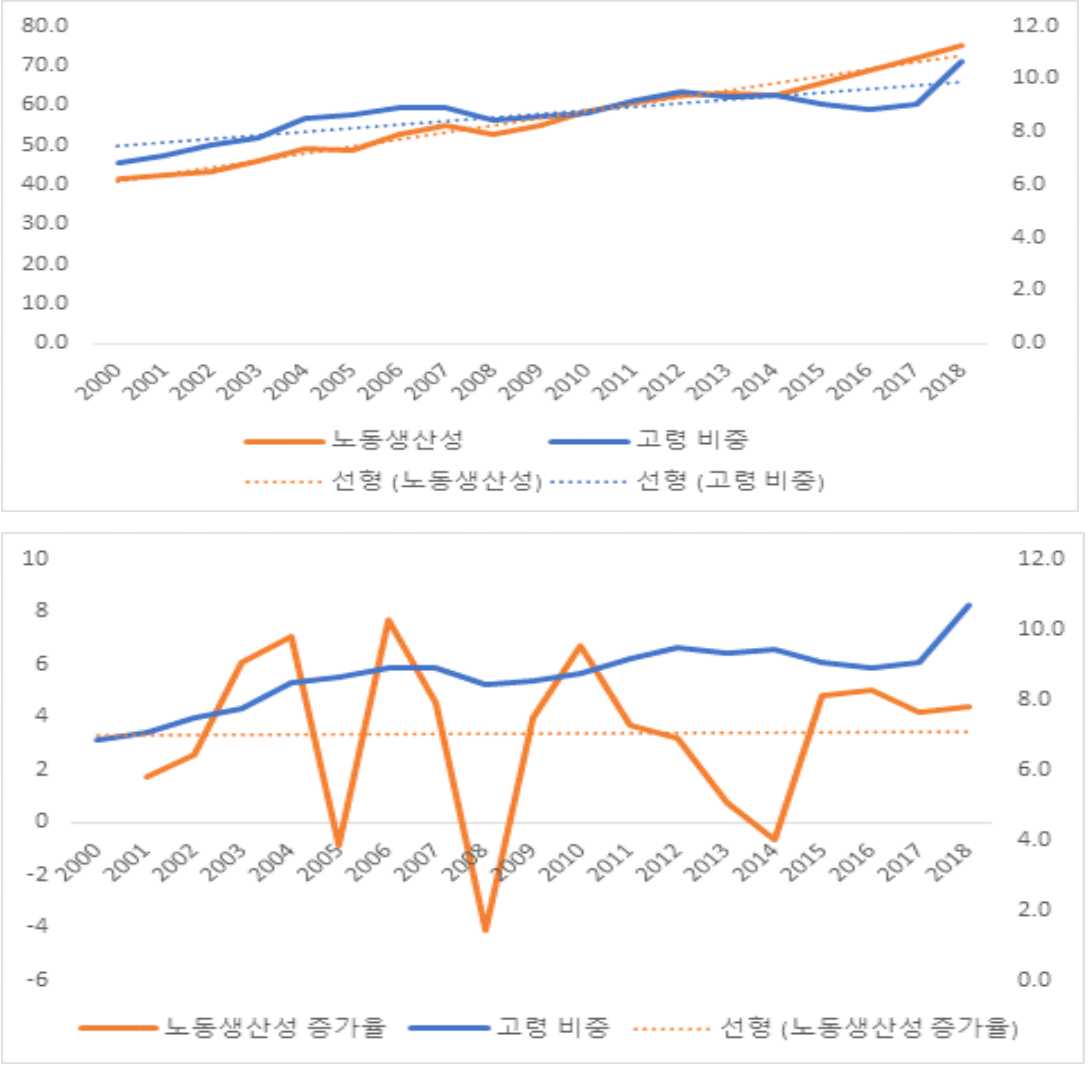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변화

○ 본 연구는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사회가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 중 경제의 생산성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산율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향후 전체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에 생산가능인구 역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인구구조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고령 인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 비중의 증가는 한 지역,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노동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연령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는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로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근력이나 육체적인 능력이 저하되므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 둘째, 일정 이상의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의 인식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적 측면으로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험과 인적 자본이 축적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강화되어 개인의 노동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다.

○ 〈그림 Ⅲ-5〉는 2000년~2018년 기간 동안 충북의 고령 비중과 1인당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보여준다. 충북의 각 해 고령 비중은 매년 충북 내 전체 취업자 수 중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1인당 노동생산성은 각 해에 충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해당 연도의 취업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충북의 고령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8년 10.7%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노동생산성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는 물적 자본, 즉 한 나라의 자본량 구성 및 변동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다루는 실증분석에서 1인당 자본량을 통제하여 고령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 고령 비중의 증가 추이로 충북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증가·감소를 반복하며 전반에 걸쳐 전년비 증가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 위기 기간 전년 대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감소하였고, 2015년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증가하지만 2018년에 고령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다시 감소한다.



〈그림 Ⅲ-5〉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고령 비중 변화 추이(백만 원, %)

주: 노동생산성 = 충북 GRDP / 취업자 수(단위: 백만 원), 고령 비중 = 65세 취업자 수 / 전체 취업자 수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

(2)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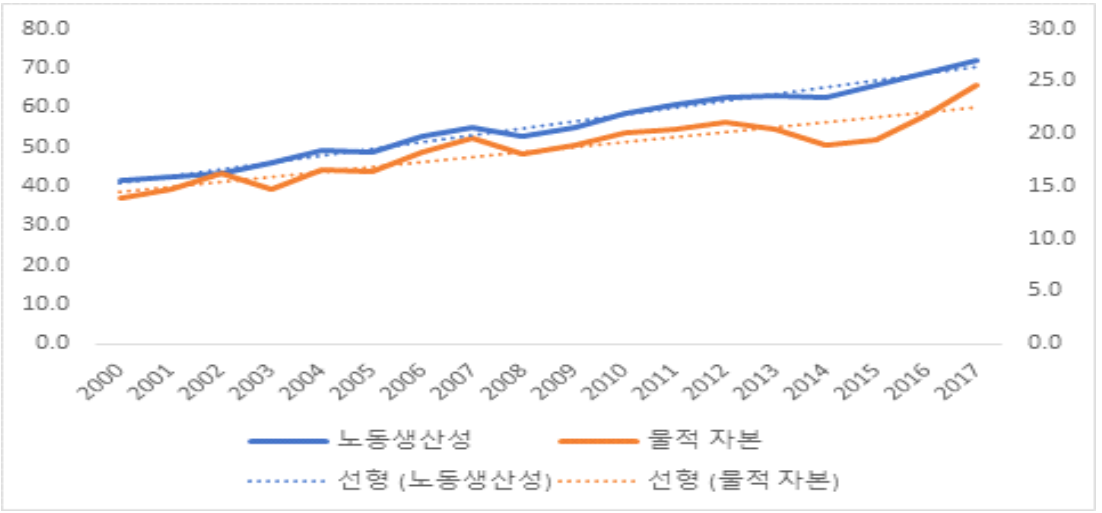
○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의 영향을 대변하는 고령 비중 외에도 충북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요인을 살펴보자. 우선 물적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는 기계, 건물 등 생산 설비에 필요한 생산요소로 한 지역 또는 한 나라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로 인적 자본을 고려한다. 인적 자본은 사람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의 자본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 다음으로 충북 경기의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생산성을 통제해주기 위해 실업률 변수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용직과 임시직 변수는 이원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노동생산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충북의 상용직 비중과 노동생산성간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① 노동생산성과 물적 자본간 관계

○ 한 지역 또는 한 나라의 자본 축적으로써 자본량의 증가는 고용량 증가와 더불어 노동력 1인당 자본량을 의미하는 자본집약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물적 자본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본재 형태별 총자본형성」의 총고정자본형성 항목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총고정자본형성을 그 해의 전체 노동자수로 나누어 1인당 자본량으로 계산하였다.

○ 다음 〈그림 Ⅲ-6〉는 2000년~2017년 기간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1인당 자본량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충북 1인당 자본량은 2000년~2017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3.3%로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충북지역의 1인당 자본량 증가와 더불어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2017년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00년 대비 약 30.4백만 원 증가한 72.0백만 원 수준으로 2000년 대비 2017년에 약 73.2%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동기간 1인당 자본량은 78.2%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 약 24.7백만 원 수준으로 2000년 대비 10.8백만 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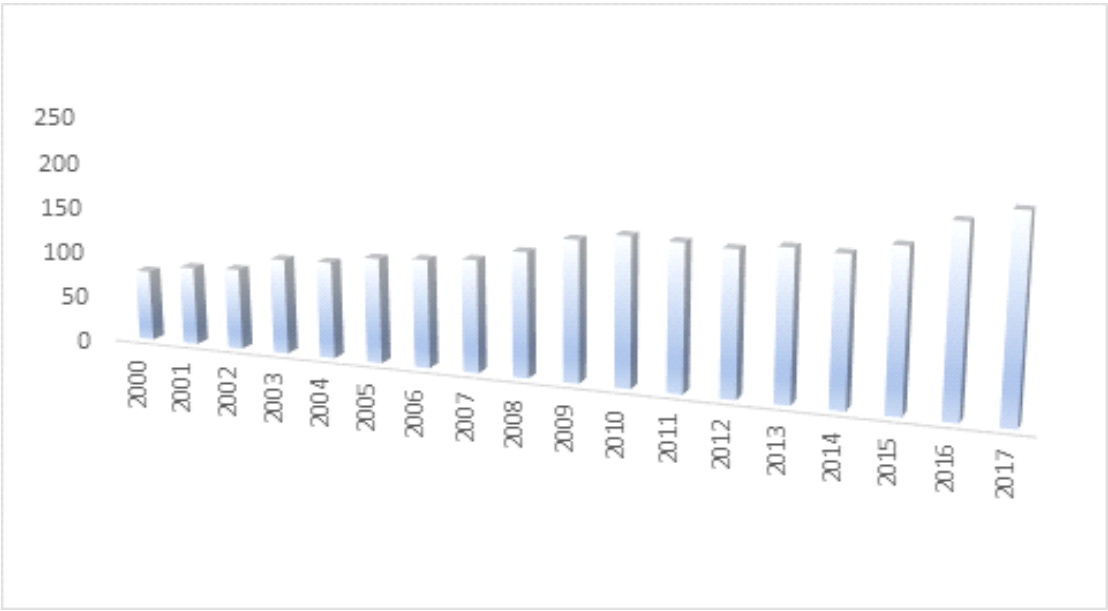
〈그림 Ⅲ-6〉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1인당 자본량 변화 추이(백만 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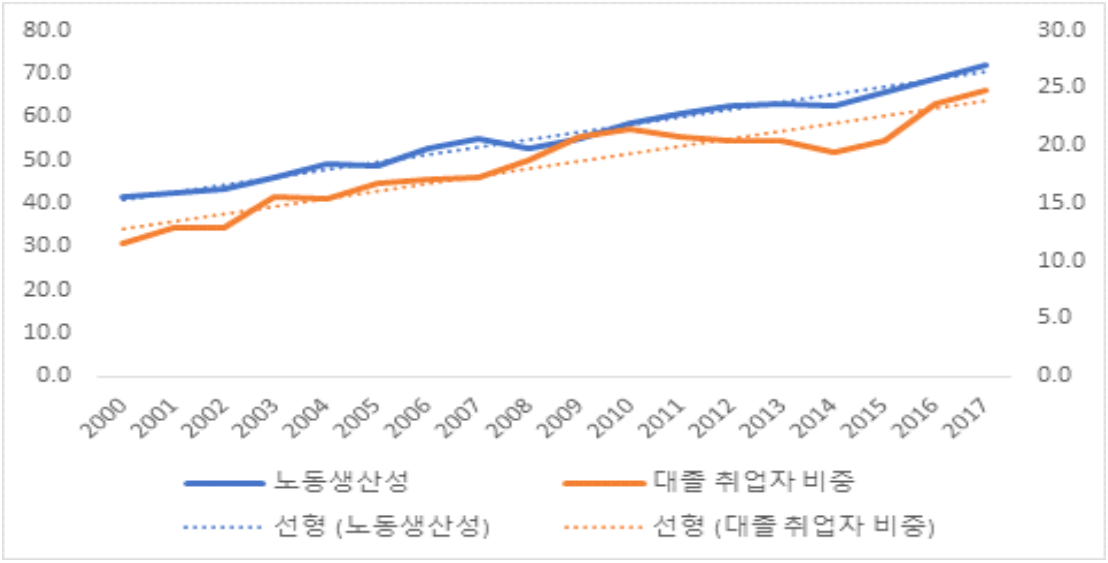
②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본간 관계

○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 경제학자들인 슐츠와 베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쓰인 인적 자본이란 용어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그 경제적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은 인적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 더 높은 생산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인적 자본은 충북의 전체 취업자 수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취업자 수의 비중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그림 Ⅲ-7〉은 2000년~2017년 기간 동안 충북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근로자 수를 나타낸다. 2000년에 약 77천 명에서 매년 시간 경과에 따라 2005년에는 114천 명, 2010년 160천 명, 2015년 172천 명, 2017년 214천 명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2017년 기간 동안 충북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Ⅲ-8〉은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자본을 대리하는 변수로 2000년~2017년 기간 전체 근로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근로자 수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 기간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근로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근로자 수의 비중 역시 2000년 11.6%에서 2017년 24.9%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9)]



〈그림 Ⅲ-7〉 충북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근로자 수 변화(천 명)



〈그림 Ⅲ-8〉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근로자 비중 변화 추이(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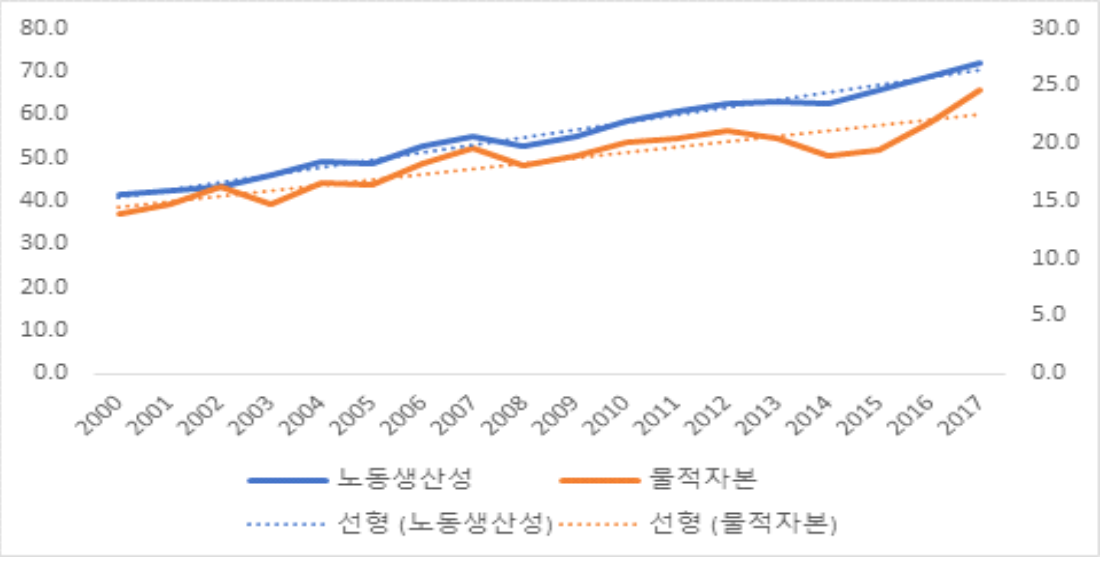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

9) 전 기간 중 특히 2013년 대비 2014년 전체 근로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근로자 수의 비중은 약 1.2%p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2014년 이후 전반적인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대부분 산업 미스매치 및 노동수요 부족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③ 노동생산성과 실업률간 관계

○ 한 나라의 생산성 또는 산출량과 실업 사이에는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안정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오쿤의 법칙(Okun's Law)[10]라고 부른다. 충북 경기의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달라지는 1인당 노동생산성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실업률을 이용하였다.

○ 다음 〈그림 Ⅲ-9〉는 2000년~2018년 기간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실업률 간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충북은 IMF 외환 위기 이후 2000년 실업률은 3.6%를 기록하였고, 전국 평균 4.4%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였다.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2005년 2.4%, 2010년 2.2%, 2015년 2.6%, 2018년에는 2.5%로 2000년과 비교하여 1.1%p 하락하였다. 오쿤의 법칙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충북은 전 기간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며, 안정적인 고용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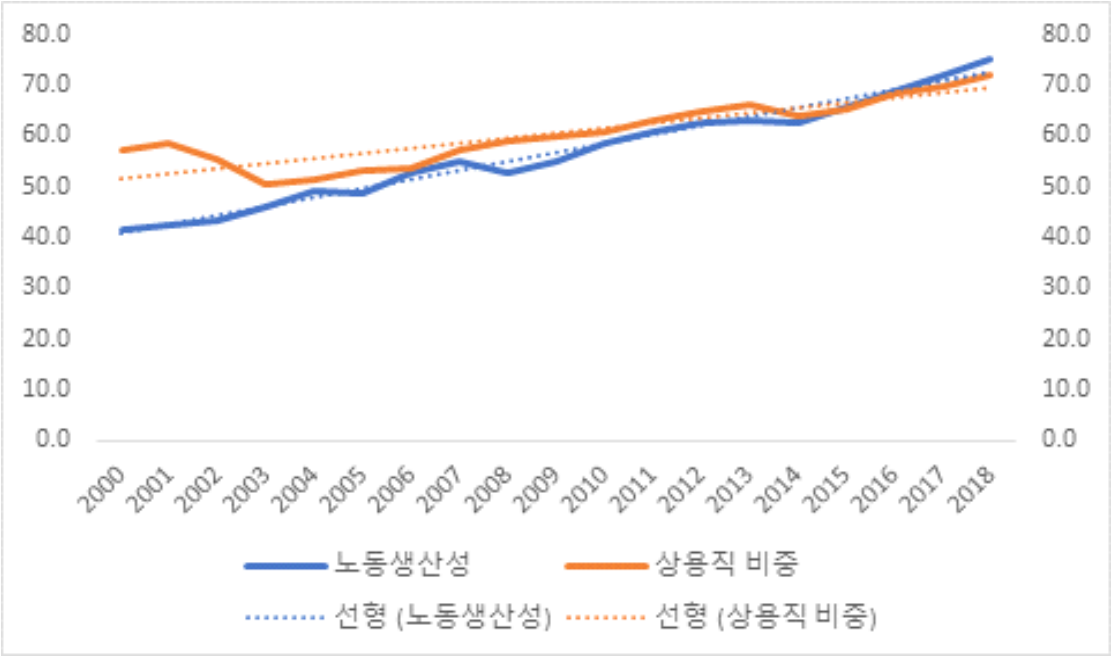
〈그림 Ⅲ-9〉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실업률 변화 추이(백만 원,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

10) 오쿤의 법칙(Okun´s Law)은 미국의 경제학자 A.오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971년~1998년 사이에 실업률이 1%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3.6%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④ 노동생산성과 상용직 비중간 관계

○ 상용직은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임금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상용직·임시직 고용 비중의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용직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증대된다고 분석하였다.[11] 〈그림 Ⅲ-10〉은 2000년~2018년 기간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상용직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충북은 2000년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은 약 57.4%로 나타났으며, 이후 2002년~2007년 기간 상용직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6년 평균 53.5%) 이후 2008년 58.9%로 상용직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2018년 72.2%로 2000년과 비교하여 약 14.8%p 상승하였다. 전 기간 충북의 상용직 비중의 증가 추세(전 기간 선형 추세)와 더불어 1인당 노동생산성 역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Ⅲ-10〉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과 상용직 비중 변화 추이(백만 원, %)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소득」

11) 한국은행(2018)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3) 실증 분석

(1) 분석 자료 및 모형

○ 충북의 저출생·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료 습득이 가능한 200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계절성(seasonality)[12]이 존재하는 자료의 경우 계절 조정[13]된 자료로 가공하였다.

○ 다음 〈표 Ⅲ-4〉는 2000년 1/4분기~2019년 4/4분기 기간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먼저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은 통계청, 「지역소득」 자료는 지역별 GRDP 연간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계량 모형 추정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료의 기간이 2000년~2019년 기간의 20개 표본이고, 이는 단순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수가 매우 부족하다.[14]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 「국민소득」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GDP 자료를 활용하여 충북의 연간 GRDP를 분기별로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추계를 위한 방법으로 전국 GDP와 충북 GRDP 사이의 경기변동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의미하는 공행성(comovement)을 가정하였다. (즉, GDP 시계열의 계절 변동 양상이 충북의 GRDP 시계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가정)

○ 충북의 분기별 GRDP를 추계하기 위해 〈표 Ⅲ-5〉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연간 및 분기별 GDP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 추이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충북 연간 GRDP에 적용하여 분기별 자료를 추계하였다.[15] 충북의 분기별 GRDP 추계 값을 이용하여 각 분기별 GRDP 값을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어 1인당 노동생산성을 계산하였으며, 이 값을 로그 변환 후 1차 차분한 값으로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충북의 고령(65세 이상) 근로자 비중 증가율은 각 분기별 실제 노동에 참여하는

12)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경기 흐름을 분석하는 경우 경제 변수는 예측 가능 요소(predictable component)와 무작위 오차(random error)로 나뉘며, 시계열의 예측 가능 요소는 추세(trend), 순환(cycle), 계절성(seasonality)로 구성된다.

13) 경기동향 및 순환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계절적 요인을 원계열에서 분리하였다.

14) 표본 수는 분석의 검증력(power)과 효과의 크기(effect size)와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얻는 R-square 값은 모형의 개수, 표분 수에 매우 의존적이다.

15) 이계오(2001)는 소지역 추정법에 의한 GDP 시계열과 지역 GRDP 시계열의 분기별 추이는 경제부문 내 특정한 요소들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들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하면 두 자료의 분기별 추이의 유사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체 근로자 중 고령 근로자의 비중을 로그 변환 후 1차 차분하였다.

○ 로그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계청, 「자본재 형태별 총자본형성」의 총고정자본형성 항목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총고정자본형성을 그 해의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누어 1인당 자본량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로그 변환 후 1차 차분하였다.[16]

○ 다음으로 대졸 근로자 비중 증가율은 각 해 분기별 전체 근로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근로자 비중을 로그 변환 후 1차 차분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는 인적자본을 대표해주는 변수이다. 상용직 비중 증가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로그 변환 후 1차 차분한 값으로 표현하였으며, 실업률은 경기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달라지는 충북의 생산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더미 변수는 2008년 1/4 분기부터 2009년 4/4분기 기간을 경제 위기로 정의하였으며,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표본 기간에 포함되는 경제 위기를 제외하거나 더미 변수(dummy variable)[17]를 이용하여 경제 위기에 따른 추정 오류의 가능성을 해결하였다.

16) 지역별 총고정자본형성 자료 역시 연간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충북 GRDP 시계열과 총고정자본형성 시계열의 공행성을 가정하여 분기별 자료로 추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7) $d = \begin{cases} 1 \text{ for } 2008\text{년 } 1/4 \leq time \leq 2009\text{년 } 4/4 \\ 0 \; otherwize \end{cases}$

〈표 Ⅲ-3〉 기초 통계량

(단위: %)

변수명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79	0.009	0.043	-0.081	0.096
고령(65세 이상) 근로자 비중 증가율	79	0.010	0.200	-0.266	0.415
ln 1인당 자본량 증가율	79	0.008	0.053	-0.213	0.106
인적자본 (대졸 근로자 비중) 증가율	79	0.010	0.056	-0.134	0.111
상용직 비중 증가율	79	0.003	0.033	-0.103	0.071
실업률	80	2.523	0.568	1.580	4.347
글로벌 경제 위기 더미	80	0.1	0.302	0	1

〈표 Ⅲ-4〉 GDP 시계열 변화 추이 계수 및 충북 분기별 GRDP 추계

년도	분기	변화 추이 계수
GDP_{2000}	$GDP_{2000,1/}$	$\frac{GDP_{2000,1/4}}{GDP_{2000}} = \beta_{2000,1/}$
GDP_{2000}	$GDP_{2000,2/}$	$\frac{GDP_{2000,2/4}}{GDP_{2000}} = \beta_{2000,2/}$
GDP_{2000}	$GDP_{2000,3/}$	$\frac{GDP_{2000,3/4}}{GDP_{2000}} = \beta_{2000,3/}$
GDP_{2000}	$GDP_{2000,4/}$	$\frac{GDP_{2000,4/4}}{GDP_{2000}} = \beta_{2000,4/}$
⋮	⋮	⋮

⇒

년도	분기 추계
$GRDP_{2000}$	$\frac{GRDP_{2000}}{\beta_{2000,1/4}} = \widehat{GRDP}_{2000,1/}$
$GRDP_{2000}$	$\frac{GRDP_{2000}}{\beta_{2000,2/4}} = \widehat{GRDP}_{2000,2/}$
$GRDP_{2000}$	$\frac{GRDP_{2000}}{\beta_{2000,3/4}} = \widehat{GRDP}_{2000,3/}$
$GRDP_{2000}$	$\frac{GRDP_{2000}}{\beta_{2000,4/4}} = \widehat{GRDP}_{2000,4/}$
⋮	⋮

○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성장회계접근법과 유사한 방법을 기반으로 추정식을 설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방법론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충북의 저출생 및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추정식[18]을 설정하였다.

$$\triangle \ln Y_t = \alpha + \beta_1 \triangle \ln O_t + \beta_2 \triangle \ln K_t + \beta_3 \triangle \ln H_t + \beta_4 \triangle \ln R_t + \beta_5 U_t + \beta_6 D.G_t + \epsilon_t \quad \cdots(1)$$

$\triangle \ln Y_t$ = 로그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triangle \ln O_t$ = 로그 고령(65세 이상) 근로자 비중 증가율

$\triangle \ln K_t$ = 로그 1인당 자본량 증가율

$\triangle \ln H_t$ = 로그 대졸 근로자 비중 증가율

$\triangle \ln R_t$ = 로그 상용직 비중 증가율

U_t = 실업률

$D.G_t$ = 글로벌 경제 위기 더미

ϵ_t = 오차항

○ 추정식 (1)은 성장회계접근법에서 충북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충북의 근로자 측면의 인구구조 및 경기 여건을 통제하고, 근로자의 고령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 계량 분석 방법에 있어 일반적으로 독립)을 이용변수들이 외생적(exogenous)이라는 가정이 만족되면 추정식 (1)은 최소자승법(OLS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 결과에서 충북의 고령화를 대변하는 로그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율의 추정 계수인 β_1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선형불편 추정량(BLU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을 지닌다. 하지만 추정식 (1)의 경우 생산성의 변화는 근로자의 노동 참여율을 변화시키고,

18) 저출생 추이에 따라 향후 충북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본 연구의 추정식에서 각 해의 전체 근로자 수에 저출생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어 저출생 변수를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 구조는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역 인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만약 내생성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치는 편의(bias)가 발생하여 올바른 추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구 변수(instruments variable)를 활용한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식 (1)을 분석한다.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는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율의 과거 값들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

(2) 추정 결과

○ 앞서 충북의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추정식 (1)을 설정하였으며, 모형의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추정식 (1)이 내생성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내생 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 변수로 이용한 GMM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 다음 〈표 Ⅲ-5는 충북의 노동력 고령화가 1인당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소자승법과 GMM 방법을 통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표 Ⅲ-6〉 2열에서 모형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충북 노동력의 고령화를 나타내는 6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의 증가율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다음으로 충북의 자본 집약도를 의미하는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본량 증가율이 1% 증가할 때 충북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약 0.59% 상승하여 생산에 필요한 요소 투입이 늘어나면 노동생산성이 상승한다. 인적 자본을 의미하는 전체 근로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근로자 비중의 증가율은 노동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중 증가율 역시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충북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여 경기변동과 노동생산성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Schor(1987)는 근로자의 노력은 경기 순응적이여서 경기 불황기에는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2008년~2009년 기간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국내 경제 및 지역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는데,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충북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분석 모형에서 지적하였듯이 고령(65세 이상) 근로자 비중 변수는 노동생산성과 내생적인 관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최소자승법 추정은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 가령 노동경제학의 연령과 생산성 관계 이론에서 젊은 근로자일수록 더 높은 생산성을 지닌다면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젊은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유인이 발생하고, 고령 근로자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역 인과성 관계가 존재하고, 이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서로 독립적이지 못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추정 결과는 편의를 가지게 된다.

○ 〈표 Ⅲ-5〉의 3열은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식 (1)을 GMM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내생성 문제를 지닌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율 변수의 과거 1분기~4분기 이전 값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내생성을 고려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율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근로자 비중의 증가율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약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 GMM 방법을 이용한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와 비슷하지만 상용직 비중의 증가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상용직 근로자 사용이 기업의 성과 또는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노동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인다.

○ 이러한 결과는 충북은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고, 제조업이 타 산업과

비교하여 비교적 상용직 비중이 높아 기업들이 노동 투입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최소자승법의 추정 결과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2008년~ 2009년 기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충북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5〉 충북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OLS	GMM
고령(65세 이상) 근로자 비중 증가율	-0.0439	-0.2978***
	(0.029)	(0.094)
ln 1인당 자본량 증가율	0.5885***	0.3379*
	(0.060)	(0.180)
인적자본(대졸 근로자 비중) 증가율	0.0433	-0.2376
	(0.080)	(0.312)
상용직 비중 증가율	0.0099	-0.6397**
	(0.096)	(0.269)
실업률	-0.0079	-0.0249***
	(0.005)	(0.008)
글로벌 경제 위기 더미	-0.0057	-0.0190*
	(0.008)	(0.011)
상수항	0.0243*	0.0763***
	(0.013)	(0.021)
관측 수	79	77
R-squared	0.7731	0.4907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 p<0.01, ** p<0.05, * p<0.1

4)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지역 및 나아가 한국의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크게 소비와 생산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 측면으로는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 및 보건, 복지, 보험 등의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저출생으로 인해 유아 관련 서비스 산업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 측면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생산성 및 생산량의 변화일 것이다. 차후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해 두 측면 모두 중요하지만 자료의 한계와 더불어 제약된 자원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한 지역 나아가 한 나라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생산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출생 및 고령화 추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충북의 노동력 고령화가 1인당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분석 모형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GMM 방법을 추정하여 충북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근로자들의 고령화는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중 65세 이상 근로자들의 비중이 1% 상승하면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 0.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충북의 저출생 및 고령화 추이가 향후 지속적으로 1인당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특히 현재의 저출생과 고령화 추이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충북은 총 인구 외에도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시점에 근로자들의 고령 비중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충북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 구조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사회·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충북은 저출생 및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총 종사자 수의 감소는 그 지역 및 나라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충북의 인구 문제 크게 개선된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젊은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가 서로 대체하여 생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제도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 최근에 들어서 고령 근로자의 교육 수준 향상과 의식의 변화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업 및 사회의 고령 노동력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고령 근로자와는 달리 앞으로 고학력과 전문성을 지닌 고령 근로자가 증대하여 종래의 재취업 정책과는 다른 고령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다음으로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본집약도를 의미하는 1인당 자본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1인당의 자본량이 커지면 한 사람의 근로자가 생산하는 산출량의 크기, 즉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줄어드는 노동력(생산가능인구)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고, 원격 업무 확산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인공지능 등 도입으로 자동화 시스템 중심의 사회·경제 구조로 빠르게 변화시켜 자본 투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 1인당 자본량 증가는 충북 1인당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보여준다. 충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수준[19] 개발과 함께 서로 간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 학습효과를 높여 경제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다음은 충북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적 자본을 의미하는 충북 내 전체 근로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 근로자 비중과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충북 내 인적자본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19) 일정한 기술 수준에서는 일정한 노동에 대한 자본량을 증가시켜도 한계생산력이 체감하므로 자본집약도 상승과 기술진보를 함께 수반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력 이외에 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해 노동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상용직의 비중은 충북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충북이 타 지역과 비교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고,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상용직 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등 비용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한 고용 유연성 문제뿐 아니라 제한된 자원의 활용에 있어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이 줄어들 수 있어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 지금까지 충북의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변화로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계량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근로자의 고령화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꾸준히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충북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타 부문에서 노동생산성의 증대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한계점이 존재하나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지역에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부족한 자료의 수집, 축적을 통하여 충북의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한계로 지적된 문제점에 관해 향후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고자 한다.

3 식품소비 부문

1)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건강한 식품소비의 중요성 확대

○ 우리 국민의 식품소비행태는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경제·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4차산업 혁명에 따른 ICT 기술 발달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래 농식품소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고 예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화에 초점을 맞춰 식품소비 변화와 농업의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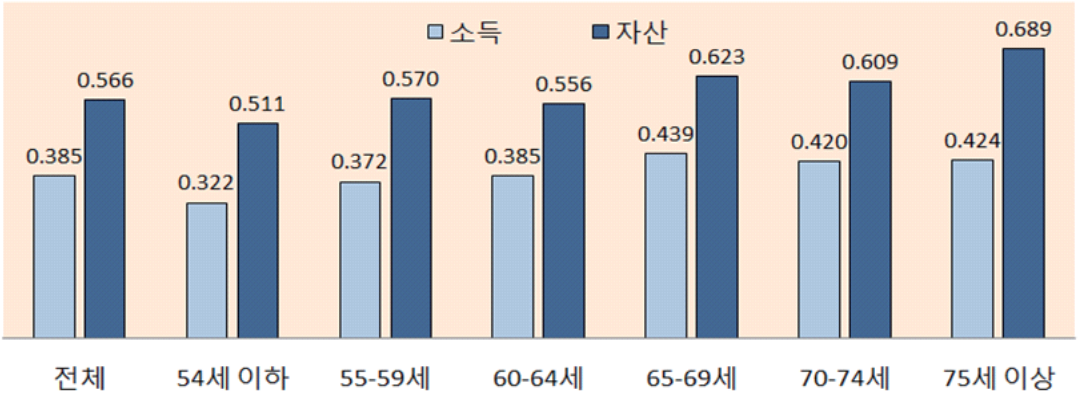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며, 고령화에 대한 위기인식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천용기 외 3인(2017)은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30년은 16.5%, 2050년은 전체 인구의 2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서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약 4,234만 명으로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 국제연합(UN)이 규정한 한 국가의 인구 구조에 따른 사회유형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4% 이하는 유년 인구 사회(Young Population), 4~7% 수준은 성년 인구 사회(Mature Population),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UN이 규정한 국가 유형에 따르면 2000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2%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 2017년 9월 전체인구의 14.02%로 고령사회(14%이상)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되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속한 진전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등은 미국·유럽·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 고령자들은 노년의 삶을 건강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단순히 수면연장이 아닌 그 삶의 질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료적 관리 외에도 건강한 식품소비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균형과 건강 악화



〈그림 Ⅲ-11〉 고령자 세부 연령대별 소득/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

주: 균등화한 값임.
자료: 김상효·허성윤(농촌경제연구원), 2018, 고령자의 식품소비 여건 및 현황분석

○ 지니계수[20]는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통해 빈부격차와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러한 지니계수로 소득이 어느 정도로 분배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림 Ⅲ-11〉과 같이 소득과 자산에 대해 고령자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소득은 거의 대체로 불평등한 상태로 평가되는 기준인 0.40에 가까워 불평등한 편이기는 하나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산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은 0.689로 가장 불평등이 심각했다.

20) 네이버 지식백과(2020.11.16.)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표 Ⅲ-6〉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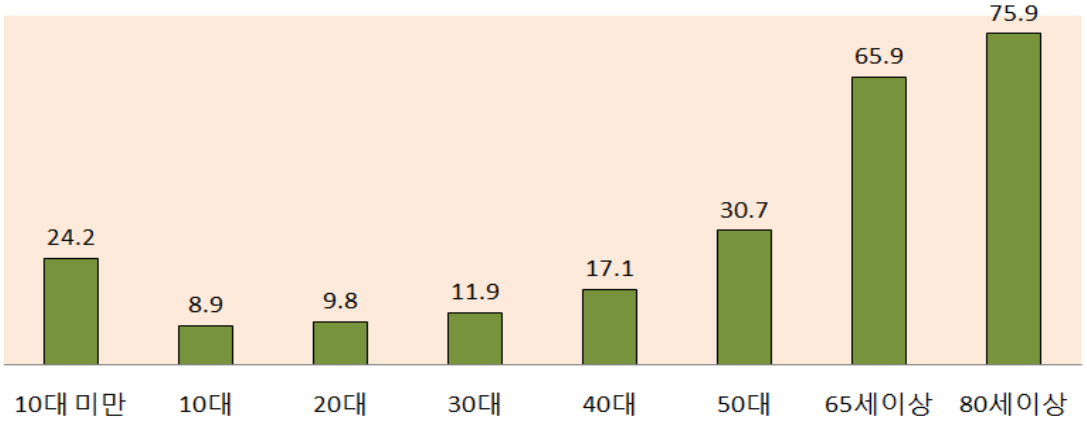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정부 및 사회 단체
		근로·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소계		
계		36.2	7.8	18.4	4.2	66.6	23.0	10.4
성별	남자	45.9	8.3	21.0	3.6	78.8	13.0	8.2
	여자	28.7	7.4	16.2	4.7	57.0	30.8	12.1
가구 구성	1인가구	22.6	5.0	16.4	3.3	47.2	28.0	24.7
	1세대가구	43.8	11.0	21.3	5.0	81.1	10.9	7.9
	2세대가구	40.0	5.5	17.0	3.7	66.3	28.0	5.6
	3세대 이상	18.2	4.8	11.6	3.7	38.4	59.3	2.3
연령	60~64세	60.8	6.8	14.5	4.1	86.3	9.2	4.4
	65~69세	41.9	8.2	22.0	4.2	76.3	15.9	7.6
	70~79세	22.7	8.8	20.9	4.2	56.7	30.1	13.1
	80세 이상	6.4	6.4	13.6	4.5	30.9	47.5	21.6
거주 지역	동	32.6	8.9	20.7	4.4	66.7	24.1	9.1
	읍면	46.1	4.6	11.7	3.7	66.1	19.9	13.9

주: 2015년 60세 이상 고령자 응답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 6. 29.). 사회조사.

○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사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 또는 친척 비중이 높았다. 60세 이상이라도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재산과 연금 및 퇴직금 비중이 낮아 여유 있는 노년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득 및 자산의 불균형은 고령층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물론 의료비에 대한 지출정도가 더 크게 다르겠지만 식품에 대한 소비액도 다를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건강하고 값비싼 농산물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소득별 소비의 차이가 소득에 따른 건강과 영향에 미치는 영향은 높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편입될 때 고령자의 삶의 질과 식품소비 여건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그 이전에 고령층이 된 세대에 더 높은 경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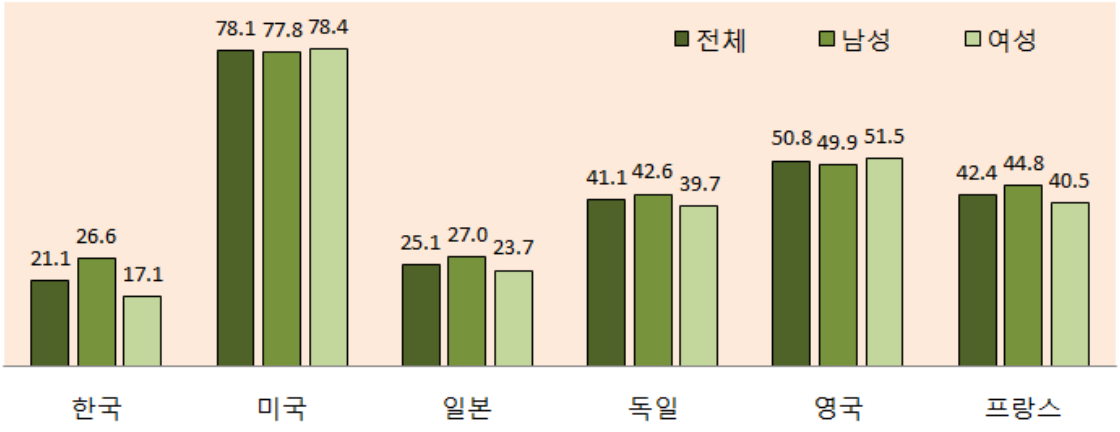


〈그림 Ⅲ-12〉 연령대별 유병율 비교

주: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7. 6. 29.). 사회조사.

○ 김상효·이용선·서성윤(농촌경제연구원, 2017)의 '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령대별 유병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유병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관리되어야 하며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령친화식품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단위: %)



〈그림 Ⅲ-13〉 65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주요국과 비교)

주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2)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이며, 국가별 최신결과를 토대로 작성(해당연도는 상이). 미국은 산출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자료: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 보건복지부.

○ 또한 〈그림 Ⅲ-13〉에서와 같이 동일한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살펴보면 상당히 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7〉 고령화로 인한 음식섭취 능력 변화

원인	결과
타액 감소, 충치 증가, 치아상실 및 치아상태 악화	저작기능 저하, 음식 섭취량 감소, 영양 불균형
위·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량 감소, 침 분비량 감소, 타액 속 소화효소량 부족	저작·연하기능 저하, 탄수화물의 불충분한 소화
식도/위장에서의 연동운동 저하	연하 및 소화기능 저하, 변비
갈증감각 감소	수분섭취량 감소
미뢰 수 감소	강한 맛 위주로 감지, 쓴맛 및 신맛에 대한 감지능력 개선, 단맛 감지능력 저하
미각 변화	식욕 변화
후각 기능 저하	식욕 부진
시력 저하	식사 및 요리 시 장애 유발
우울증	음식에 대한 흥미 감소
치매	끼니를 거르거나 여러 번 식사하는 등의 문제 발생, 연하장애 유발
다수 약물 복용	식욕 부진, 위장기능 저하, 변비 등 부작용
불충분한 수입	고품질의 육류, 채소, 과일 충분한 섭취 불가
과음	식욕 부진, 비타민 대사 방해, 영양 장애
골다공증, 빈혈, 욕창, 유당불내성	영양상태 악화
배우자와 사별 (남성 노인의 경우)	식사준비 불가

자료: 김상효·이용선·서성윤(2017), '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 고령화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타액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충치발생이 늘어난다. 더불어 치아상실이나 치아상태 악화현상이 나타난다. 치아가 약해지면 육류 등을 섭취할 때 불편함을 겪어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위·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량 감소, 침 분비량 감소, 침 안에 있는 소화효소량 부족을 겪게 된다(김상효, 2017). 그 밖에도 식도와 위장의 연동운동 저하, 후각과 시력의 기능저하, 갈증감각 감소, 미뢰 수 감소 등 아래 〈표 Ⅲ-7〉과 같이 신체의 기능저하와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는 음식섭취와 관련한 다양한 능력 및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① 식욕의 변화 및 부진, ② 저작·연하·소화장애와 같은 이른바 3대 섭식장애, ③ 이러한 신체변화 및 기능저하로 인해 충분한 음식섭취가 어려워져 영양섭취 저하 및 영양불균형 상태에 도달 등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겠다(김상효, 2017).

3) 고령친화식품 관련 정부정책

○ 우리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과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식품 개발 및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 왔다. 우선 일본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일본은 2006년 세계최초로 UN에서 구분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 예측 기준 고령화율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앞서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본은 일찍이 고령화가 진행되어 세계적인 장수국가로 알려졌으며 관련 주거, 여가 생활, 의료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가 발달하였다. 특히 2002년 개호식협회(http:// www.udf.jp)가 설립되어 기준 및 규격을 정립하고 먹을 것으로 입으로 섭취하여 씹는 능력과 삼켜서 넘기는 힘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잘 소화되는 부드러움과 영양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여 이들 식품회사들이 제조한 식품에는 UDF(유니버셜 디자인 푸드)라는 로고로 표시하였다. 2014년 11월 농림수산성은 개호식을 표시하기 위해 스마일 케어식으로 명칭을 짓고 로고마크를 부여하여 표시하였다. 2016년 “개호식품 시장 확대와 국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호식품으로 불리던 4가지 기준등급을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일 케어 다이어트(Smile Care Diet)로 새롭게 명명”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일본은 현재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필요성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어 후지경제조사에 따르면 개호식품의 시장규모는 2010년에는 978억 엔, 2012년에는 1,036억 엔이며, 2021년에는 1,577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2).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제품 출하 액수를 살펴보면 2003년 25억 엔에서 2011년 93억 엔으로 4배 가까운 성장을 했으며, 요양 수요자의 간병식품 수요는 약 2조 5,000억 엔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내고있다. 2015년 일본의 개호식품 시장 규모는 가공식품이 전년대비 103.7%인 991억 엔이며, 조리품은 전년대비 101.6%인 4.9천억 엔 시장규모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개호식품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노령인구의 영양상태 관리를 위해 2016년 2월 1일 일본 정부(농림수산성)가 스마일 케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양 보조식을 포함한 개호식품에 대한 잠재 시장규모를 약 4~5조 엔으로 추정

하였으며, 일본 재흥전략에서는 2016년 기준 100조엔 규모의 일본 식품시장을 2020년 기준 120조 엔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진취적 계획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개호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며 다양한 제도 발전을 이루어 왔다.

○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미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4,800만 명에서 2050년 8,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201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9%로 UN에서 구분하고 있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실정이다. 미국은 1965년 미국고령자법(Older Americans Act)을 제정하여 60세 이상 고령인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재택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4년 "건강기능식품 건강 및 교육법(DSHEA: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제정으로 기존의 식품과 의약품과는 별도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중근, 2011). 미국 FDA에서는 고령자용 식품을 '특수용도식품(food for special dietary uses)'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질환과 회복기, 임신, 수유,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과민반응, 저체중·과체중 등의 육체적, 생리적, 병리학적 혹은 기타 조건을 이유로 필요한 특별한 식이를 공급하기 위함과 연령을 고려한 특별한 식이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FDA, 2012).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령자용 식품으로는 근력 강화, 영양보충식품 등 고령자의 신체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 등이 있으며 'US Dairy Export Council'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유청 단백질을 첨가하여 영양바와 젤, 페이스트 제품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영양관리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Meals on Wheels는 자원봉사 단체로 각주의 Department of Aging에서 재택 배달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LA의 경우 한식도 배달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USDA와 학계의 연계를 통해 노인영양교육 및 노인층을 위한 식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고령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유럽(EU)의 주요국은 다음과 같다. 영국은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을 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하는 서비스, 건강방문, 홈헬퍼서비스, 급식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에는 기존 관련 내용에 홈케어서비스가 추가되었으며, Food Standards Agency의 'Guidance on food

served to older people in residential care'에서는 영양소가 강화된 재료를 선택하고 지방을 줄이고 음식을 부드럽도록 조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식재료 및 조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27). 스웨덴의 경우는 1982년 '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하여 재택서비스에서부터 시설 서비스까지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지역생활에 중점을 둔 고령 친화산업이 발달하였다. 유럽연합(EU)에서는 특수영양용도식품(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을 다른 식품과 달리 특수한 제조공정에 의해서 생산됨을 의미하고 표시된 영양 목적에 적절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영양용도식품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첫째 유아용 식품, 둘째 다이어트식, 셋째 의료식, 넷째 스포츠식, 다섯째 당뇨환자식 등으로 구분되며, 분류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료식의 경우 법적으로 "특수 의료 목적을 위한 식품" 또는 "질병 혹은 장해에 대한 식사 관리를 위함"이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R&D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며, 고령화 대응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 분야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고령자용 식품은 주로 병원 및 요양원에서 사용되는 치아 및 연하 보조식의 유동식과 경관 투여용 영양 보충제 수준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걸친 법/제도/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식품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심사기준 개발(2013년) 및 고령자 재가급식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2014년) 등의 소기의 성과"를 냈다(김상효, 2017). 그러나 "고령친화식품산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된 중앙정부·지자체의 책무 대비 성과가 여타산업에 비해 몇몇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등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고령친화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2017년 2월 농림축산식품 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에서 고령친화식품을 유망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R&D 확대추진 수준에 그쳐 있는 상황이다(김상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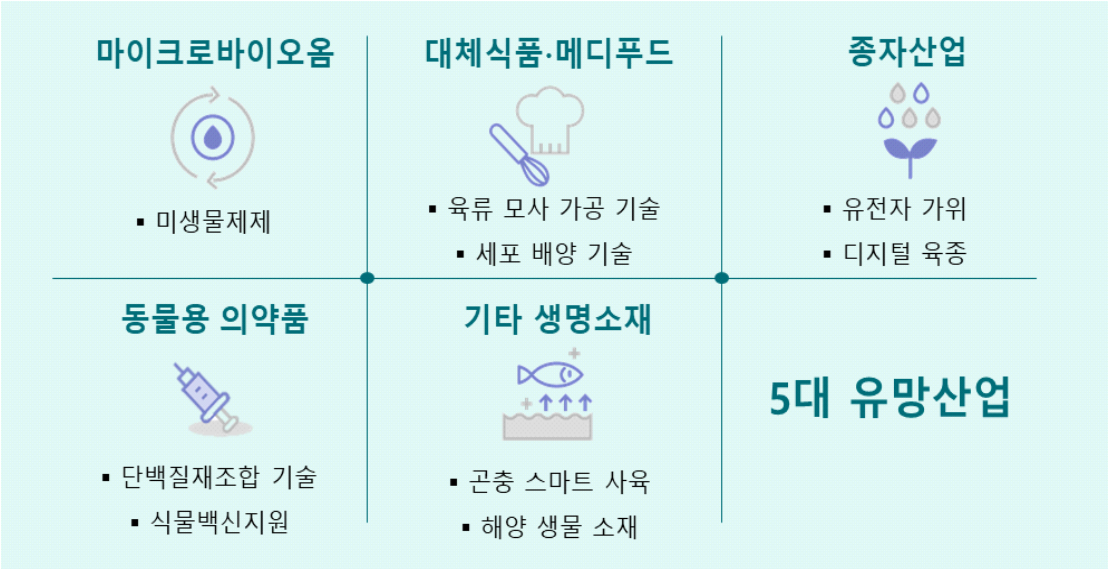
○ 정부는 2020년 9월 21일 다부처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산업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세부 분야를 해당 산업에 이용되는 생명자원과 관련 된

생명공학 기술에 따라 구분 하고 있다. 생명자원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이 대표적인 산업 분야에 해당하고 생명공학기술인 오믹스분석기술, 유전자가위기술 및 배양기술 등은 개별적으로 혹은 융합되어 그린바이오 산업에 활용한다(정부 발표, 2020). 융합형 신산업으로서의 그린바이오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자원과 관련 기술의 다양한 결합 촉진이 필수적이다(정부 발표, 2020). 특히, 식품이나 종자와 같은 생명자원이 기존 기술이 아닌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 전례가 없는 제품이나 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다(정부 발표, 2020). 그린바이오 산업을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융합형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별 산업보다는 공공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을 패키지화하여 투자하려 하고 있다(정부 발표, 2020).

〈표 Ⅲ-8〉 그린바이오 주요 산업별 제품화 단계별 핵심요소

구분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핵심요소
소재 탐색	• 분리동정 • 대사산물발굴 • 오믹스분석	• 맞춤형소재 • 성분과발현 • 가공적성DB	• 육종소재분석 • 유용물질발굴 • 오믹스분석	• 소재 분리·추출 • 유효물질 분석	• 계통분리 • 위해성평가	• 빅데이터 • 오믹스분석 • 전문인력
제품 설계 개발	• 소재특성 확립 • 순수 분리배양 • 기술 안정화	• 소재특성확립 • 기술안정화	• 분자육종 • 디지털육종 • 유전자가위 • 대사공학	• 유전자 분석 • 세포 배양 • 백신주 개발	• 분쇄 · 가공 • 건조 · 압착 • 3D프린팅	• 시설·장비 • 기술개발
시험 평가	• 기능성 평가 • 안전성 평가	• 효능검증 • 안전성평가	• 병리검정 • 기능성분분석	• 약동력학 평가 • 발현조절	• 임상실험 • 안전성평가	• 제품인증 • 대행기관 • 규제개선
제형화	• 제형 · 가공기술 • 복합균주개발 • 맞춤형 종균 개량	• 제형 · 가공기술 • 안정성확보	• 프라이밍 • 팰렛가공 • 코팅기술	• 제형 기술 • 투여 기술	• 추출 • 합성	• 기술개발 • 장비 · 시설
생산 (사업화)	• 대량배양기술 • 오염방지 • 품종별 종균 생산	• 복합제조공정 • 공정 효율화	• 채종	• 3D 프린팅 • 인체의약품의 동물용화	• 대량생산 (스마트팜)	• 시장창출 • 자금
응용 산물	• 종균활용 발효식품 • 생물농약·비료 • 프로바이오틱스	• 식물육·배양육 • 메디푸드 • 고령친화식품	• 내재해성 종자 • 고기능성 종자	• 백신 • 줄기세포 치료	• 건강기능식품 • 사료, 화장품 • 바이오디젤	

자료: 정부관계부처합동(2020.09.21.),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그림 Ⅲ-14〉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

○ 그린바이오 산업 5대 분야 중심으로 핵심기술 선정하여 「(가칭)그린바이오 핵심기술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5대 유망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선정과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5대 유망산업은 ① 마이크로바이옴(유전체 분석,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② 대체식품(육류모사, 기능성 신소재 등), ③ 종자(유전자가위, 디지털육종 등), ④ 동물용의약품(단백질 재조합, 줄기세포치료, 식물백신 등), ⑤ 기타 생명소재(곤충·해조류·식물 등 생물 유래 소재 제형화 등)이다. 이중 대체식품·메디푸드가 고령친화용 식품산업과 연관이 된다. 대체식품·메디푸드는 국내 산업규모는 2019년 0.9조원으로 2030까지 3.6조원까지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체식품 제조의 핵심기술인 육류 모사 가공 기술, 세포 배양 기술 등 R&D 중점 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대체식품 안전관리기준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마련('20~'25)하고 메디푸드·고령친화식품용 질환 맞춤형 신소재 발굴, 식이 설계 연구 및 기능성 성분 추출 촉매 기술 등 R&D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미래 정책연구실, 2020).

○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행 범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의·분류체계의 명확한 정립 및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미래 정책연구실, 2020).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로 한정하고 있으며, 식품공전상 특수용도식품-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도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만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보충/저작용이/소화용이 등 고령층의 니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미래 정책연구실, 2020). 법/제도 기반의 미비, 고령 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정보/통계 부족, R&D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내 식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측면에서의 대응도 미진한 실정이다(미래 정책연구실, 2020).

4) 고령자의 식품소비와 앞으로의 전망

○ 고령층은 대체로 식욕이 부진하고 식품 섭취능력이 저하되므로 영양상태 불균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김상효·허성윤, 2017).

〈표 Ⅲ-9〉 고령자 연령별 주요 식품류별 일일 섭취량

단위: 그램, %

구분	50대(A)	60대	70대	80대 이상(B)	증감(B/A)
채소류	368.7	363.1	304.9	232.0	-37.1
곡류 및 그 제품	292.8	295.7	280.2	251.0	-14.3
과실류	245.5	237.7	166.2	125.1	-49.0
어패류	118.9	105.7	81.5	71.1	-40.2
음료 및 차류	137.4	81.4	48.6	31.0	-77.4
주류	142.8	86.4	37.4	16.1	-88.7
육류 및 그 제품	84.3	64.2	54.5	44.8	-46.9
유류 및 그 제품	73.7	71.4	50.1	48.0	-34.9
두류 및 그 제품	42.3	43.1	42.6	44.7	5.7
감자 및 전분류	47.3	47.7	36.3	24.7	-47.8
해조류	30.3	33.8	27.8	20.7	-31.7
조미료류	36.6	30.9	24.5	20.2	-44.8

주: 섭취량 상위 12개 식품류만 제시.
자료: 김상효·허성윤(2017), 고령자의 식품소비 여건 및 현황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 〈표 Ⅲ-9〉는 고령자 연령별 주요 식품류별 일일 섭취량이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두류 및 그 제품을 제외하면 섭취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섭취량이 감소하는 것은 증감이 -88.7%인 주류이며 다음은 -77.4%인 음료 및 차류이다. 또한 과실류는 49.0%와 감자 및 전분류 47.8%, 육류 및 그 제품 46.9%의 감소도 컸다. 이는 각종 질병과 치아의 상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강식품이라 인식되는 두류 및 그 제품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10〉 고령자 연령대별 주요 식품류별 일일 섭취 비중

단위: %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채소류	21.9	24.0	25.6	24.3
곡류 및 그 제품	17.4	19.5	23.5	26.3
과실류	14.6	15.7	14.0	13.1
주류	8.5	5.7	3.1	1.7
음료 및 주류	8.2	5.4	4.1	3.2
어패류	7.1	7.0	6.8	7.4
육류 및 그 제품	5.0	4.2	4.6	4.7
유류 및 그 제품	4.4	4.7	4.2	5.0
감자 및 전분류	2.8	3.2	3.0	2.6
두류 및 그 제품	2.5	2.8	3.6	4.7
조미료류	2.2	2.0	2.1	2.1
해조류	1.8	2.2	2.3	2.2
기타	3.8	3.5	3.0	2.8

주: 상위 12개 이외 식품류(난류, 당류, 종실류, 유지류, 버섯류 등)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김상효·허성윤(2017), 고령자의 식품소비 여건 및 현황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 전체 섭취량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대 25.6%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80대 이상이 되면 24.3%로 다소 감소한다. 곡류 및 그 제품은 꾸준히 증가하여 80대 이상에서 2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류 및 그 제품과 두류 및 그 제품 또한 대체로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육류와 과실류, 주류, 음료 및 차류 중심의 식생활에서 채소류, 곡류 및 그 제품, 유류 및 그 제품, 두류 및 그 제품 중심으로 식생활이 변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식품산업에서 향후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Ⅲ-11〉 고령자 50대와 80대 이상의 끼니별 일일 섭취비중 비교

단위: %

구분	50대				80대 이상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채소류	24.4	33.8	33.4	8.4	32.8	30.6	30.7	5.8
곡류 및 그 제품	22.7	34.6	30.1	12.7	30.9	31.6	31.2	6.3
과실류	13.1	8.6	8.2	70.1	9.9	7.6	4.7	77.8
어패류	22.1	37.3	36.1	4.4	32.1	32.7	34.5	0.7
음료 및 차류	5.7	9.7	7.8	76.9	8.1	11.4	7.1	73.4
주류	1.1	12.4	45.9	40.6	3.4	21.8	21.1	53.6
육류 및 그 제품	12.3	32.2	46.4	9.1	28.8	37.2	32.4	1.5
두류 및 그 제품	25.1	27.5	28.2	19.2	22.9	19.8	20.2	37.0
감자 및 전분류	21.8	22.0	20.2	35.9	16.0	21.1	25.1	37.9
해조류	33.0	32.3	33.6	1.0	35.0	34.2	30.6	0.2
조미료류	17.2	39.3	37.6	5.9	30.2	34.4	33.8	1.6

자료: 김상효·허성윤(2017), 고령자의 식품소비 여건 및 현황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 〈표 Ⅲ-11〉은 식품류별 섭취량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의 끼니별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50대는 "아침의 비중이 높은 식품류가 전무한 가운데, 80대 이상에서는 아침 식사에서의 채소류, 해조류 섭취 비중이 가장 높았"다(김상효·허성윤, 2017). 이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 80대 이상의 식습관이 반영된 것이다. 50대의 주류는 "저녁식사에 곁드리는 반주였다면, 80대 이상은 간식의 비중이 53.6%로 높아지며, 저녁 비중이 높았던 육류 및 그 제품의 점심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효·허성윤, 2017). 한편, 과실류는 "간식으로서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두류 및 그 제품은 저녁 식사에서 간식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김상효·허성윤, 2017).

○ 〈표 Ⅲ-12〉는 세부 식품별로 연령대별 많이 섭취하는 식품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연령에서 백미가 가장 많은 섭취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순위부터는 연령대별 차이가 발생한다.

○ 맥주와 돼지고기는 50대에서 각각 4위, 9위이지만 60대에서는 12위와 16위로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에서는 더욱 섭취를

하지 않는다. 또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멸치육수와 두부 등은 각각 50대 7위와 18위 이었지만 60대에서는 5위와 17위로 상승하고 80대 이상에서는 4위와 10위권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식품소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80대 이상은 멸치육수 뿐만아니라 사골국물, 가다랭이 국물 등 국물 육수의 순위가 급격히 증가하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부드럽고 먹기 쉬운 식품으로 소비경향이 변화하는 모습이다(김상효·허성윤, 2017). 한편, 두유와 애호박, 나박김치, 보리, 찹쌀, 국수 등은 80대 이상에서만 30위권내에 위치하는 식품들이며, 특히 두유는 7위로 매우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김상효·허성윤, 2017). 80대 이상은 보리와 찹쌀 등 곡물류에 대한 선호가 높고, 두유, 애호박, 나박김치, 국수 등 물성이 연한식품인 특징이 있다(김상효·허성윤, 2017).

〈표 Ⅲ-12〉 고령자 연령대별 다소비 식품 비교

단위: %

순위	50대		60대		80대 이상	
	식품	섭취량(g)	식품	섭취량(g)	식품	섭취량(g)
1	백미	159.1	백미	170.6	백미	173.7
2	배추 김치	79.2	사과	78.5	배추 김치	48.4
3	사과	76.5	배추 김치	72.6	사과	38.0
4	맥주	52.4	우유	45.3	멸치육수	34.4
5	소주	51.2	멸치육수	38.9	쇠고기,족,사골국물	30.3
6	우유	46.5	감	34.3	우유	30.3
7	멸치육수	40.8	소주	34.0	두유	21.9
8	막걸리	36.1	다시마 육수	29.1	감	17.9
9	돼지고기	33.9	토마토	28.2	다시마 육수	17.7
10	감	29.8	막걸리	25.5	두부	14.9
11	고추	28.6	고구마	25.1	양파	14.3
12	양파	27.2	맥주	24.8	애호박	14.3
13	달걀	26.9	고추	24.6	귤	14.2
14	무	25.4	양파	23.9	무	14.2
15	다시마 육수	25.3	무	22.7	토마토	13.6
16	고구마	25.0	돼지고기	22.1	감자	12.2
17	토마토	25.0	두부	22.0	소고기	12.1
18	두부	23.3	떡	21.6	김치, 나박 김치	11.8
19	떡	22.7	달걀	20.6	고추	11.8
20	귤	22.5	귤	20.1	떡	11.6
21	참외	20.8	수박	19.4	가다랭이,국물	11.0
22	포도	19.7	참외	18.7	달걀	10.9
23	수박	19.2	오이	17.7	고구마	10.8
24	소고기	18.5	감자	17.5	보리	10.7
25	감자	16.8	쇠고기,족,사골국물	15.9	복숭아	10.2
26	복숭아	16.6	소고기	15.8	포도	10.0
27	오이	16.3	포도	15.4	배추	10.0
28	배	16.1	가다랭이,국물	15.0	백미, 찹쌀	9.7
29	닭고기	16.1	배	14.5	참외	9.5
30	요구르트	15.9	요구르트	14.5	국수	9.4

자료: 김상효·허성윤(2017), 고령자의 식품소비 여건 및 현황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표 Ⅲ-13〉 고령자 세분 연령대별 원재료성 식품, 가공식품 섭취량

구분		전체 섭취량(g)	가정식 섭취량(g)	외식 섭취량(g)
전체	원재료성 식품	810.9	367.4	443.4
	가공식품	760	174.2	585.7
	가공식품 비중	48.4%	32.2%	56.9%
50-59세	원재료성 식품	980.4	445.3	535.1
	가공식품	703.4	198.7	504.7
	가공식품 비중	41.8%	30.9%	48.5%
60-69세	원재료성 식품	960.8	539.9	420.9
	가공식품	553.0	217.7	335.3
	가공식품 비중	36.5%	28.7%	44.3%
70-79세	원재료성 식품	791.7	514.7	277.0
	가공식품	398.9	186.6	212.3
	가공식품 비중	33.5%	26.6%	43.4%
80세 이상	원재료성 식품	633.6	447.8	185.8
	가공식품	322.3	162.1	160.3
	가공식품 비중	33.7%	26.6%	46.3%

자료: 김상효·허성윤(2017), 고령자의 식품소비 여건 및 현황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 전체 섭취량을 원재료성 식품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한 결과, 50대는 원재료성 식품을 980.4그램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703.4그램 섭취하여 가공식품의 비중은 41.8%를 기록했다(김상효·허성윤, 2017). 가공식품은 60대 553.0그램, 70대 398.9그램, 80대 이상 322.3그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중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공식품의 섭취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가정식과 외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식을 통한 가공식품 섭취 비중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에서 각각 30.9%, 28.7%, 26.6%, 26.6%로 전체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김상효·허성윤, 2017). 반면, 외식을 통한 가공식품 섭취비중은 각각 48.5%, 44.3%, 43.4%, 46.3% 수준으로 절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가정식에서의 가공식품섭취가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다(김상효·허성윤, 2017).

○ 고령자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가정식에서의 가공식품 섭취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외식에서의 가공식품 비중은 40%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령자들의 이러한 식품섭취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R&D를 통해

고령친화용 식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술들은 향후 미래에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물성 조절 기술(Texture Modification Technology)은 고령자들의 섭식장애 해결을 위해 식품 혹은 식재료의 물성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물성 조절 기술을 통하여 식품의 형태(외관)를 유지하고, 고령자의 요구 수준에 맞추어 경도를 조절하여 먹는 즐거움과 함께 영양분 섭취를 유도할 수 있다.

○ 효소처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시료의 전처리(동결)를 통해 감압조건에서 효소의 침투효율을 증진시키는 감압효소처리법과 시료에 직접 니들(needle)을 꽂아 효소를 주입하여 물성을 연화시키는 효소 인젝션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감압효소처리법은 일본 히로시마현에서 개발 및 실용화된 기술로 동결함침법(凍結含侵法)이라 불리며, 일반적인 공정은 시료의 동결, 효소액 침지, 감압공정, 효소반응(경도조절), 조리(가열 및 증숙), 효소반응 정지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기술을 통해 일본에서는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생산 및 판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죽순, 연근, 우엉, 버섯 등의 물성을 조절하기 위해 pectinase나 cellulase계열의 효소를 이용하여 경도를 완화시킨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 효소 인젝션 방법의 경우 시료에 직접 니들을 꽂아 적당량의 효소를 투입하여 효소반응을 시키고 조리공정을 통해 효소반응을 정지시킨다. 이러한 효소 처리 기술을 이용하면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의 물성을 원시료와 비교할 때 90% 이상 수준으로 조직 연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식품 재성형은 식재료의 분쇄 및 균질화를 통해 페이스트화시키고 고형분 함량 조절과 증점제(Thickener)를 첨가해 물성을 제어하여 고형화(형태 부여)시키는 기술이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용 재성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증점제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그림 4). 기존에 스스로 씹거나 넘기는 것을 곤란해 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치아 및 연하식의 경우 조리된 식품을 분쇄하거나 갈아서 죽 형태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재성형 기술을 통해 고형화시킨 식품의 경우 시각적인 부분에서 고령자 및 환자들에게 기호성을 높일 수 있으며, 물성의 제어와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림 5). 이러한 장점은 노인들의 영양분 섭취를 증진시키며, 기존의 단순한 치아 및 연하 보조식에 비하여 고령자 및 환자들에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 수비드 기술은 1974년 프랑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푸아그라가 조리된 후 기름이 유출

되어 제품의 중량이 40%이상 감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닐로 진공 포장을 하여 조리한 방법에서 고안되었다.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비닐포장법과 기계를 개선하며 약 600여 개의 레시피가 개발되었다. 수비드 기술은 굽기, 찌기, 삶기와 함께 제4의 조리법으로 칭하며 cook chill(조리된 냉동식품) 방식을 변형시켜 개발되었으며, 일반적인 공정은 원재료 혹은 일부 조리한 식재료를 필름 포장지에 넣어 진공, 밀봉하여 온도 조절이 가능한 조리 기계를 통해 각각의 식재료에 적합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여 조리한다. 수비드 기술은 재료를 진공조건에서 포장하여 저온에서 장시간 가열을 통해 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재료 고유의 맛과 풍미를 잃지 않고 균일하게 조리할 수 있다. 또한, 진공조건으로 인하여 열전도율이 높아져, 삼투압에 의해 적은 양의 조미액이 균등하게 식재료 안으로 침투하는 이점이 있으며, 저온 조건에서 장시간 조리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수분 분리작용을 억제할 수 있어 육류 등도 맛과 풍미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열처리의 강도와 냉각 처리 시 가공 온도와 시간, 저장 냉각 환경을 식재료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미생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까지 수비드 기술은 주로 육류에 적용되어 왔으며, 어패류는 수분함량이 높고 저장성이 낮다는 문제점 때문에 편의 식품과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고급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한 일부 외식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식품산업에 적용하여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시스템 및 다양한 재료 및 조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비드 기술의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병원환자식, 단체급식, 성장기 어린이용 급식, 요양식, 고품질 특수 기호식 등 조리 가공수단으로서 광범위한 응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 초고압 기술은 액체 또는 고체 식품을 100~900 MPa의 정수압으로 처리하는 기술로서, 기존 가열방식의 살균공정에서 발생하는 영양 성분의 파괴, 조직감 및 색의 변화, 향기 성분의 손실 등과 같은 품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가열 살균공정으로 발전되어 왔다(14). 특히 식품의 품질의 저하는 시키지 않으면서 부패미생물의 억제 및 효소의 불활성화에 매우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어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초고압 기술은 단순히 식품 살균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고압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 또는 변형(물성 변화), 탄수화물과 지방의 특성 변화를 유도하여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성을 변형시킬 수 있다. 육류를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가공제품에 대한 압력처리를 하고 이를 위한 육류의 숙성, 저장성, 조직 특성

및 맛을 향상시키는데 초고압 기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Ueno 등은 육류에 대한 초고압처리를 통해 근조직과 세포막을 관찰하였고, 압력 조건에 따른 조직변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일본기업 Fuji Muttergam에서도 육가공제품의 육질을 연하게 만들고 조직감 및 식감을 높여주는 데 초고압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Matser 등은 가열 초고압 처리 이후 바질(basil)의 향미 성분과 콩(green bean)의 조직감에 있어서 레토르트 대비 매우 우수한 품질을 구현할 수 있으며,과채류의 색상과 ascorbic acid 함량 비교에 있어서는 레토르트 대비 동등 이상의 품질 향상을 보고하였다. Rastogi 등은 당근을 칼슘 처리한 후 압력과 열 병행 처리 시 조직 손상이 적어지면서 보다 좋은 품질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재구성 돈육 제품에 결착제를 첨가하고 초고압 처리를 통해 부가적인 보수력 및 조직감의 향상된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초고압 기술을 적용하여 식품의 조직감을 보호하거나 개선 혹은 증진시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있지만, 이를 응용한 제품 개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최근 전 세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주도적인 움직임을 위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여 식품 생산과 유통구조에 많은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 분야에서 최근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D 프린팅 기술은 제작하고자 하는 형상을 3차원 CAD(Computer Aided Design)모델로 만든 후, 이를 한 층씩 적층하여 최종 형상을 성형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3D 프린팅 기술은 크게 토출, 광 경화, 분말접합 등의 성형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토출을 사용하는 기술의 경우, 열가소성 수지에 열을 가하여 용융시켜 노즐을 통해 토출하여 상온 조건에서 굳히며 적층을 하는 FDM(Fused Deposition Modeling)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저가형 3D 프린팅 장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장비 및 재료 생산 비용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광경화를 사용하는 기술의 경우, 액상 폴리머(liquid polymer) 재료 표면에 레이저를 이용한 자외선(ultraviolet, UV) 혹은 레이저 대신 빔프로젝터와 자외선 등(UV lamp)의 결합을 조사하여 재료를 경화시켜 형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각각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및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방식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또한, 광 경화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중 분말 형태의 재료들을

레이저를 사용하여 소결시키는 SLS(Selective Laser Sintering)와 액체형태의 바인더를 사용하여 분말 형태의 재료를 접착시키는 PP(Plaster-based 3D Printing) 방식이 있다. 대부분 식재료의 경우 토출 또는 분말접합 방식을 사용 할 수 있는 액체, 가루형태인 페이스트, 파우더 형태로 제작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분말접합 방식의 경우, 다양한 식재료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바인더를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토출 방식은 식품으로 구성된 카트리지(식재료)를 3차원 구동이 가능한 압출기에 장착하고 스크루, 피스톤, 유압 등의 토출이 가능한 힘을 가하여 사출하면서 적층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식재료의 원료 교체가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개발된 식품 3D 프린터 방식에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 소재를 이용한 압출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즐을 통해 사출이 가능할 정도로 부드럽고 입자가 균일해야 하며, 사출 후 적층과정에서 붕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 한 점탄성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점제(잔탄검, 구아검, HPMC 등)를 일부 첨가하여 적절한 물리적 특성을 제어해야만 한다. 초기에 개발된 식품 프린터의 경우, 주로 초콜릿과 설탕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식품 3D 프린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의 식품회사 바이오준(Biozoon)은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여 고령자가 쉽게 씹을 수 있으면서 외형의 형태를 부여하여 제조하는 방안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응용과학기술연구소(TNO)는 이탈리아 파스타 제조업체인 바릴라(Barilla)와 협력하여 압출방식을 사용한 파스타 생산용 3D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또한, 미국 육군 연구기관인 Natick Soldier Research, Development & Engineering Center는 개인 맞춤형 전투식량을 제조하기 위해 3D Printer 개발을 진행 중이며, Holy Cross 대학의 Darryl Holliday 교수 연구팀에서는 소고기 패티 대량생산용 3D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다. 식품 산업 중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식품 생산과 유통구조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식품 소재의 경우 성분과 성질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제한적인 형태로 연구 개발되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 고령친화식품은 고령화가 진전 될수록 니즈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친화식품을 미래 식품산업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함으로써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회적 질병비용을 절감하고, 고령층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식품소비의 주역이 될 고령층의 식품소비패턴과 소화능력 정도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고령층의 식품소비 니즈를 파악하게 하며, 앞으로 고령친화식품 시장이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과 제도, 정책 현황을 파악해야한다. 또한 이들 식품을 생산할 식품기업의 대응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고령친화식품시장이 활성화 될 수 이도록 노력해야한다.

○ 충북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고령친화식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업은 이러한 고령친화식품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면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4 금융산업과 가계금융부분

○ 본 절에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금융부문 생활환경 변화와 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에 앞서 충북지역의 금융생활에 기본 배경이 되는 금융기관 점포수와 여수신구조 및 가계금융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융기관 점포수

○ 충북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예금은행+비은행)는 2013년 902개까지 증가한 후 2014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17년 말 기준 총 834개의 점포만 남아있게 되었고, 이는 2010년(867개)보다 감소한 규모이다. 이러한 금융기관 점포수의 감소는 전국적으로 2013년~2014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2013년 대비 2017년 전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11.7%가 감소한데 반해 충북지역은 7.5% 감소에 그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점포 중 충북의 금융기관 점포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2010년 2.6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2.83%로 2010년 대비 0.13%포인트 증가하였다.

○ 충북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경우 2012~2103년 152개 점포였으나 2014년 2개 점포가 증가한 이후 매년 점포가 감소하여 2017년 말 기준 142개 점포만 남아있었다. 특히 예금은행 중 특수은행의 증감은 거의 없으나 4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을 중심으로 한 감소가 뚜렷하였다. 이러한 금융기관 점포의 감소 추세는 비은행금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2010년 728개였던 점포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 750개였으나 2014년에 22개 점포가 감소하면서 지난 4년에 걸쳐 증가했던 점포가 단 일년만에 감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후에도 매년 점포수가 감소하여 2017년 말 기준 692개 점포만 남아있게 되었다. 예금은행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서민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수 감소가 금융소외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표 Ⅲ-14〉 충북지역 금융기관 점포수 변화

(단위: 개, %)

	2010	2011	2012	2013(A)	2014	2015	2016	2017(B)	B-A
전국	33,221	33,559	33,623	33,392	31,772	31,087	30,596	29,477	
(증감)		(338)	(64)	(△231)	(△1,620)	(△883)	(△491)	(△1,119)	(△3,915)
									(△11.7%)
충북	867	895	900	902	882	863	844	834	
(증감)		(28)	(5)	(2)	(△20)	(△19)	(△19)	(△10)	(△68)
									(△7.5%)
(전국대비 비중)	(2.61)	(2.67)	(2.68)	(2.70)	(2.74)	(2.78)	(2.76)	(2.83)	(0.13%p)
예금은행	139	146	152	152	154	151	145	142	△10
일반은행	77	82	87	88	90	87	80	77	△11
4대 은행)[1]	(67)	(72)	(77)	(79)	(81)	(83)	(76)	(73)	(△6)
특수은행[2]	62	64	65	64	64	64	65	65	1
비은행금융기관[3]	728	749	748	750	728	712	699	692	△58

1) KB국민 · 신한 · 우리 · KEB하나은행
2)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3) 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각년도 금융기관 점포현황(2017년말 기준 자료까지만 공개되어 있음)

○ 아래의 〈표 Ⅲ-15〉는 충북의 금융기관 점포수 변화를 인구수변화와 함께 살펴본 것으로, 2013-2017년 사이 전국의 인구가 1.2% 증가한 것에 비해 충북은 1.4% 증가하여 전국 대비 0.2%포인트 더 증가하였다. 인구수를 점포수로 나누어 1개 금융기관 점포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평균 1개 점포당 인구수는 1,757명이었고 충북지역의 경우는 1,912명이었다. 즉, 충북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개 점포당 인구수가 155명이 더 많은 것이다.

〈표 Ⅲ-15〉 충북지역 금융기관 점포수(예금은행+비은행)와 비중 및 1개 점포당 인구수

(단위: 개, %, %p)

		2013(A)	2014	2015	2016	2017(B)	증감 (B-A)	증감률
금융기관 점포수	전국	33,392	31,772	31,087	30,596	29,477	(△3,915)	(△11.7%)
	충북	901	882	863	844	834	(△68)	(△7.5%)
인구수 (만명)	전국	5.114.1	5,132.8	5,152.9	5,169.6	5,177.9	63.7	1.2%
	충북	157.3	157.9	158.4	159.2	159.4	2.2	1.4%
1개 점포당 인구수 (명)	전국	1,531	1,616	1,658	1,690	1,757	255	14.7%
	충북	1,744	1,790	1,835	1,886	1,912	168	9.6%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통계청 인구통계

○ 또한 〈표 Ⅲ-16〉은 2018년 3분기 및 2019년 3분기 기준 4개 시중은행(KB국민 · 신한 · 우리 · KEB하나은행)의 점포수와 1개 점포당 인수를 나타낸 것이다. 4개 시중은행의 전국 점포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감소한 반면 인구는 비수도권에서만 감소하였고, 1개 점포당 인구수는 수도권의 경우는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1개 점포당 인구수는 1만명대인 반면 비수도권의 1개 점포당 인구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만명대에 머물렀다. 충북의 경우 4개 은행 점포수는 72개로 2017년 말 기준 1개 점포가 감소하였고(표 Ⅲ-14 참고), 인구수는 약간 증가하여 1개 점포당 인구수도 약간 증가하였다.

〈표 Ⅲ-16〉 충북지역 4개 시중은행 점포수와 비중 및 1개 점포당 인구수

(단위: 개, %)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증감	증감률
4개 시중은행 점포수	전국	3,558	3,572	△313	△8.1%
	수도권	2,446(68.7%)	2,436(68.2%)	△10	△0.4%
	비수도권	1,439(31.3%)	1,136(31.8%)	△303	△21.1%
	(충북)	72	72	-	-
인구수	전국	5,181.8	5,184.9	3.1	0.1%
	수도권	2,577.3	2,590.4	13.1	0.5%
	비수도권	2,604.4	2,594.5	△10.0	△0.4%
	(충북)	159.7	159.9	0.3	0.2%
1개 점포당 인구수 (명)	전국	14,564	14,515	△49	△0.3%
	수도권	10,537	10,634	97	0.9%
	비수도권	23,421	22,839	△582	△2.5%
	(충북)	22,177	22,213	36	0.2%

주: 4개 시중은행 – KB국민 · 신한 · 우리 · KEB하나은행
자료: 이지경제(http://www.ezyeconomy.com), 재구성

○ 이상과 같은 충북의 금융기관 점포수 감소 추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점포 감소폭에 비해 적지만 1개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응대해야 하는 금융소비자의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지역별 금융생활 수준의 불균형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2020)에서도 오프라인 지점의 축소와 온라인화 등으로 고령층 금융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듯이,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점포수 감소는 고령층의 금융생활 고충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2) 금융기관 여수신 구조

(1) 금융기관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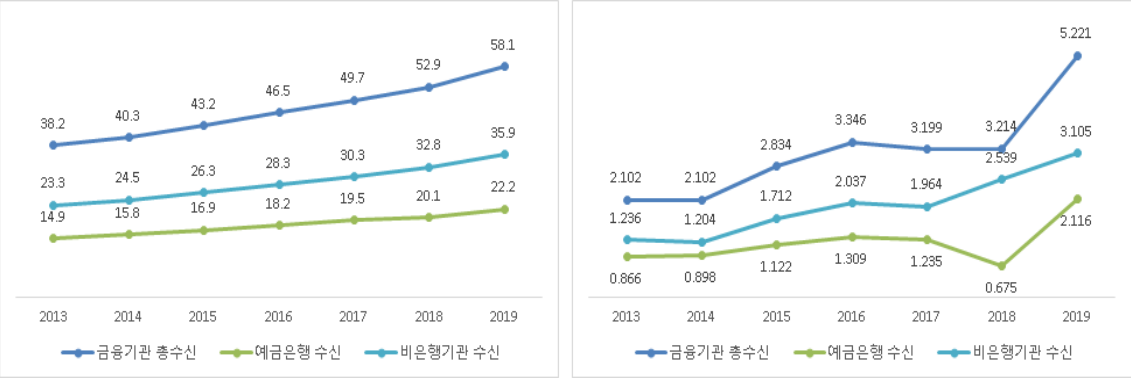
○ 〈표 Ⅲ-17〉와 〈그림 Ⅲ-15〉는 충북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을 나타낸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충북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58.1조원이고, 이 중 은행 수신은 22.2조원(38.2%),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35.9조원(61.8%)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액이 은행금융기관 수신액보다 많다. 최근 7년(2013년~2019년) 동안의 충북지역 수신 증가율은 평균 7.1%이고, 비은행수신의 증가율(7.2%)이 은행수신 증가율(6.8%)보다 크다.

〈표 Ⅲ-17〉 충북지역 금융기관 수신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융기관 총수신	38.2	40.3	43.2	46.5	49.7	52.9	58.1
	(5.8)	(5.5)	(7.0)	(7.8)	(6.9)	(6.5)	(9.9)
은행 수신	14.9	15.8	16.9	18.2	19.5	20.1	22.2
	(6.2)	(6.0)	(7.1)	(7.7)	(6.8)	(3.5)	(10.5)
비은행 수신	23.3	24.5	26.3	28.3	30.3	32.8	35.9
	(5.6)	(5.2)	(7.0)	(7.8)	(6.9)	(8.4)	(9.5)

주: 연말 기준 잔액,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충북지역 경제동향



〈그림 Ⅲ-15〉 충북지역 금융기관 수신 현황 (좌: 연말잔액, 우: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충북지역 경제동향

(2) 금융기관 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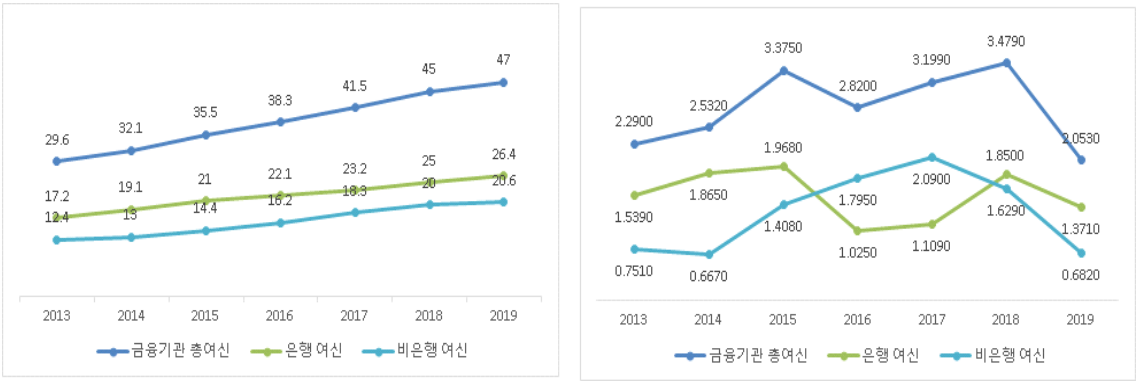
○ 충북지역의 금융기관 여신은 〈표 Ⅲ-18〉와 〈그림 Ⅲ-16〉와 같다. 2019년 말 기준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47조원이고, 이 중 56.2%는 은행대출(26.4조원)이고 43.8%는 비은행기관의 대출(20.6조원)로 은행대출이 비은행대출보다 많았다.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충북지역 여신은 평균 8.1% 증가하였는데, 비은행대출은 8.6% 증가하였고 은행대출은 7.8%가 증가하여 비은행기관의 대출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2018년 사이 비은행여신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기존의 39%였던 법정최고금리가 2014년부터 34.9%로 낮아진 것도 일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Ⅲ-18〉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신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융기관 총여신	29.6	32.1	35.5	38.3	41.5	45.0	47.0
	(8.4)	(8.6)	(10.5)	(7.9)	(8.4)	(8.4)	(4.6)
은행 여신	17.2	19.1	21.0	22.1	23.2	25.0	26.4
	(9.8)	(10.8)	(10.3)	(4.9)	(5.0)	(8.0)	(5.5)
(기업대출)	10.2	11.0	11.8	12.5	13.4	14.5	15.5
	(13.4)	(7.3)	(7.7)	(5.3)	(7.7)	(8.0)	(7.1)
(가계대출)	6.7	7.7	8.6	9.1	9.4	10.1	10.6
	(4.8)	(14.5)	(11.9)	(5.3)	(3.0)	(8.3)	(4.2)
(주택담보대출)	4.2	5.1	5.8	6.0	6.0	6.4	6.6
	(6.6)	(20.9)	(13.2)	(3.6)	(0.2)	(6.4)	(4.0)
비은행 여신	12.4	13.0	14.4	16.2	18.3	20.0	20.6
	(6.5)	(5.4)	(10.8)	(12.4)	(12.9)	(8.9)	(3.4)
(기업대출)	1.8	1.7	2.2	2.7	3.8	4.6	5.5
		(△7.2)	(26.5)	(23.6)	(43.1)	(20.7)	(19.6)
(가계대출)	7.3	8.0	9.0	10.4	11.4	12.2	12.6
	(10.0)	(9.5)	(12.3)	(15.7)	(9.2)	(7.1)	(3.4)
(주택담보대출)	2.6	2.9	3.2	3.5	3.5	3.7	3.3
	(7.6)	(8.3)	(10.8)	(10.6)	(1.3)	(3.2)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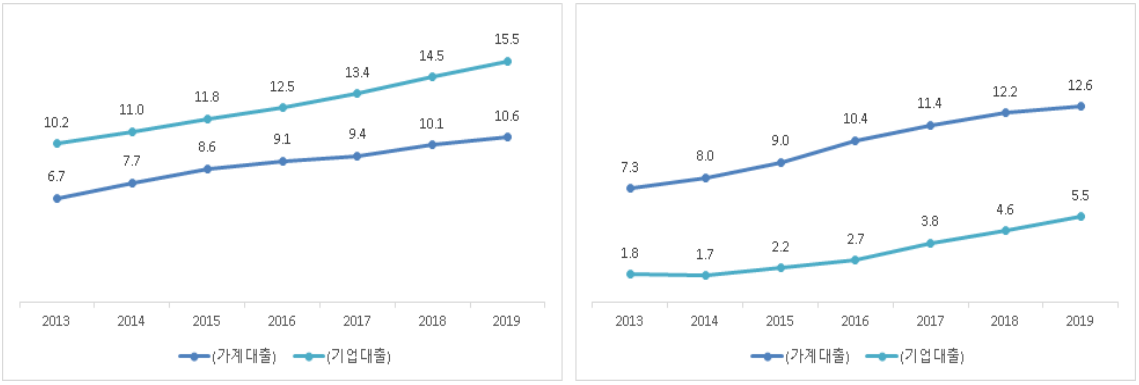
주: 연말 기준 잔액,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충북지역 경제동향



〈그림 Ⅲ-16〉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신 현황 (좌: 연말잔액, 우: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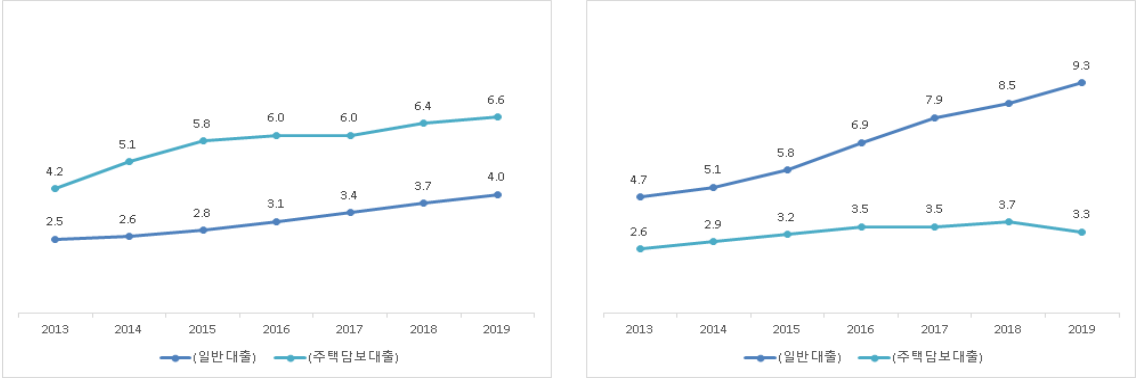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충북지역 경제동향

○ 여신종류별로는 가계대출(23.2조원)이 기업대출(21조원)보다 큰데, 대출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은행에서는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많고, 비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더 많다(그림 Ⅲ-17). 특히 비은행에서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차이는 은행 대출에서의 차이보다 크다. 이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포함된 비은행기관에서는 기업보다는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비은행기관에서의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일반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Ⅲ-18). 은행에서의 일반가계대출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적은 규모인 반면, 비은행기관에서의 일반가계대출 규모는 최근 7년 사이 2배(2013년 4.7조원 → 2019년 9.3조원)까지 규모가 급격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2~3년 사이 약간 감소하였다. 즉, 충북지역의 많은 가계들이 은행기관보다는 비은행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는 일반가계대출은 비은행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Ⅲ-17〉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좌: 은행, 우: 비은행)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충북지역 경제동향



〈그림 Ⅲ-18〉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방가계대출 (좌: 은행, 우: 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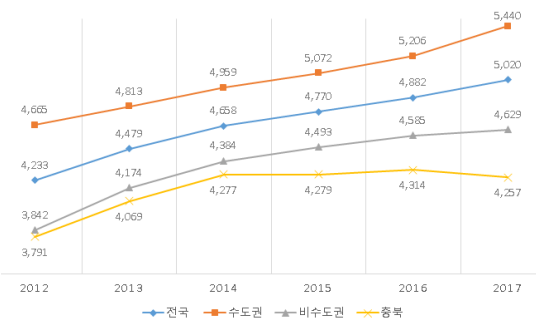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충북본부, 충북지역 경제동향

(3) 가계금융 구조

① 가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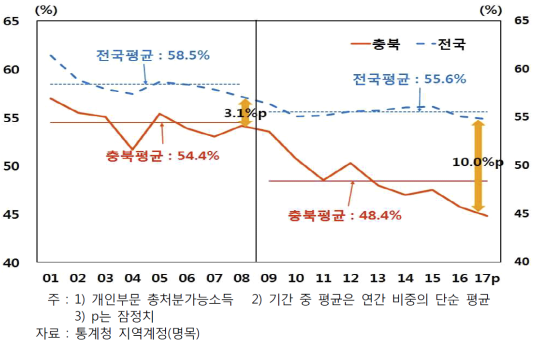
○ 〈그림 Ⅲ-19〉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2012년~2017년의 가계소득(경상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충북지역의 가계소득은 전국 가계소득의 평균은 물론 비수도권 가계의 평균 소득과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및 비수도권 평균 가계소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충북지역의 가계소득은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또한 김광민, 이창민(2019)은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에서 가계소득(개인

부문 총처분가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는데, 2001년부터 계속해서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격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0).



〈그림 Ⅲ-19〉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월평균 가계소득 (만원)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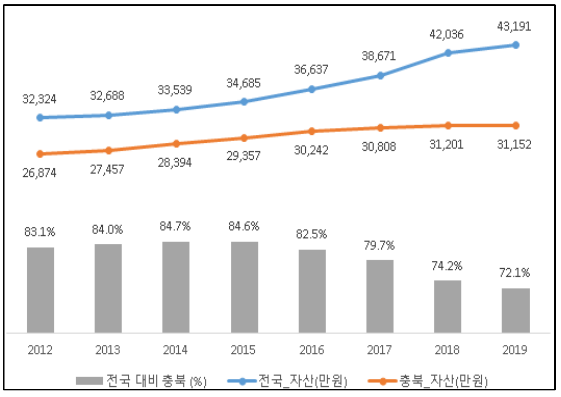


〈그림 Ⅲ-20〉 충북지역 가계소득/지역내총생산 비중(%)

출처: 김광민, 이창민(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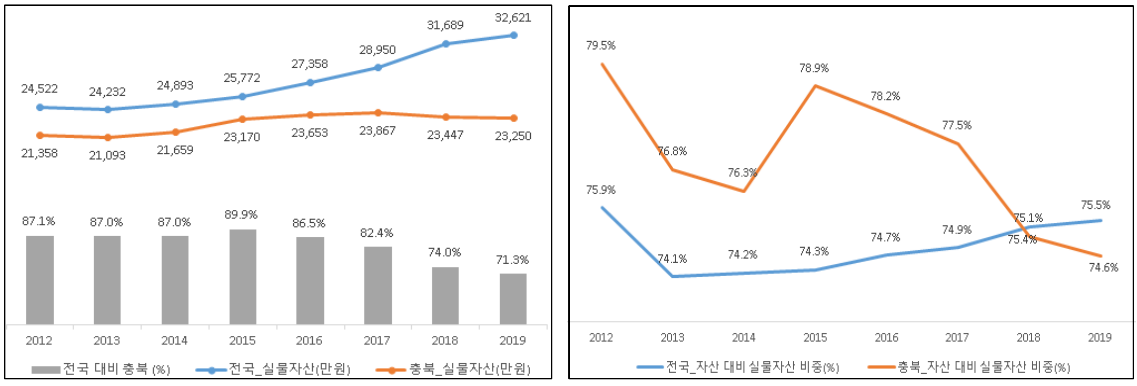
② 가계자산

○ 충북에 거주하는 가계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의 증가추세와 비교하면 가계자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Ⅲ-21〉은 통계청의 금융복지조사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전국과 충북의 평균 가계자산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자산의 75~80%를 차지하고 있는 실물자산도 총자산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2018~2019년 사이에는 오히려 더 감소하여 전국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실물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그림 Ⅲ-22). 또한 전국의 실물자산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충북지역의 경우는 2015년 한번의 증가가 있을 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충북지역의 가계가 주택연금과 같은 자산유동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 2018년 12월 말 기준 충북의 주택매매가격은 1㎡당 1,387천원이었는데 이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평균(1㎡당 3,308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림 Ⅲ-21〉 충북지역 가계자산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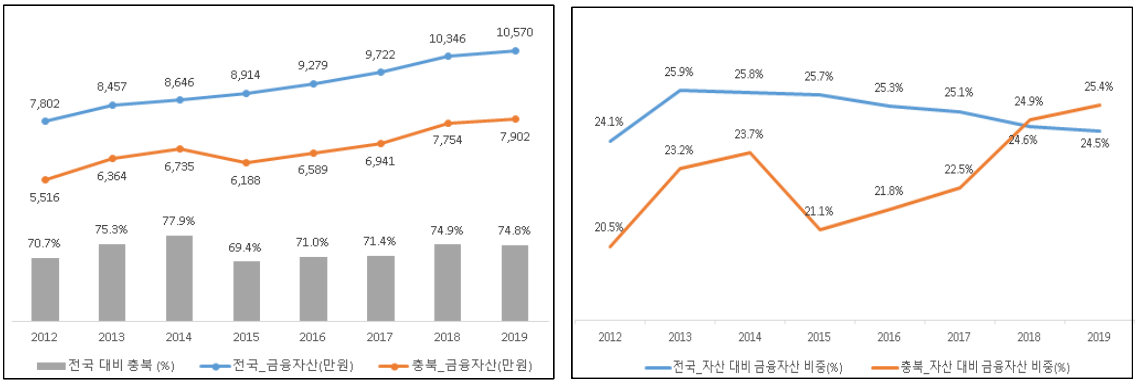
(좌) 실물자산 평균액 및 전국평균대비 비중 (우)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Ⅲ-22〉 충북지역 가계자산 – 실물자산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편으로는 인구고령화로 늘어난 노후기간에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실물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그림 Ⅲ-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북지역의 금융자산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국에 가장 빠르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충북에서 이미 많은 고령자들이 생활비 확보를 위해 보유한 실물자산을 유동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즉, 실물자산 절대액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실물자산이 적어 더 많은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도내의 실물자산 가치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부동산 유동화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23〉 충북지역 가계자산 – 금융자산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Ⅲ-19〉 충북지역 가계의 자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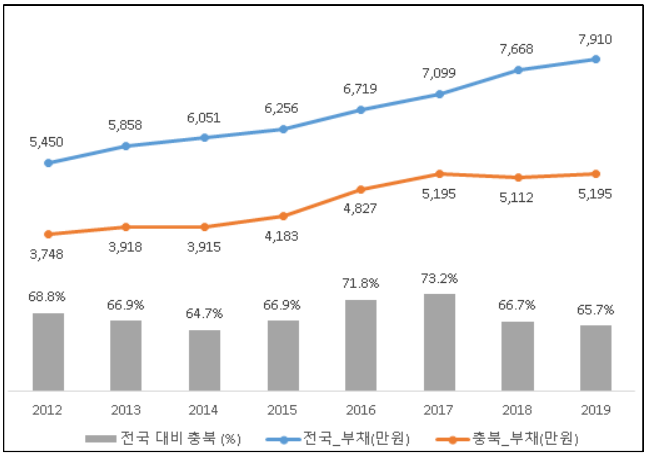
(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총자산(만원)	32,324	32,688	33,539	34,685	36,637	38,671	42,036	43,191
	금융자산(만원)	7,802	8,457	8,646	8,914	9,279	9,722	10,346	10,570
	실물자산(만원)	24,522	24,232	24,893	25,772	27,358	28,950	31,689	32,621
충북	총자산(만원)	26,874	27,457	28,394	29,357	30,242	30,808	31,201	31,152
	금융자산(만원)	5,516	6,364	6,735	6,188	6,589	6,941	7,754	7,902
	실물자산(만원)	21,358	21,093	21,659	23,170	23,653	23,867	23,447	23,25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③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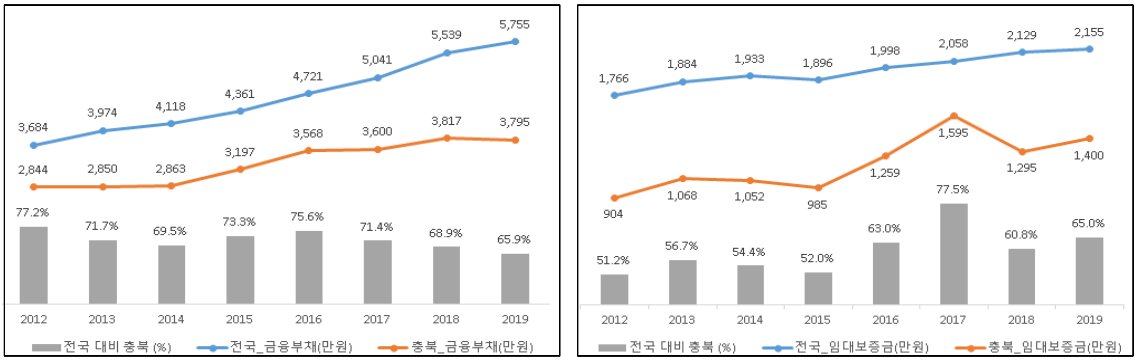
○ 〈그림 Ⅲ-24〉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살펴본 충북지역의 가계부채이다. 충북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전국 부채수준에 비해 크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년 동안은 증가세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7년까지는 전국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약간 높다. 실제 2009-2017년 충북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8.5%로 전국 7.4%보다 높았다.



〈그림 Ⅲ-24〉 충북지역 가계부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는 가계부채를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금융부채의 증가세는 총부채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지만 임대보증금은 다소 다르며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그림 Ⅲ-25-(우)). 눈에 띄는 변화는 2015년 이후 임대보증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인데, 관련 요인 중 하나는 전세가율 상승을 들을 수 있다. 실제 이 시기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일부 지역에서 90%가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었다(충북일보, 2017.8.30.). 2018년에 임대보증금이 감소한 것은 당시 청주지역에 1만 4천가구 이상의 신규 입주로 잠시 하락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 성공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로 전세물량 부족은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Ⅲ-25〉 충북지역 가계부채 - (좌) 금융부채 (우) 임대보증금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Ⅲ-20〉 충북지역 가계의 부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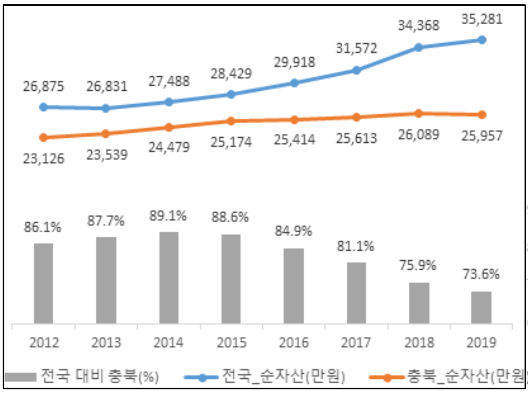
(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총부채(만원)	5,450	5,858	6,051	6,256	6,719	7,099	7,668	7,910
	금융부채(만원)	3,684	3,974	4,118	4,361	4,721	5,041	5,539	5,755
	임대보증금(만원)	1,766	1,884	1,933	1,896	1,998	2,058	2,129	2,155
충북	총부채(만원)	3,748	3,918	3,915	4,183	4,827	5,195	5,112	5,195
	금융부채(만원)	2,844	2,850	2,863	3,197	3,568	3,600	3,817	3,795
	임대보증금(만원)	904	1,068	1,052	985	1,259	1,595	1,295	1,4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④ 가계 순자산

○ 충북지역 가계의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앞서 살펴본 충북지역 가계자산의 흐름(그림 Ⅲ-21)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계자산에서 부채를 청산하고 순수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전국가계의 평균과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Ⅲ-26〉 충북지역 가계 순자산(자산-부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Ⅲ-21〉 충북지역 가계의 순자산

(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_순자산(만원)	26,875	26,831	27,488	28,429	29,918	31,572	34,368	35,281
충북_순자산(만원)	23,126	23,539	24,479	25,174	25,414	25,613	26,089	25,95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3) 충북도민의 금융생활에 대한 만족도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역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맞춤형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2019년 조사결과에서 총 11개 소비생활 분야(식품외식, 주거가구, 금융보험, 병원의료, 교육, 의류, 자동차, 문화여가, 정보통신, 관혼상제, 미용생활위생) 중 금융생활 분야를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소비생활에서 의, 식, 주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표 Ⅲ-22). 특히, 충북도민들은 금융 생활 분야를 식생활(식품 · 외식)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기준 대비 금융 생활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금융 분야에 대한 소비생활 만족도는 11개 소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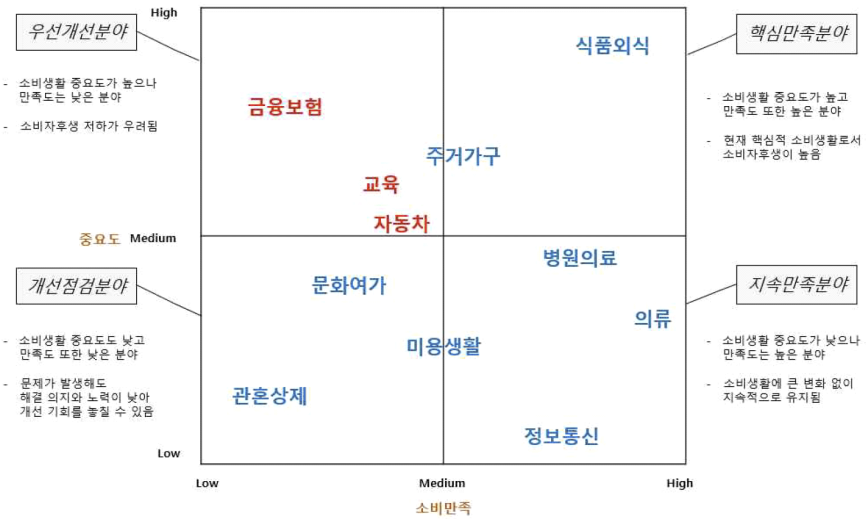
분야 중 '관혼상제' 분야를 제외하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관련 소비자문제 경험률은 11개 소비생활 분야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문제 경험률은 2017년(5.6%) 대비 10.9%p가 증가(16.5%)하였는데 이는 11개 소비생활 영역 중 가장 큰 증가였고 전국 대비 2.5배에 달하는 증가였다. 즉, 충북도민들은 여러 소비생활 영역 중 금융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소비생활 만족도는 매우 낮고 특히 관련 소비자문제를 경험하는 비율도 매우 높은 것이다.

〈표 Ⅲ-22〉 충북도민의 금융생활에 인식(2019년)

		식품 외식	주거 가구	금융 보험	병원 의료	교육	의류	자동차	문화 여가	정보 통신	관혼 상제	미용 생활 위생
금융생활에 대한 중요도 인식(%)	충북	59.7	35.6	39.4	27.3	29.5	23.8	27.6	24.4	6.7	12.7	13.3
	(순위)	(1)	(3)	(2)	(6)	(4)	(8)	(5)	(7)	(11)	(10)	(9)
	'17년 대비 증감	-6.9	-1.9	-0.6	5.3	0.8	7.7	1.1	-8.7	5.7	3.6	-6
	전국	64.1	36.1	34.2	29.6	28	27.4	24.2	22.8	12	10.9	10.8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7년 대비 증감	0	5.0	-4.7	-2.7	0.1	10.3	-1.2	-8.3	2.6	0.9	-3.1
금융생활에 대한 만족도 (점/100점)	충북	72.6	70.8	68.7	71.4	69.8	72.9	69.9	69.5	71.2	66.4	70.6
	(순위)	(2)	(5)	(10)	(3)	(8)	(1)	(7)	(9)	(4)	(11)	(6)
	'17년 대비 증감	6.1	6.2	6.1	5.2	7.2	3.1	6.9	6.8	5.1	8.3	4.4
	전국	71	70.3	67.9	70.8	70.2	70.9	68.5	69.2	69.9	68.2	70.3
	(순위)	(1)	(4)	(11)	(3)	(6)	(2)	(9)	(8)	(7)	(10)	(4)
	'17년 대비 증감	7	6.3	6.8	5.8	5.1	5.7	7.6	6.7	6	5.7	6
금융생활에 대한 소비자문제 경험률(%)	충북	25.4	12.4	16.5	14.3	9.5	13.7	13.7	11.4	17.1	5.7	7.3
	(순위)	(1)	(7)	(3)	(4)	(9)	(5)	(5)	(8)	(2)	(11)	(10)
	'17년 대비 증감	-8.5	-2.3	-10.9	-5.9	-5.6	1.5	-4.1	-0.7	-5.3	-0.6	-1.1
	전국	33.5	18.8	17.8	17.1	12.5	21.1	15.4	16.7	21.5	10.5	12.8
	(순위)	(1)	(4)	(5)	(6)	(10)	(3)	(8)	(7)	(2)	(11)	(9)
	'17년 대비 증감	-5.4	2.9	-4.2	4.7	0.9	3.7	2.1	-1	0.1	1.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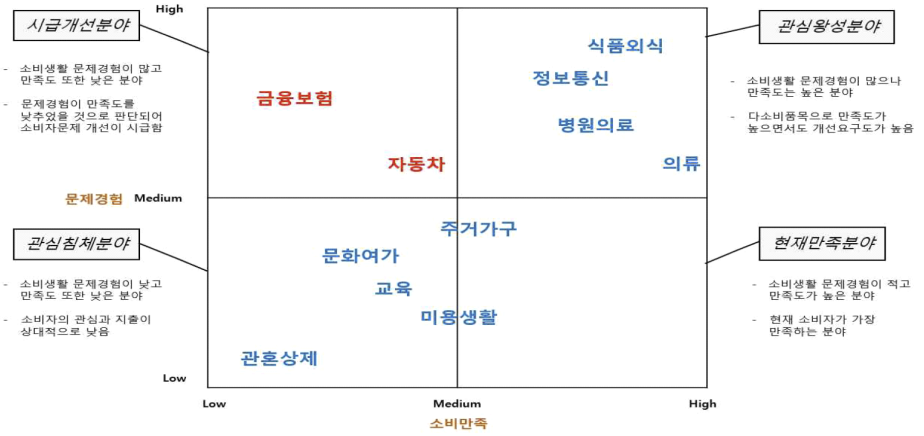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 이러한 결과에 대해 소비생활지표를 산출한 황미진, 배순영(2019)은 전국적으로 금융생활분야는 과거에 비해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매우 낮고 소비자문제경험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생활분야의 시장 개선 시책 마련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충북지역만을 분석한 황미진 등(2020)의 연구에서도 금융생활분야를 11개 소비생활 영역 중 시급하면서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하는 분야로 분류하였다.



〈그림 Ⅲ-27〉 11개 분야별 충북지역 소비생활 만족도와 중요도

출처 : 황미진·배순영·전상민.(2020).「충북지역 소비생활문제 진단과 과제」



〈그림 Ⅲ-28〉 11개 분야별 충북지역 소비생활 만족도와 소비자문제 경험률

출처 : 황미진·배순영·전상민.(2020).「충북지역 소비생활문제 진단과 과제」

4)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변화와 문제점

○ 저출생 · 고령화는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그리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요약된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부양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감소된 지출은 1명의 자녀를 위한 고급소비의 증가 또는 자녀가 없는 대신 부부 또는 비혼인 경우 본인을 위한 소비의 증가로 대체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세수입의 감소로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소비감소와 노동력감소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소비의 감소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는 기업의 투자율을 하락시키게 되어 자본축적이 둔화되어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공적연금이나 사회복지 등의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기 보다는 축적된 자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은퇴자와 고령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저축률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자본축적의 둔화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중시킨다. 반면 젊은 세대들이 점점 길어지는 수명과 불확실해지는 노후생활비를 위해 더 많은 저축을

하게 되면서 경상수지의 흑자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변화는 거시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으나,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측면에 앞서 가계(개인)의 금융관련 의사결정에서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1) 노후대비 목적의 저축 증가

○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는 가계에서 저축을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출산율의 하락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저축에 대한 여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 양육비에 대한 부담 감소는 부부 또는 본인을 위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축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개인을 위한 지출 증가보다는 자신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이유로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와 인식의 변화, 노후 생활의 주소득원이 될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불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에 대해서는 노년부양비에 대한 전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충북의 노년부양비는 2020년 현재 23.9로, 노인 1인을 부양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4.2명이 부담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25년 후(2045년) 충북의 노년부양비는 75.6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1.3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 보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노인부양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악화로 개인에게 돌아올 혜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계의 노후대비 저축 증가의 동기가 된다.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재원을 부과방식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변화는 가계의 경제 악화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부족한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해 사회에 대한 기대도,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도 어렵게 되며, 이것이 스스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저축률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여 무병장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장수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포함한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하므로 노후대비 목적의 저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저축가능 인구의 감소

○ 저축은 소득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감소하여야 한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유소년기에는 부모에 의존한 소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 나이가 되면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며 은퇴 후에는 축적 자산을 처분하거나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저축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로 저축보다는 인출을 하는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저축은 감소할 것이다.

○ 앞에서 설명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상승은 생산가능인구의 저축행동, 즉 은퇴하기 전의 개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전체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생각하려면 생산가능인구의 저축변화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의 저축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생산가능인구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미 축적한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평활화를 하려는 고령층은 저축을 줄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저축률과 고령인구의 저축률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 인구비중이 더 큰 고령인구의 저축률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결국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변화는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노인부양률이나 고령인구 비중이 상승하면 가계저축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창균, 2005; 최공필 등, 2005; 윤경수 등, 2017; 김병덕·이석호. 2011 등). 특히 윤경수 등(2017)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소득 대비 저축의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35년 고령층의 저축률이 2016년 대비 0.96배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3) 높은 실물자산 비중과 낮은 자산유동화

○ 가계의 자산구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은 낮아진다. 특히 60대 이상은 총자산의 80% 이상을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거주주택 자산이 60% 가까이 된다. 물론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도 노후기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고령인구가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물자산을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이 보유한 자산의 유형(금융자산, 거주주택 이외의 자산, 거주주택자산)을 단계적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경우 원하는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을 처분할 경우 금융자산은 2.7년,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은 6.4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반해 거주주택자산을 처분할 경우 26.3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민정, 2011). 즉, 보유하고 있는 거주주택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경우 매우 긴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을 유동화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주택연금제도이다. 주택연금제도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노후자금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된다. 그러나 충북의 주택연금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 〈표 Ⅲ-23〉은 2020년 6월 기준 충북지역의 주택연금 활용 현황이다. 2020년 6월 기준 충북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1,189명으로 전국의 이용자 대비 1.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용자의 평균연령도 충북은 73세로 전국 평균(72세)보다 1살이 높고, 평균 1억 6천만 원 정도의 주택으로부터 월평균 6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어 전국의 주택연금 대상 주택(3억 원)과 월평균 수령액(102만 원)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표 Ⅲ-23〉 충북의 주택연금 이용현황(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충북
평균연령[1]		72세	73세
평균 월 지급금		102만 원	60만 원
평균 주택가격		3백만 원	1백만 원
가입자 수 (전국 대비 비중)[2]		76,158명	1,189명 (1.60%)
지급방식	종신지급	64.4%	54.8%
	종신혼합	22.3%	9.8%
	확정혼합	1.2%	3.7%
	사전가입	0.8%	0.4%
	대출상환	2.7%	2.0%
	우대지급	6.6%	26.7%
	우대혼합	2.0%	2.7%
	계	100.0%	100.0%

1) 부부 중 연소자 기준
2) (지역 가입자수/전국가입자수x 10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이용현황」

(4) 노후자금 운용 방법의 변화

○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관리의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 종신연금 형태이다. 즉, 노후생활을 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이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융상품이 필요하다.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연금은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택연금 활용도도 높지 않다. 다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축적된 노후자산의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노후시기에는 원금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자산을 안전금융자산과 위험금융자산(투자자산)으로 구분할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다. 고령인 경우 투자자산에 투자하였다가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고령자들은 투자에 익숙하지 않아 위험선호성향이 높지 않은 이유도 있다. 따라서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위험선호도가 감소하여 투자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즉, 고령화에 따른 자산가격붕괴가설(asset price meltdown hypothesis)의 주장에 기인한다.

○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투자자산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Poterba, 2001; Brooks, 2006; 손홍선, 정광수, 2017; 윤경수 등, 2017). 손홍선, 정광수(2017)는 은퇴하면서 급하게 투자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간접투자자산을 직접투자자산보다 먼저 하고 간접투자자산의 경우도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 형태 자산을 더 우선하여 처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절세전략, 비상지출을 위한 예비적 자산으로서의 역할 중시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와 가계의 금융자산별 보유 비중을 분석한 윤경수 등(2017)에 의하면, 인구구조가 고령화될수록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금융자산은 감소하고 펀드와 같은 투자자산은 물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펀드증가율은 65세 기준으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75세 이상 인구 비중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노년 초반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비중을 늘리지만, 노년 후반에는 그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는 노년 초반에는 수익성도 고려하지만 연령이 더 높아지면서는 자산관리를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 또한 은퇴기간동안 소비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축적된 자산을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고갈되지 않고 잘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가장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찾아내는 이른바 은퇴자산 인출전략 연구를 수행한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노후자산의 일정 부분을 위험금융자산으로 배분하는 포트폴리오가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면서도 더 오랜 기간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결과들은 위험금융자산은 변동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금융자산의 비중을 계속해서 증가시킬수록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면서 더 오랜기간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임계점이 발생하며, 안전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서 은퇴기간동안 자산의 고갈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김민정, 2009; Bengen, 1994, 2001; Evensky & Katz, 2006).

○ 이상의 내용에 기초할 때, 고령화에 따른 금융자산 중 투자자산의 비중은 위험선호 성향을 기본으로 하지만 노후자금의 충분성, 특히 연금형태의 노후대비 여부,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경험(직접/간접), 상속동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은퇴한 고령자들이 많지 않은데 평균수명은 길어져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자금을 안전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앞으로 고령으로 접어들 현재의 40~50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고, 직접투자건 간접투자건 투자에 대한 경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투자상품을 포함한 노후자금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5) 의료비 지출의 증가

○ 고령화에 따른 가계금융에서의 다른 변화는 의료비 지출의 증가이다.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채림과 이태진(2017)에 따르면 2003년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약 40만 원 정도였는데 2012년에는 약 74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장래 의료비를 추계한 이현복, 이수연(2019)은 2060년에 노인의료비 규모가 GDP 대비 약 5% 내외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건강한 노인일 경우 의료비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의료비로 인한 지출 감소 및 사회복지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강화와 민영보험사의 논의료비 대비를 위한 소비자 친화적인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노인의료비 중 생애말기 의료비 증가를 강조한 오승연과 이정택(2016)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명 연장 등의 생애 말기에 이루어지는 의료에 지출되는 비용이 일반 국민 의료비의 12년 치, 60세 이상 노인 의료비의 5년 치에 이른다고 하였고 이러한 금액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지출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생존기간의 증가로 인한 소득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로 경제적인 준비만 되어 있다면 무병장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준비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5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금융부문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

(1) 고령인구를 위한 금융환경 개선 노력

○ 충북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의 감소는 전국대비 감소폭이 적으나 일반 서민들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령층 중심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어 금융소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뱅킹으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점포가 없는 온라인 뱅크가 등장하고 오프라인 점포보다 높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취급되고 있는 등 디지털금융 확대로 인해 고령층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읍면단위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여전히 점포를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과거에 비해 노인들도 이체나 출금 등의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용하는 데에 더 많은 정보와 복잡성이 존재하는 금융상품 가입이나 신규대출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참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점포를 폐쇄할 때에는 사전에 노인이용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대체창구를 사전적으로 제공하여 익숙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가 예정된 점포를 방문하는 노인들이 온라인 또는 대체창구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노인들을 위한 온라인 또는 대체창구 이용 교육을 위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충북지역의 각 금융기관들이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서포터즈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봉사의 기회를 주면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부문에 관심있는 인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2) 충북지역 맞춤형 실물자산 유동화 상품 개발 및 주택연금 가입유도

○ 충북지역의 실물자산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그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실물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충북지역에서는 2015년 한차례의 상승이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있고 2018년에는 전국의 실물자산비중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이용현황은 평균연령은 1세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가입자수는 전국의 1.6%에 불과하고 대상주택의 가치는 전국대비 절반 수준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령하는 월지급금도 전국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지급방식 측면에서 보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인 종신지급비율이 전국대비 10%p 정도 낮고 종신혼합지급의 경우는 약 13%p가 낮다. 반면 일정 기간만 정해서 연금을 받는 확정형은 오히려 2.5%p가 높다. 물론 일반 지급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은 전국보다 약 21%p가 높은데, 이는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충북의 주택가격은 타지역에 비해 매우 변동성이 심하여 주택가치를 예상하기 어렵고 이것은 주택연금 가입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충북지역은 전국에서도 빠른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물론 고령자의 고용률이 전국보다 높기는 하지만 충분한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인들이 보유한 거주주택 자산을 이용하여 부족한 노후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농사를 짓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충북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로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실물자산을 이용한 소득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동성이 심한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지자체외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충북지역에 맞는 자산유동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노후자금마련과 노후위험보장을 위한 고령친화적 금융상품 개발과 노인케어 전문인력 양성

○ 충북지역의 고령인구가 타도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적연금이나 의료보험, 노인복지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적 금융상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령친화적 금융상품은 은퇴 후 소득확보를 위한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

연금)과 노인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위해 일정 부담금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관리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충북지역 내에 있는 산업체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설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부당한 근로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이다. 둘째,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종류가 다양하고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올바른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은퇴설계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가입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가입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충북도민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혜택 가능성을 진단하고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준비를 하도록 지원해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길어진 노후기간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다양한 질병위험에 노출되고, 이러한 질병위험은 사고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들어 인지능력이 떨어진 노인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는 운전능력이 저하된 노인운전자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면허증반납을 한 노인들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충북지역의 인구고령화에 대비하는 지자체의 노력일 것이다. 넷째, 최근 금융위에서는 노인들의 자산관리를 위해 후견지원신탁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 후견지원신탁은 치매환자 등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 정비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 관리 등에 투입될 요양관리사와 같은 노인케어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민,관,학 협업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지역맞춤형 재무금융교육 및 재무코칭 서비스 지원

○ 노인들의 금융생활은 복잡한 상품구조와 수많은 정보, 새로워진 금융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점차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금융교육교재나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도내 기관은 많지 않다. 그나마 충북경제교육센터에서 도민들을 위한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충주에 있는 금융감독원 충북지원과의 협업, 도내 대학의 유관 학과(예, 소비자학과, 경제학과, 사회교육과 등)와의 연계 등 보다 적극적인 노인금융교육 채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한 교육보다는 코칭의 개념을 많이 도입한다. 코칭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재무코칭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올해 5월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관리와 신용관리, 재무사태진단 등 1:1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재무코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상담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지역내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무건정성을 진단하고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고령층 금융소비자보호 노력

○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시행예정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고령층을 위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투자피해사례를 보면 개인투자자의 절반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이다. 투자금액으로만 보아도 60대 이상 개인투자자의 금액이 4,612억원으로 전체 투자금액(9,943억원)의 46.4%에 달한다(서울경제, 2020.02.23.). 젊은 금융소비자도 고수익에 대한 유혹에 취약한데 고령층의 경우는 노후자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욱 더 취약하게 되며 판매자의 불완전판매에 매우 노출되기

쉽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등 금융사기 문제도 고령층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청지역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하루 평균 2건이 발생할 정도 많았고 2020년 들어 1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청과 개별금융기관은 물론 일부대학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도내 노이들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노후기간동안의 자산관리 및 지출관리 서비스 지원

○ 노후시기에는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소득확보 이외에 연금소득이나 금융자산의 인출을 통해서 소득원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소득은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화되어 있지 않은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의 방법을 통해 소득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으로부터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인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필요한 기간 중에 인출해야 하는 금융자산이 고갈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금융자산으로부터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수익률에 따라 더 오랫동안 또는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금융시장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투자를 해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층이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하는 일이고 또 얼마의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계획했던 인출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계획했던 기간(은퇴기간, 노후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노후자금이 없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투자에 있어서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철저한 지출관리를 통해 계획했던 소비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으로 노후자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고령자라고 하여 통제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투자수익률을 높게 설정한 고령자는 매우 체계적이고 신중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반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자들이 이러한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고도의 체계

성을 필요로 하는 과정을 스스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종신형으로 지급받는 연금(주택연금 포함)이 생활비를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 및 지출통제와 관리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금융자문업자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전문인력은 재무설계전문가(재무설계사)를 들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자격으로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종합자산관리사(IFP), 자산관리사(은행FP) 등의 자격제도가 있다. 이중 CFP는 국제공인 자격으로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재무설계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되는 전문자격이다. 그런데 2020년 6월 기준 도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CFP 자격인증자는 37명에 불과하며 17개 지자체 중 15위이다. 이는 인근 지역(대전, 세종 등)에서 활동하는 CFP가 112명인 것에 비해 1/4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노후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금융인력 확보를 위해 충북 내 금융기관 종사자 중 금융전문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Ⅲ-24〉 전국 재무설계전문가(CFP/AFPK) 등록 현황(2020년 6월 기준)

지역	AFPK	점유율	순위	CFP	점유율	순위
서울	6,618	34	1	1,713	46	1
인천	792	4	6	106	3	7
부산	1,484	8	3	253	7	3
대전	626	3	8	89	2	8
대구	1,020	5	4	156	4	4
광주	683	4	7	113	3	6
울산	421	2	12	58	2	12
경기	3,919	20	2	700	19	2
강원	379	2	13	53	1	13
충남	458	2	11	67	2	9
충북	368	2	14	37	1	15
경남	921	5	5	136	4	5
경북	553	3	10	65	2	11
전남	305	2	15	53	1	13
전북	590	3	9	66	2	10
세종	97	1	17	23	1	16
제주	185	1	16	23	1	16
총합계	19,419	100		3,711	100	

자료: 한국FPSB, 「재무설계전문가 등록현황」

(7) 충북 주민의 금융생활부문의 복지향상을 위한 담당부서의 노력 필요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생활지표 분석에서 보았듯이, 충북주민들은 11개 소비생활 분야 중 금융생활은 주생활이나 의생활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생활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분야별 생활만족도와 소비자문제경험률은 좋지 못하였다. 충북의 금융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1개 소비생활분야 중 10위로 관혼상제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만족도였고, 소비자문제경험률은 3번째로 높았고 2017년 대비 10.9%p나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충북주민들의 금융생활 만족도 향상과 관련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생활 만족도 향상은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충북주민들이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해결창구에 대해 편리성 측면에서는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나 접근용이성과 신뢰성에 있어서는 전국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현재 충북도청 내에 있는 소비생활센터의 주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이전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Ⅳ장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활건강의 변화와 전망, 대응전략

1 교육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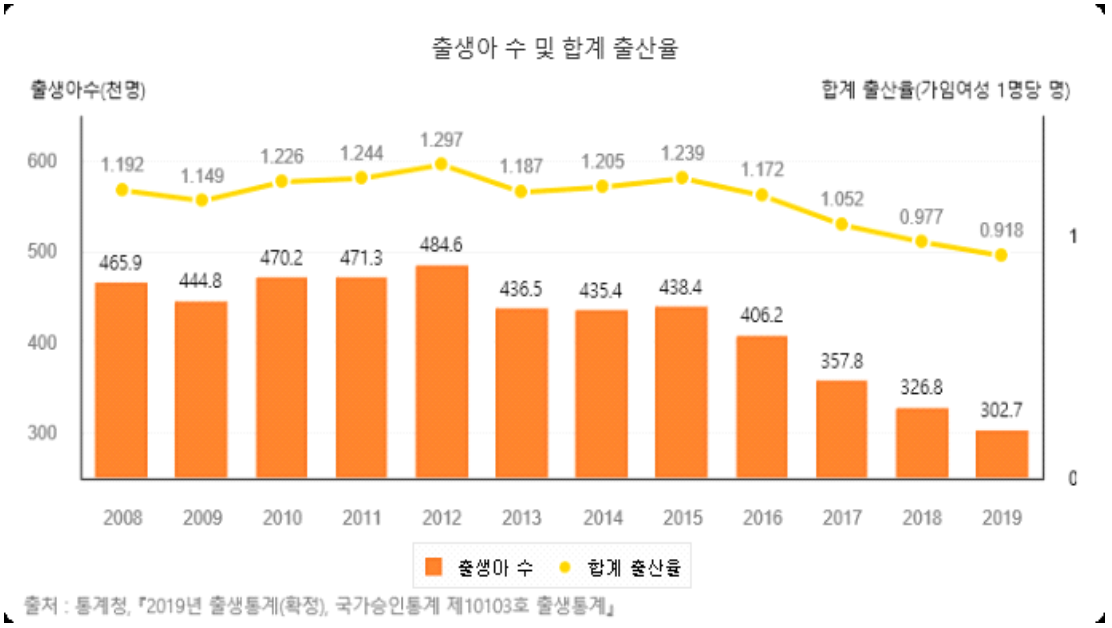
1) 저출생 관련 교육 이슈

(1) 현황

○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와 호모 에루디투스(homo eruditus)는 기술의 발전과 배움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표현한 것으로 '학습하는 인간', '박식한 인간'을 의미한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하며 생애기간 전체에 걸쳐 학습을 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사회는 이런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교육 환경은 단순히 학교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학교교육을 초월한 가정, 마을,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이 인간의 학습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고령인구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율 감소와 같은 인구특성의 변화는 유아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내용과 교육환경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의 변화는 단지 교육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사람간의 가치, 문화, 공동체 의식 등 유·무형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역적 차원에서 인구감소가 주는 영향은 장소로써 '지역'의 존재의의와 연결되며,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은 향후 교육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며,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은 지역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 인구특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0.977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1명 정도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이 1이하로 하락하고 있어, 합계

출산율로 보았을 때 유소년의 인구감소로 인해 미래세대의 교육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 충청북도의 상황에서 합계 출산율은 2015년에 1.4에서 2019년에는 1.05명으로 하락하였고,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1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혁신도시 조성으로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된 진천군의 경우가 1.4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각종 시책으로 인구유입을 강하게 하고 있는 증평군의 경우도 1.3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출생율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출생율의 하락은 0-14세의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별 유소년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교육 수요, 교육 환경 등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표 Ⅳ-1〉 충청북도 합계 출산율

시군구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충청북도	1.414	1.358	1.235	1.172	1.050
청주시	1.444	1.352	1.227	1.163	0.999
충주시	1.260	1.314	1.144	1.088	1.054
제천시	1.301	1.334	1.170	1.188	1.086
보은군	1.536	1.550	1.507	1.585	0.975
옥천군	1.254	1.277	1.026	0.894	0.957
영동군	1.210	1.192	1.621	1.575	1.325
진천군	1.620	1.412	1.346	1.331	1.426
괴산군	0.980	0.931	1.023	0.847	0.945
음성군	1.517	1.561	1.374	1.158	1.152
단양군	1.226	0.985	0.835	0.999	0.920
증평군	1.832	1.802	1.669	1.506	1.303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co.kr)

○ 교육통계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는 학생 수 감소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내 시군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증감 추이를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약 2만여 명이 감소하였다. 다만 혁신도시 유치 등 최근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진천군은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북의 모든 시군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인구가 출산에 의해서만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여건이나 환경과 같은 상황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감소는 상급학교 진학 시 교육 여건이 보다 유리한 곳으로의 이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Ⅳ-2〉 충청북도 학생 수 비교

(단위: 명)

행정구역	2015					2020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주시	123,188	10,361	50,083	29,134	33,851	108,630	8,790	50,284	24,162	25,406
충주시	27,153	2,228	10,521	6,647	7,860	23,513	2,313	10,311	5,204	5,685
제천시	17,858	1,748	6,588	4,194	5,443	14,468	1,623	6,228	3,168	3,476
보은군	3,322	294	1,206	850	972	2,595	250	1,067	580	698
옥천군	5,542	631	2,206	1,328	1,377	4,516	467	2,046	1,071	932
영동군	5,067	477	1,908	1,246	1,436	3,769	301	1,623	895	950
진천군	8,565	723	3,777	2,031	2,034	10,564	873	5,170	2,277	2,260
괴산군	2,597	245	1,117	729	506	2,061	189	1,007	503	362
음성군	11,320	1,157	4,712	2,723	2,945	9,439	895	4,353	2,043	2,276
단양군	2,748	170	1,216	712	650	2,185	95	925	587	578
증평군	5,040	271	1,956	1,113	1,700	4,318	253	2,121	968	976
계	212,400	18,305	85,290	50,707	58,774	186,058	16,049	85,135	41,458	43,599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 충청북도에 재학하는 대학생 수에 대한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1만 7천여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생 수의 감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내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외부 유출은 지역 경제의 축소와 지역 인재의 공급 부족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활력과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

〈표 Ⅳ-3〉 충청북도 대학생 재학생수 추이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충청북도	133,173	129,138	126,957	123,135	118,816	116,655
충주시	25,341	25,011	24,312	23,608	22,805	22,557
제천시	16,571	15,793	15,126	14,597	14,135	13,896
청주시	65,809	63,297	62,943	60,643	58,705	57,712
옥천군	1,815	1,695	1,613	1,471	1,395	1,267
영동군	5,967	5,820	5,784	5,680	5,378	5,187
괴산군	4,713	5,090	5,399	5,672	5,636	5,591
음성군	12,957	12,432	11,780	11,464	10,762	10,445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kr)

○ 지역 청소년의 인구 감소는 지역소멸로 연결되어 충북지역에서 지역소멸위험지수에 해당하는 지역이 11개 시 군 가운데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이 포함되어 약 50% 정도가 해당된다.

〈표 Ⅳ-4〉 지방소멸위험 지수

시군구	'18년 6월 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전체	20-39세 여성	65세 이상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괴산군	38,329	2,622	11,949	0.264	0.251	0.235	0.228	0.217	0.219
보은군	33,876	2,397	10,549	0.268	0.257	0.248	0.248	0.237	0.227
단양군	30,282	2,224	8,301	0.348	0.324	0.307	0.292	0.278	0.268
영동군	49,929	4,088	14,237	0.348	0.330	0.328	0.305	0.302	0.287
옥천군	51,723	4,216	13,954	0.407	0.377	0.361	0.340	0.317	0.302
음성군	96,885	9,506	18,018	0.660	0.634	0.622	0.612	0.567	0.528
제천시	135,857	13,937	26,221	0.687	0.647	0.617	0.598	0.562	0.532
충주시	209,940	22,456	37,433	0.752	0.719	0.689	0.662	0.622	0.600
진천군	75,848	8,458	12,121	0.714	0.682	0.668	0.668	0.685	0.698
증평군	37,730	4,436	5,754	0.902	0.872	0.881	0.868	0.805	0.771
청주시	835,373	113,862	98,776	1.470	1.397	1.334	1.288	1.216	1.153

출처: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구분: 소멸고위험 0.2미만, 소멸위험진입 단계 0.2-05 미만, 주의단계 0.5-1.0미만

○ 저출생으로 인해 나타날 충북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지역의 인구감소가 미칠 영향의 내용과 정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의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영역에서의 변화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교육기본법」을 기준으로 학교교육 현장과 평생교육 현장(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학교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서 명시한 평생교육시설의 주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기업과 기관 직원들의 교육의 場인 가정, 조직(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법령에 기반하여 저출생·고령화가 가져올 충북지역의 교육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 과정을 포함한 학교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 구분하여 변화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은 특히 시민의 삶의 기반이 이루어지는 마을, 지역 단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생율의 감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지만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교육 수요 감소라는 측면이 주로 논의되어지고, 지역사회 주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그러나 저출생과 관련한 교육 이슈는 지역 간 격차, 직업생활의 변화,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시설 활용의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저출산·고령화, 과학기술의 발달, 노동시장의 변화는 미래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고(장주희 외, 2013). 미래 사회의 변화 동인으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과학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김아영, 2014). 또한 사회적 변화로는 결혼 유예 및 포기,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교육, 보육 환경), 일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체계 강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여건 확충,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대비 인력활용방안 모색,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조대연 외 6인, 2019).

○ 본 연구는 저출생과 고령화를 통해 나타나는 충북지역의 교육요구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상수로 둘 때 지역주민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시대에 주민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교육의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2) 저출생에 따른 교육 분야의 영향

○ 교육부는 2018년 학령기 아동 수의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중장기 (2019~2030)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8). 교육부의 수급 계획 목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의 관리'이다(교육부, 2018). 아동 수 감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 분야에 대한 대응은 교원 수 감소에 따른 인력 관리와 시골학교의 붕괴에 따른 시설 관리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저출산의 위기는 지역 인재 유출, 교육환경의 저하,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붕괴와 같은 다양한 문제와 연계된다.

○ 충청북도의 총인구 감소는 교육수요의 감소를 초래(충북발전연구원, 2018)하고 세금 부담인구의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의 하락과 교육 서비스의 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교육 서비스의 질, 교육시설의 황폐화, 인재유출로 연결됨으로써 지역소멸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 내 인구감소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 즉, 학령인구의 감소로 나타나고,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육시설들의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폐교 등 공/사 교육 시설들의 유휴화 및 가치하락으로 연결되고, 학교 간 통합·폐교가 이루어지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교육 시설의 황폐화를 가속화 하게 된다. 현재, 충청북도의 지역별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총 134개가 폐교가 진행되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폐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주시와 영동군의 폐교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Ⅳ-5〉 충청북도 폐교 현황

(단위: 개수)

행정구역	1990년대 이전	1991-2000	2001-2010	2011년 이후	합계
청주시		8	5	3	16
충주시		14	2	6	22
제천시	2	11			13
보은군	1	9	5	1	16

행정구역	1990년대 이전	1991-2000	2001-2010	2011년 이후	합계
옥천군		7		2	9
영동군	2		11	4	17
진천군		3	1	3	7
괴산군		10	1	4	15
음성군		4		2	6
단양군	1	8	2	2	13
증평군					0
계	6	74	27	27	134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 교육을 통한 지역에 필요한 인적자원 공급의 감소, 교육여건이 보다 좋은 타 지역으로의 지역인재 유출이 이루어져, 지역혁신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노동력 확보 곤란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저출생은 지역별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영역의 변화를 대상과 영역, 목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첫째, 교육과 관련된 당자나 및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저출생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영역을 기준으로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 제도, 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환경, 프로그램등과 관련한 교수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목적을 기준으로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가경쟁력, 개인 삶의 질, 행복도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위와 같은 구분 외에 저출생이 가져올 이슈를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할 경우, 1차적 이슈, 2차적 이슈, 3차적 이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차적 이슈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교육에 미칠 직접적 영향으로 폐교 등 학교시설, 교육여건, 인력공급, 교육과정 개편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2차적 이슈는 저출생으로 인한 가정, 사회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협력역량 약화, 경제성장 둔화, 부모 교육력 약화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3차적 이슈는 저출생이 가져올 미래 사회변화로써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배제의 악화와 고독한 개인 증가, 공동체 붕괴, 지역사회 약화로 당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위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저출생으로 인해 지역의 교육 영역에 나타날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측면에서 저출생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1차적이면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교원 수의 감소, 학교와 같은 공적 시설의 황폐화, 교육재정의 감소와 같은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시설의 공동화, 지역의 공동화가 나타나고 이것은 지역 간 격차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활용에 대한 문제, 교육재정에 대한 확보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저출생이 가져올 2차적이며 간접적 영향은 지역단위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성의 약화, 지역사회붕괴, 지역소멸 가속화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개인교육 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시민사회 조직과의 연대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복합적 측면에서 사회갈등심화와 빈부격차, 개인주의 증가, 일자리의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저출생에 대한 교육 분야의 대응전략

○ 저출생이 가져올 교육분야의 영향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육분야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고려할 수 있다.

○ 첫째, 교육을 새로운 사회자본으로 SOC(Social Overhead Capital)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충북발전연구원, 2018). 최근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사회투자국가로써 인적자원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적 교육환경 지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 둘째, 학교에서의 교육 콘텐츠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학교 교육 내용의 변화로 저출생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프레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습을 보장하는 시설과 기회의 재정비가 필요하다(조규복, 2017).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보육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고급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동과 여가의 균형 추구, 민주주의 내재화, 매체비판능력(조상식·김기수, 2016), 인공지능과의 경쟁 우위를 위한 인성 및 기업가 정신 계발, 공동체 의식 계발(박남기, 2018)과 같은 새로운 교육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 셋째, 학교 시설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기존학교의 재배치 및 학교의 적정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습 환경의 고기능·다기능화, 학생, 유아,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 배움의 공간을 거점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 학교 교육활동을 지탱하는 전문 인재 활용, 효과적·효율적인 시설 정비 등 다섯 가지의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다(조규복, 2017). 학교 시설 복합화를 통해 폐교자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용도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예산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 개보수나 시설 운영을 위한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 통합관리는 교육예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여유교실 활용과 폐교 활용에 대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더해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복합화를 중요한 교육이슈로 삼고 교직원 배치, 교육재정제도, 관련 법, 제도 개정 등이 요구된다(조규복, 2017). 이를 위해 주말, 평일 방과 후에 지역주민들이 동네 학교, 마을 공간을 다양한 스포츠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통폐합 및 지역사회 공공시설 복합화는 노후화되어 가는 공공시설을 효율성(efficiency)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유리하지만, 지역의 공간이 주는 원심력을 활용하는 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지역의 오랜 자산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물적 자산이며, 인적 자산을 길러내는 중요한 공간이며,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자본이기도 하다. 특히, 공적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학교는 문화, 스포츠, 관계, 학업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초중고의 경우 새로운 학교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학교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시민의식과 연계된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조직화 운동이나 인접학교 네트워크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스쿨(학교운영협의회)을 조직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이 참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추구한다(김진숙,

2016). 지역민과 학교가 학교의 운영과 교육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학교운영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 실현시켜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학교', '지역이 만들어나가는 학교'라는 '커뮤니티 스쿨'의 존재가 살아나고, 지역의 교육력이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데 공동 파트너로 자리잡을 수 있다(김진숙, 2016). "커뮤니티 스쿨(학교운영협의회)은 정기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활동을 한다. '써클활동 지원', '도서 낭독', '도서정리', '학습지도'와 같은 학교지원활동을 하는데, 이는 위에서 기술한 학교지원 지역본부의 활동과 유사한 부분"이다(김진숙, 2016).

○ 다섯째, 지역의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 교육력'이란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규범, 생활체험 그리고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여러 활동 등이 그 지역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그 지역사람들의 인간성 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을 지칭한다. 지역교육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전국생애학습 네트워크 포럼', '인재인증제도', '열린대학', '사회교육 어드바이저', '지역학교지원추진 어드바이저', '사회교육에 의한 지역의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 등을 도입할 수 있다(김진숙, 2016).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최근에는 신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사회적배제, 빈곤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볼론티어 조직이나 비영리 조직이 연합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 지역주민의 교육력 향상에 기여한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집단활동과 변화들이 지역주민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주체적인 학습역량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한다(김진숙, 2016).[21]

○ 여섯째,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위한 상급학교의 취학지원과 원조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비 무상화', '급식비 무상화/부분 보조', 통학과 취학경비에 대한 지원책으로 '통학경비 보조'와 '고교진학에 따른 하숙비 보조',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보조', 지역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교재비

21) 구체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력향상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정 및 지역, 학교 교육이 서로 손을 잡고 교육사업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으로 학교가 학부모, 지역 주민, 지역단체와 협동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식,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지역 공동체의 '공유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 어린이교실 추진사업'을 통하여 지역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과 교류하고, 방과후 어린이 플랜 등을 통해 방과 후의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을 제공한다. '부재가정 아동모임'사업은 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놀이 및 생활의 장을 제공한다.

지원' 등을 추진하며, 학자금 이외에 '입학준비 비용', '유학비용'과 '단기 해외유학 비용'에 대한 대출도 가능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김진숙, 2016)

○ 일곱째, 시기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정책은 아동 보육 공급률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특히 이러한 공급률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이소영, 2019). 무엇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국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 늘리기, 민간어린이집의 질 높이기, 양육수당 정책의 실효성 유무 재고, 지역 아동 보육 공급 불균형 해소 등을 제안한다. 초등학생들은 전인적 교육이 필요한 시기로 역량에 맞는 교육과 비학업적 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학생들의 비인지 역량(noncognitive skill)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학업적인 측면에서 비인지 역량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소영, 2019).

○ 여덟째, 인구구조분석 등 정밀진단을 통하여 대학에서의 인재유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지역대학의 역할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위기 발생하고 있다. 지역 수요에 맞는 대학 인재 육성을 통해 대학에서는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대학의 역할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학과나 과목을 설치하는 대응이 요구된다. 고령화 시대의 맞춤형 지방대학의 보건복지 안전계열의 전문화 및 이러한 학과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 강구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 창업주도형 교육, 현장 중심형 실습교육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박상헌 외, 2018).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방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 유치와 같은 것도 지역대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지역이 공동으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 전략 마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모색을 하고 사회적 경제 등 지역과 밀착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가 겸비되는 대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대학으로 전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육동한 외, 2019).

2) 고령화 관련 교육 정책 이슈

(1) 고령화 관련 현황과 진단

○ 고령화는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만 그동안 노령층 인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의료, 빈곤, 일자리, 고독과 관련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인구 고령화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양하여, 세금기반이 축소되고, 공공재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의료 및 연금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감소는 경제기반, 소비시장, 노동시장, 주택시장 및 지역사회·기술 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다양한 연구들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 가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인들의 생에 대한 태도와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그동안 배우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욕구가 평생교육이나 개인의 자기발전에 대한 교육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지역자치단체는 고령인구를 위한 평생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으며, 이는 노인들이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 생존 독립성과 생산성 및 생산의욕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돕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박남기, 2018).

○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노년층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평균연령 역시 2012년 38.8세로 비교적 젊었으나, 2016년 40.7세, 2019년 42.7세로 불과 7년 만에 4세가 높아졌다. 기대수명 역시 2012년 80.9세에서 2016년 82.4세, 2019년 83세로 증가하여 노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202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5.7%이며, 2030년에는 20%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학실·심준섭, 2020). 정부차원에서 빠른 노령화와 이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국가적 부담, 일자리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기준과 퇴직 연령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에 대한 법적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3.7%만이 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균 71.4세 정도를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 중 86.2%는 70세 이상을, 특히 12.1%는 80세 이상을 노인의 기준 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7).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2018) 등과 같은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논쟁과 함께, 연대기적 연령과 인지 연령 또는 주관적 연령 간에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이삼식·최효진, 2019). 이처럼, 노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는 노인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연령이 사회활동 정도, 삶의 질, 행복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학실·심준섭, 2020). 특히, 노인 기준 연령을 높게 인식할수록 평생교육, 동호회 등의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연령은 실제 다양한 활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김학실·심준섭, 2020). 연령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변화와 고령화의 특성이 가져온 변화는 과거의 노인들은 평균 기대수명이 높지 않아 퇴직이나 노령화시기에 접어들어도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았던 반면, 사회적, 경제적 활동욕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의 고연령 노인의 비율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노인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노인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으며, 가구형태의 경우도 2008년을 기점으로 자녀 동거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노인 부부가구는 증가하였다(이윤경 외, 2019).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이 매우 적은 반면, 경제활동 외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고,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사회활동 참여 평균 개수도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이용률 중 경로당 이용율은 2008년 46.9%에서 2017년 23.0%로 급감하였으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증가하였다(이윤경 외, 2019).[22]

22) 노인의 특성을 건강과 경제활동, 사회활동의 지표를 구성하여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특성을 다중요보호형, 건강노화형, 빈곤형, 근로빈곤형, 기능저하소외형, 의료과잉이용형, 건강위험형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특성을 건강과 경제활동, 사회활동의 지표를 구성하여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특성을 다중요보호형, 건강노화형, 빈곤형, 근로빈곤형, 기능저하소외형, 의료과잉이용형, 건강위험형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중요보호형은 낙상, 인지제한, 주거 불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간수준 이상의 확률을 보이며, 만성질환, 외래이용, 영양부족, 경제활동 미참여 확률이 0.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형이다. 건강노화형은 경제활동을 제외하면 타 지표에서는 중간 이하의 낮은 확률을 보이며, 경제활동도 0.543으로 중간 수준의 확률을 보이는 경우이다. 빈곤형은 외래이용과 경제활동 미참여 및 빈곤 확률이 높고, 만성질환과영양부족에서 중간 이상의 확률을 보인다. 또한 비자가 확률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근로

〈표 Ⅳ-6〉 노인의 특성 변화

(단위:%, 만원, 개)

구분		1998년	2008년	2017년
성별	남성	36.9	40.2	42.5
	여성	63.1	59.8	57.5
평균연령		72.6	72.9	74.1
학력	고졸이상	10.2	17.2	24.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9.2	64.5	63.4
빈곤율	빈곤율		56.7	46.1
	평균소득		1,044.1	1,715.2
경제활동참여율		28.5	30.0	31.0
사회활동참여	참여율	38.1	84.0	78.4
	평균개수	0.47	1.97	1.20
여가복지시설이용율	경로당	28.1	46.9	23.0
	노인복지관	2.3	14.7	9.3

출처: 이윤경 외(2019)인용.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Retrieved from
https://data.kihasa.re.kr/micro/subject_view.jsp?WT.ac=new_data&project_seq=673

○ 위와 같은 노인인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은 각종 사회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취업과 시민으로서의 역할, 자원봉사활동 및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해서 또는 노년기의 새로운 사회화와 질 높은 개인의 삶을 위해서 노인교육을 희망”하고 있다(이호선, 2010). 우리나라 “평생교육법과 법령의 규정에는 ①공공부문, 민간사업부문, 사회봉사부문 등

빈곤형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확률이 낮아, 근로를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 확률은 0.7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환경 불편함이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능저하소외형은 만성질환과 외래이용 확률은 타 집단에 비해 낮지만, 기능제한 확률이 매우 높고, 인지제한과 우울 확률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미참여 확률이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기능제한 및 인지제한 등으로 외부 교류가 어려운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의료과잉 이용형은 만성질환 확률도 낮고, 기능제한 및 인지제한 등의 확률도 중간 이하로 매우 낮음에도 외래이용 확률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다. 건강위험형은 만성질환과 외래이용 확률이 매우 높고, 영양부족도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참여 확률은 높은 집단이다. 만성질환과 영양부족 외에는 문제적 확률이 낮은 경우이다(이윤경 외, 2019).

각 영역에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평생교육기관의 행·재정 지원 ③ 평생교육센터 등 평생교육전담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④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취득제 등 평생 교육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 ⑤성인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부여 ⑥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개발사업 지원 ⑦평생교육사 양성 및 재교육, 교육담당ㅌ자 및 관리자의 연수교육지원 등"이 열거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관내 노인교실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노인대학, 도서관, 대한노인회, 박물관, 양로원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노인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이 있다(이효원, 2016).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는 6.2%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지역, 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 유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하여, 노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아졌고,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의 참여율이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연령에 따른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대폭 증가하여, 8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는 노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연령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며, 노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Ⅳ-7〉 노인의 평생교육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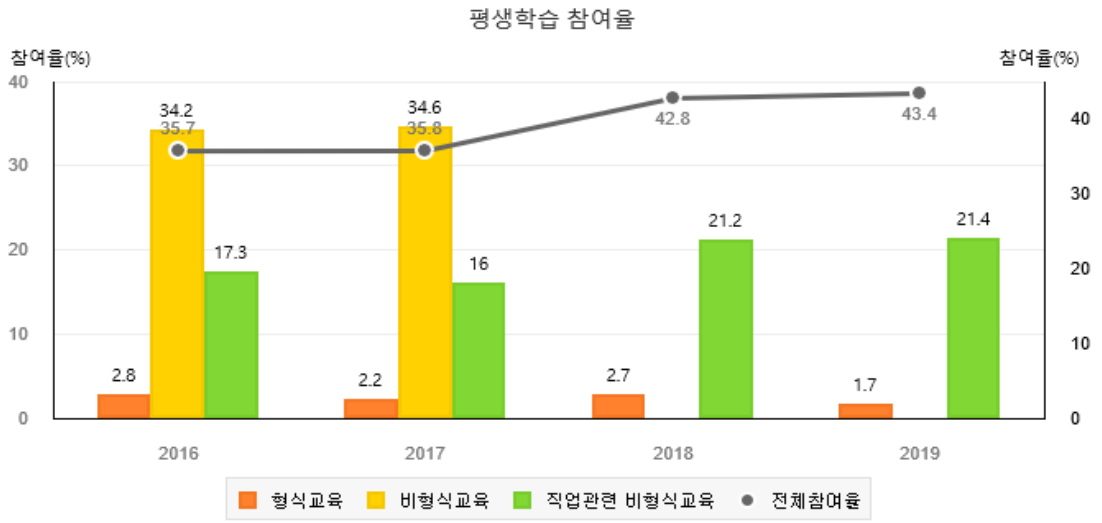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2011			2017		
		평생교육 참여율	교육참여 빈도		평생교육 참여율	교육참여 빈도	
		소계	주 4회 이상	월 1회	소계	주 4회 이상	월 1회
전체	소계	6.7	13.8	2.1	12.9	11.8	1.1
지역별	동부	7.7	15.0	1.5	13.1	13.2	1.3
	읍·면부	4.6	9.6	5.1	12.4	8.7	0.5
성별	남자	5.5	15.8	4.5	8.0	16.2	1.7
	여자	7.6	12.7	0.9	16.5	10.3	0.8
연령별	65~69세	7.1	13.5	2.7	12.6	14.9	1.2

특성별		2011			2017		
		평생교육 참여율	교육참여 빈도		평생교육 참여율	교육참여 빈도	
		소계	주 4회 이상	월 1회	소계	주 4회 이상	월 1회
	70~74세	7.7	9.7	1.2	13.6	9.9	0.9
	75~79세	7.0	21.6	0.6	14.1	11.3	0.7
	80~84세	4.5	9.6	7.7	12.7	10.7	0.0
	85세 이상	2.3	7.7	15.4	8.8	8.8	5.9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6.5	15.3	1.9	12.0	13.1	1.4
	배우자 없음	7.0	10.8	2.5	14.6	10.1	0.6
가구 형태	노인독거	7.0	10.2	3.4	16.0	9.8	0.8
	노인부부	6.9	14.5	2.0	12.5	13.1	1.3
	자녀동거	6.1	16.8	0.0	10.0	12.6	0.4
	기타	6.8	6.1	9.1	15.8	10.0	3.3
교육 수준	무학(글자모름)	2.2	3.8	3.8	9.4	6.8	0.0
	무학(글자해독)	5.8	9.5	2.4	12.1	6.5	0.9
	초등학교	6.1	14.5	0.4	11.7	9.9	1.0
	중학교	-	-	-	13.0	13.9	1.3
	고등학교	-	-	-	14.3	14.3	0.8
	중·고등학교	7.9	14.9	2.8	-	-	-
	전문대학 이상	14.9	16.5	4.6	19.5	20.1	2.0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	6.3	2.5	10.7	8.4	0.9
	미취업	7.8	16.0	2.2	13.9	13.1	1.1
연가구 소득별	제1오분위	5.7	9.2	5.9	12.3	12.3	0.8
	제2오분위	5.3	10.5	0.9	13.7	6.9	1.1
	제3오분위	6.2	12.3	1.5	11.9	12.8	1.2
	제4오분위	6.3	14.2	3.7	12.8	11.0	1.6
	제5오분위	9.9	18.9	0.5	13.8	16.6	0.7
기능 상태	제한없음	7.4	14.3	2.4	13.9	12.7	1.0
	제한있음	2.2	3.0	0.0	9.8	8.6	1.3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또한 평생교육 관련 교육 형태를 살펴보면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이 사회교육과 문해교육적 성격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표 Ⅳ-8〉 고령자의 비형식교육 평생학습실태

구 분		2017			2019		
		참여율	참여시간	자기부담 학습비	참여율	참여시간	자기부담 학습비
전체		26.9	103	17	32.4	82	20
취업유무	취업자	23.9	68	9	32.8	63	20
	미취업자	28.8	122	21	32.2	94	20
자녀유무	없음	19.2	230	17	25.9	53	19
	있음	27.2	99	17	32.6	83	20
동거가족유무	없음	27.9	87	8	37.6	80	15
	있음	26.7	106	19	31.6	82	21
부양가족유무	없음	31.5	106	17	33.7	89	20
	있음	21.2	99	17	31.2	75	20
취학 전의 손자.손녀유무	없음	24.8	91	14	32.6	87	23
	있음	30.3	120	22	32.1	73	15
건강에 대한 자신감	자신있음	33.2	119	22	40.1	88	25
	자신없음	20.7	78	9	21.8	66	8
주된 소득원천	내가벌어서	23.2	70	10	33.2	62	19
	이자 및 임대수입	45.3	115	30	28.1	161	54
	가족,친지,자식으로 부터의 용돈	28.9	120	21	31.2	96	21
	연금	29.6	121	19	34.2	90	20
	지원금	13.8	88	1	30.1	66	7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 고령자의 비형식교육 평생학습 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참여율과 자기부담학습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가 취업한 경우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높아졌지만, 취업한 경우나 미취업인 경우 모두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고령자의 경우 취업여부가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과 평생교육의 관계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고령화의 인구구조 특성이 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 고령인구는 새로운 고령인구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다양한 수요를 갖게 되는데 이는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증가로 연결된다(충북발전연구원, 2018). 교육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교육에 대한 적극성과 자발성이라는 관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고령인구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인구의 구직 및 일자리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고령자에 대한 취업, 교육수요 증가와 노노 케어 분야 고령전문직 일자리 수요 및 교육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보기술 활용 역량 제고 등의 고령인구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증가와 함께 평생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때문에 고령화사회에서 노인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법규가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노인교육 관련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과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이 있지만, 이들 법령 가운데 노인교육이 배제되어 있어 법규적 취약성이 드러난다(이지현, 2015). "한국 노인교육의 실효성을 보장할만한 구체적인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분담이 모호한 실정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노인교육의 목적과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 노인교육기관 운영자와 강사의 재교육, 교재개발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노인교육관리와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지현, 2015). 더욱이 사회교육법과 동 시행령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인 교육정책은 현재 노인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보건복지부가 노인 학교를 여가복지 시설로 간주함에 따라 노인교육의 방향을 노인여가의 시각으로 편향시키고 있다(이지현, 2015).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교육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강하다(이효원, 2016).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교육프로그램은 크게 노인들의 노후 및 여가생활교육, 은퇴준비교육, 지도자교육영역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이효원, 2016). 때문에 노인들의 연령, 지역, 학력, 필요 등에 기반한 다양한 욕구를 담보하지 못한 채 노인교육프로그램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표 Ⅳ-9〉 노인교육프로그램

영역	상위프로그램	하위프로그램
생활교육	여가 및 취미	여행실습, 탈춤추기, 사진찍기, 음악, 이야기 책 만들기
	노인생활정보	법률상식, 교통안전
	노인건강	건강관리, 죽음준비
	문화유산 전수 및 계승	구비전승, 전통놀이
	세대간의 대화와 인간관계를 위한 교육	동료와의 인간관계, 상호 세대간의 화합
	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정보지 발간 기원
	노인생활지원	전화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은퇴준비교육	특별행사	바자회, 생일잔치, 고궁산책
	취업교육	기초교육, 직종별 교육
	재취업 및 재배치교육	기초교육, 직종별 교육
	창업교육	기초교육, 직종별 교육
	은퇴준비교육	생활설계, 은퇴준비, 부부은최 준비
지도자교육	노인기초교육	교육학의 이해, 노인교육의 이해, 노인과 사회교육, 노인교육 방법론
	노인전문과정	노인심리, 노인과 건강, 노인 취업, 노인복지

출처: 이효원(2016).

○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새로운 대응체계의 인식에 대한 전환이 부족”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활발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을 단순히 은퇴 후 여가시간 활용이 아닌 자기개발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노인교육이 평생교육적인 차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 및 어촌 등 시골에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시골의 지역적 위치와 특성 등을 고려한 노인교육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효원, 2016). 또한 민간기관에서 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노인교육을 단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설하고 검증되지 않은 노인 프로그램을 쏟아내면서 표준화되지 않은 교육이 우후죽순처럼 시행되는 것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 마련하는 노인교육은 건강이나 여가 등의 가벼운 취미활동 정도의 내용이며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직업 훈련에 편중된 점도 아쉬운 점 중 하나이다. 학습자인 노인의 개인의 특성이나 취향의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는 점도 배우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노인들의 능력을 장기적으로 키워주지 못 한다”(이효원, 2016). 앞에서 노인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살펴보았지만, 노인교육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노인교육 강사가 대부분 민간기관에서 짧은 기간의 교육을 통해 무분별하게 발급해 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한 비전문가가 노인교육의 교육자로 많다는 것과 관련이 크다(김호선, 2010; 이지현, 2015; 이효원, 2016).

(3) 고령화에 다른 교육 영역의 대응

○ 사람은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역할과 기능이 급속도로 상실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의 지식만으로 노년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젊은이들과 가치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정신적 ·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이지현, 2015). 따라서 노인 교육은 노인에게 통합의 원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노인 교육은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고독과 소외감등을 해소하며, 삶의 보람을 찾아 노인에게 가치 있는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김선숙, 2000). 외국의 고령화에

대비한 각종 교육정책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다.

○ 첫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생학습사회(life long learning society)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 어른들의 놀이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이러한 기능을 기획하고 종합화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령층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평균연령 증가, 지식기반의 도래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고용 및 삶에 대한 불안전성 및 고학력화 추세의 진전에 따른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증대,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통합문제 대두되어 참여형 복지, 사회통합기제로서의 평생학습, 평생학습을 통한 가치공동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을 어른들의 놀이터 기능[23]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반을 추진한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놀이터를 만든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평생교육의 장은 '공민관'인데 다양한 학습동아리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등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학습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약속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민관에서는 공민관과 주민이 기획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사회학급, 인권 학급, 여성강좌, 탁아 양성과정 등 그 시대의 과제에 대해 공부)하거나, 지역에서 다양한 주민 모임의 거점이 되도록 장소 대여기능과 교류 장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더불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교류 역할을 수행하고, 주로 지역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이 맡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류의 장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교육 실시 기관은 전국 노인학교가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이며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노인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노인학교를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인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노인 교육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노인교육 종합지원 센터'을 설립하고 지역 내 기관 및 단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노인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 할 것이다 .

○ 둘째, 직업관련 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의 증가는 고령화에 따라 성인직업교육 및 계속

2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geduon&logNo=221419213139&categoryNo=9&parentCategoryNo=0 [출처] [해외평생교육사례-5] 시민이 주도하는 교육! 일본의 공동학습|작성자 진실샘

교육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계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성인 직업교육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고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공급하기 위한 기제로서 non-university(폴리테크닉, 산업대학, 직업대학)등의 고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자발적 시민교육을 위해 학력수준이 낮은 근로자나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교육,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교육이 요구된다.

○ 셋째, 지역사회에서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노인교육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이효원, 2016). 일반 대학이 노인과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과 연계하는 다양한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교가 주로 도시지역 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노인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대부분이 지역사회 내 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지역 노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이지현, 2015).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경제나 공간으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인교육에 대한 평등성도 제고해야 한다. 즉, 등록금 할인 및 감면 제도를 실시하여 노인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노인 들이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지현, 2015).

○ 넷째, 비영리단체 등 비정부기구등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제공한다. 거버넌스 시대에 맞게 시민단체들과 지역 노인들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교육하여 노인들의 평생학습과 사회참여를 적극 도모한다. 비영리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통해 지역 내 비영리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과 행정, 시민과 비정부기구가 거버넌스적 역할을 모색하고 활동하도록 한다.[24]

○ 다섯째, 지역 만들기를 통해 고령 노인들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 최근에 대두되는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사회적 경제등을 청년의 실업문제와 연결하고 노인들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 자산을 제공하는 상생의 길을 만든다. 지역사회 재생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능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향상시키고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인재들이

24) 〈NPO 교육력〉 사토우 가츠고 저, 동경대학 출판부, 2004 (일본어판)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착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여섯째, 노인 개인의 생활 경험에서 지역 실천까지 이어지는 순환적 학습을 추구한다. 노인 자주그룹을 통해 개인 경험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적 경험을 공동체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25].

○ 일곱째,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와 같은 Learning Co-op(학습협동조합)을 조직한다. 누군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함께 참여해 서로 배우는 동시에 서로를 가르치는 순환적 학습의 장이다[26].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은퇴한 시니어가 증가하고, 노인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 리더협의회'를 통하여 노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노인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자주적인 노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국은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힘을 모아 학습활동을 장려하는 자조운동이 활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은퇴자 협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지현, 2015).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늦지만,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외국의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5) 고령자 수발 경험을 고령화 사회 복지 활동으로 연계하여 학교 안에 학교(시니어 학교 부엉이, Seniorenschule EULE)를 운영한다. '시니어 학교 부엉이'는 2001년 독일 북서부 도시인 레케(Recke)에 퓌어스텐베르크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생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교사가 되어 55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영어, 불어, 컴퓨터-인터넷, 기억력 훈련, 문학 등을 무료로 가르친다. 이 시니어 학교는 퓌어스텐베르크 고등학교 학생과 시설을 활용한 '학교 안에 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의 학교이다. 시니어 학교가 아직은 몇몇 고등학교에서만 도입되었으나 점차 확대한다. 이런 시니어 학교는 세대 간 대화의 장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노년 세대가 자신과 비슷한 관심과 성향을 가진 또래를 만나고 경험을 나누는 또래 간 대화의 장으로 연결되며, 지역사회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m.blog.naver.com] [해외평생교육사례-3] 진짜 시민을 만드는 독일의 계속교육 : 네이버)

26) [m.blog.naver.com] [해외평생교육사례-2] 다양성의 나라, 영국의 평생교육 : 네이버

〈표 Ⅳ-10〉 주요국가의 노인교육정책 비교

영역/국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고령화 추세	·고령화사회(1942) ·고령사회(2014) ·초고령사회(2030)	·고령화사회(1970) ·고령사회(1991) ·초고령사회(2006)	·고령화사회(1864) ·고령사회(1979) ·초고령사회(2019)	·고령화사회(1929) ·고령사회(1976) ·초고령사회(2020)
노인 교육 담당 기구	·교육부 ·노동부, 노인청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사무국 ·노인지역사무소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국민교육성 ·청소년스포츠청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성인교육센터
노인 교육 정책 방향	·교육, 여가, 노동복지 관점 통합 ·성인교육 일환 ·세대간 노인정책 ·경제적 자립능력제고	·고령인적자원활용 ·세대간 교류활동 ·연계 및 협력체계구축	·삶의 질 향상 ·대학 중심의 노인교육 ·산학협동과 노인교육	·교육과 복지연계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제공 ·직업적 계속교육 추진
노인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노인센터, 노인교육센터 ·엘더 호스텔 ·야외활동, 봉사, 건강, 교양, 국제교류	·공민관,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 엘어 호스텔 ·인생설계, 지도자 양성, 건강	·노인대학 ·지방분권화 ·대학개방 ·교육, 노동, 복지 연계	·노인대학 ·고용기능 개발 ·선더랜드 퇴직센터 ·재취업 준비
특징	·여가선용, 소득증대, 지역사회봉사강조,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직업관련 정보화 교육에 초점	·장수사회출현(초고령사회) ·사회참여촉진 ·생계보장	·제3의 인생의 성숙기 ·자존감 증대 ·자발적 참여, 주도적 학습 ·생계보장	·다양성과 개별성 보장한 활동준비 ·세대공동체 학습 ·직업교육 강조 ·노인학습자의 자율성에기초
시사점	·복지지향성 ·교육, 소득, 복지 연계(백안관 노인문제회의) ·주도적 학습 강조	·장수와 삶의 보람 증진 ·경로사상의 사회적 확산	·고령화의 사회적 수용 ·자립심 배양 ·사회기여도 향상	·부처간의 연계화 협조체계 유지 ·대학중심-적응력 강화

출처: 이호선(2010).

2 문화부문

1) 서론

○ 21세기는 초고령 장수사회이다. 저출산 · 고령화의 결과이다. 저출산 · 고령화는 4차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현상으로, 의학의 발달과 소득 증가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동반한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출산하고 출산을 하여도 하나만 낳는다. 수명은 연장되어 100세, 120세 시대를 사는 초장수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인구구조도 변하여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하면서 점점 노년층이 많아지고 노년층이 일정한 사회문화세력으로 등장한다. 여성인구의 비중도 점점 많아져 여성문화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가족형태도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형태에서 1,2인 가족, 다문화가정, 공동체 가정 등으로 진화한다. 가족형태의 해체와 재탄생은 문화환경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개념의 노년층으로 '오팔족(Old People with Active Life)' 또는 '애플족(Active Pride Peace Luxury Economy)' 등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적극적으로 자기계발에 관심을 가지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길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문화 소비와 향유의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의 문화 활동의 폭과 깊이 역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 따른 문화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인구층의 문화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정책도 새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 · 고령화사회의 공공문화정책은 삶의 질 향상에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하는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까 한다. 그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사회 문화환경의 변화를 알아본 뒤 충청북도 공공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화환경 변화

(1) 문화 소비형태의 변화

○ 4차산업혁명과 동행하는 저출산 · 고령화사회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추구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증가와 그들의 문화 욕구는 증대될 것이며,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활동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문화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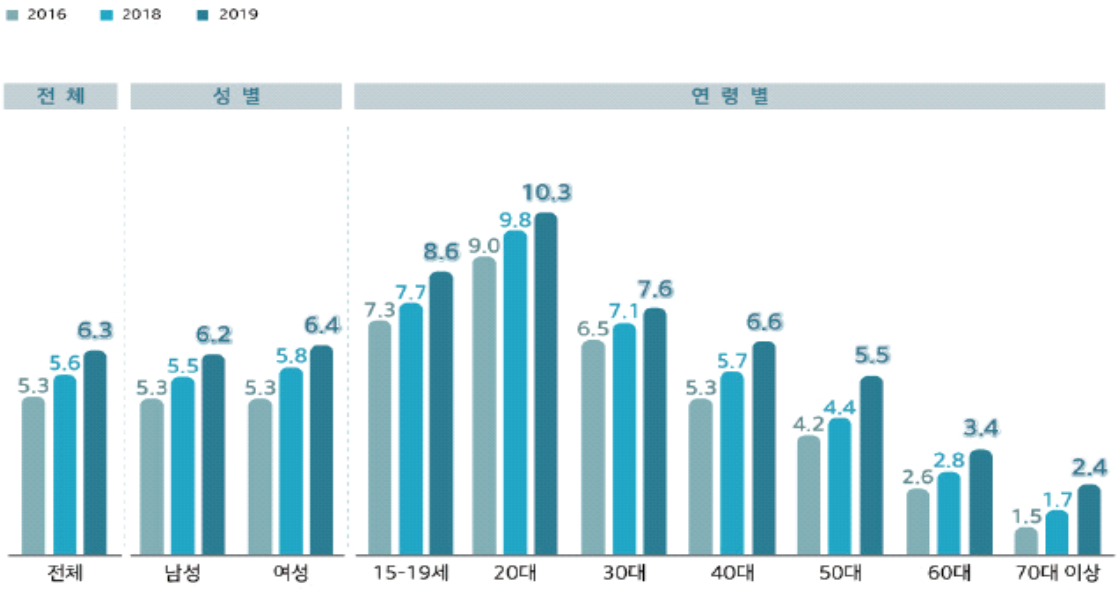


〈그림 Ⅳ-1〉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추이

○ 〈그림 Ⅳ-1〉에서 일반인의 문화예술행사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참여율이 2.2%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에는 10.4%로 근 5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며, 그것은 저출산 · 고령화사회 삶의 질 욕구가 증대된 결과이다. 또한 문화 향유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변하면서, 참여율이 높아졌다. 실제 2019년 문하예술행사 참여 의향이 2010년 3.7%에서 19.2%로 크게 높아진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행사 참여의지가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인 바, 공공영역에서 보다 양질의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관람률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9 국민문화

예술활동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0년 67.2%였던 것이 2019년에는 81.8%에 이르렀다. 순수예술분야도 25.9%에서 37.1%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순수예술을 향유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행사 참여와 관람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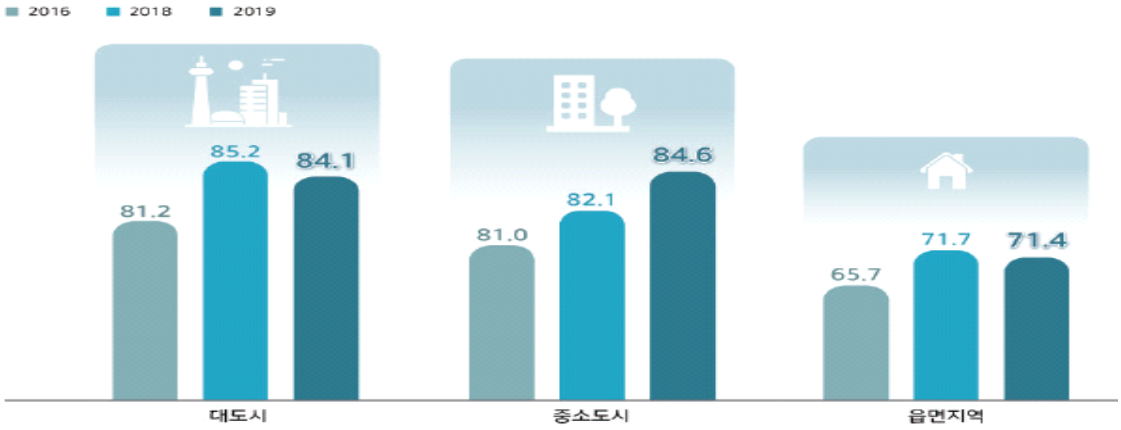
(단위: %)



〈그림 Ⅳ-2〉 성별 ·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태도는 모든 연령층과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림 Ⅳ-2〉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연차적으로 관람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매년 문화예술 관람 횟수가 늘어났다. 특히 60대가 2016년 2.6회에서 2019년 3.4회로, 70대 이상은 1.5에서 무려 2.4회로 늘어났다. 다시 말해 고령층의 문화 활동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저출산 · 고령화사회가 진전되어도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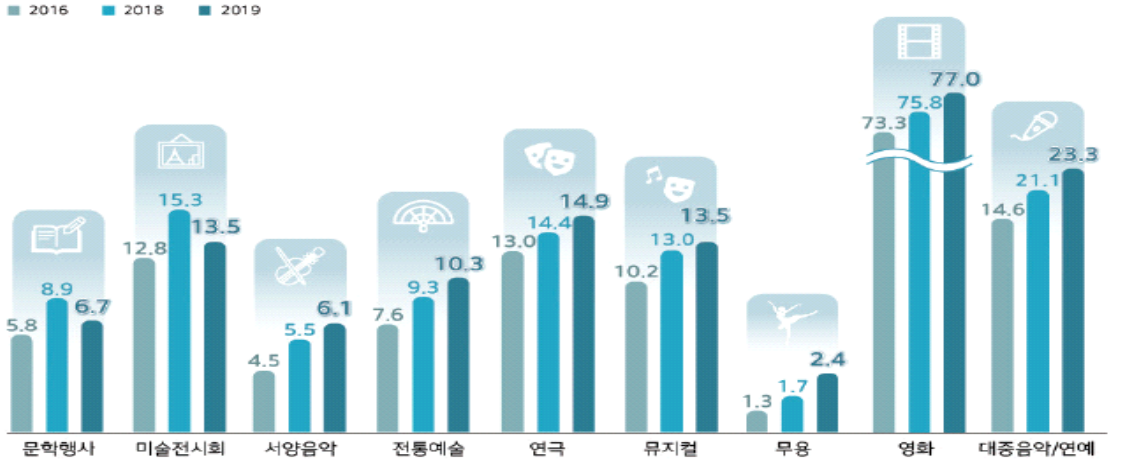
(단위: %)



〈그림 Ⅳ-3〉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문화 활동은 도시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 Ⅳ-3〉에서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보면, 대도시는 2016년 81.2%에서 2019년 84.1%로 2.9% 증가에 그쳤으나, 읍면지역은 65.7%에서 71.4%로 무려 5.7%나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도시 중심의 문화 활동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 활동공간을 도시 중심에서 읍면과 농촌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으로 열어놓고 접근해야만 한다. 그래야 어디서나 문화예술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과 문화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



〈그림 Ⅳ-4〉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문화 활동도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4〉에서 문학행사는 물론,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람률이 2016년보다 2019년이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사회 문화 활동이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서 가능하도록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여가문화 확산

○ 저출산 · 고령화사회 삶의 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가문화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워라밸문화가 확산되는 데다, 은퇴한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시간 소비의 중요성이 커졌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가를 즐기는 것이 최상이 아닐 수 없다.

○ 최근 한국인의 여가 활동은 주로 TV 시청, 잡담이나 통화하기, 쇼핑/외식, 인터넷 검색, 산책 및 걷기, 친구 만남, 음주, 목욕, 스포츠경기 관람 등이다. TV 시청은 매년 71% 이상이나, 점점 즐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쇼핑이나 외식은 2016년 28.6%에서 2019년 37.4%로 9% 정도 증가하였다. 산책 및 걷기도 29.9%에서 32.1%로 양호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걷기 시간이 많아진 결과이다. 그밖에 스포츠경기 관람이나 사우나 등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모바일 확대로 잡담이나 통화하기 · 문자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음주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표 Ⅳ-11〉 한국인의 주여가활동

(단위: %)

구분	TV 시청	잡담/통화하기/문자 보내기	쇼핑/외식	인터넷 검색/1인 미디어 제작/SNS	산책 및 걷기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	모바일 콘텐츠/동영상/VOD시청	음주	목욕/사우나/찜질방	스포츠경기 간접관람
16년	72.7	26.7	28.6	39.1	29.9	-	-	20.3	14.6	11.2
18년	71.8	32.2	32.5	36.7	28.7	-	-	21.4	17.3	12.0
19년	71.4	38.2	37.4	35.5	32.1	27.1	20.8	16.8	16.8	15.1

○ 여가 활동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Ⅳ-11〉에서 TV 시청은 40대 미만에서 평균 71.4%보다 적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TV 시청시간이 많아져 70세 이상의 경우 무려 92.3%에 이른다. 산책 및 걷기 역시 40대 이하에서 평균치인 32.1%보다 낮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 검색이나 모바일콘텐츠 등은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여가 활동은 실제 하고 싶은 여가 활동과 차이가 있다. 〈표 Ⅳ-12〉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은 여전히 TV 시청이 가장 높으나 그 비율이 20%대이며 그것도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친구 만남, 산책이나 걷기, 영화 관람, 쇼핑과 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으로 꼽히고 있다.

○ 따라서 앞으로 공공 여가정책은 주민들로 하여금 TV 시청 대신 좀더 양호한 방향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를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확대하거나, 집 근처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을 주거공간에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다. 또한 쇼핑과 외식을 즐기는 여가 패턴을 이용하여 쇼핑공간에서 미술 전시를 감상하거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겸하게 하여 좀더 고품격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공문화정책이 요구된다.

〈표 Ⅳ-12〉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

(단위: %)

구분	2016년	2018년	2019년
1	TV 시청(26.5)	TV 시청(19.2)	TV 시청(221.1)
2	친구 만남/동호회(18.1))	쇼핑/외식(18.5)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21.4))
3	산책 및 걷기(17.9)	영화 관람(18.1)	쇼핑/외식(18.7)
4	쇼핑/외식(17.0)	친구만남/동호회(17.7))	영화 관람(18.1)
5	인터넷 검색(15.9)	산책 및 걷기(14.7)	산책 및 걷기(17.9)
6	영화 관람(13.5)	등산(10.8)	인터넷 검색(11.1)
7	음주(12.0)	음주(10.5)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10.1)
8	등산(11.2)	인터넷 검색/채팅/SNS(10.2)	음주(9.2)
9	잡담/통화하기(10.1)	게임(9.6)	등산(9.0)
10	목욕/사우나/찜질방(8.6)	잡담/통화하기(9.1)	잡담/통화하기(8.7)

(3) 워라밸문화의 확산

○ 최근 우리 사회는 워라밸이란 말이 자주 사용된다. 워라밸이란 "Work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일상생활에서 일 못지않게 삶의 질을 중요하는 새로운 사회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다.

○ 그렇지만 우리나라 워라밸 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다. 2017년 한국인의 일과 삶의 균형 정도는 OECD 38개국 가운데 35위이다. 워라밸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2,071시간이다(2015년 기준).

○ 그러나 최근 워라밸문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학산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 앞으로 더욱 지속될 것이다. 실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트는 2018년도에 한국사회의 대표 트렌드 10개 가운데 하나로 워라밸을 꼽았다. 이러한 워라밸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일

보다 삶의 질을 우선시하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소확행을 즐기거나 여가레저문화를 즐긴다. 이들은 돈이 많아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저출산 · 고령화사회 낀 세대로 경제 불황, 취업대란, 양극화의 전면에 노출된 세대들이다. 불안정한 노동과 높은 실업률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추구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러한 워라밸문화는 저출산 · 고령화사회가 심화되고 4차산업 혁명의 여파로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Ⅳ-13〉 워라밸 세대의 특징

구분	내용
출생연도	1988-1994년
경험한 역사적 사건	세계금융위기, 취업 대란
갖고 형태	외동자녀 일반화
소통 정보 매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핵심가치	개성, 개인의 행복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문화는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소확행을 추구한다. 이들은 적은 임금을 받는 대신 비교적 많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화생활, 레저활동은 지양한다. 이들은 기성 세대보다 TV 시청 등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여가를 보낸다. 이들은 기성 세대와는 달리 컴퓨터 · 모바일게임을 즐기고, 아무 것도 안하면서 쉬는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유흥 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사회 워라밸문화를 확산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 큰 돈 소비없이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특히 여가레저시설을 확충하고 특별한 활동없이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아울러 컴퓨터 · 모바일게임 등이 익숙한 디지털세대인 만큼 디지털 문화예술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문화정책 방향

(1) 세대 상생의 문화

○ 현재 지배적인 문화는 대부분 젊은 세대 내지 중년층 중심이지만, 저출산 · 고령화사회가 정착될수록 젊은 세대 중심의 문화동향은 약화될 것이다. 오히려 문화의 축이 젊은 세대에서 노년 세대로 옮겨오면서 모든 세대에 걸친 문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시 말해 다양한 세대의 문화가 소비되고 소통되면서 세대를 초월한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소비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세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요구된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트롯 열풍만 보아도 그와 같은 전망이 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롯 열풍은 5060이 주도하지만, 젊은 세대도 좋아하고 함께 즐기는 복고풍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5060세대도 젊은 세대처럼 자신의 끼를 발산할 뿐 아니라, 팬덤문화를 낳고 과감히 자신의 문화취향을 드러내 놓고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미디어콘텐츠는 앞으로 더욱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 최근에는 젊은 층의 전유물이었던 아이돌 그룹 콘써트에 나이 든 세대들이 점점 많이 관람하고 있다. 베이버부머세대들이 20대로 돌아가 20대의 문화를 즐기는 문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트롯 열풍이나 복면가왕 가요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세대도 향수를 자극하거나 복고적인 문화콘텐츠를 좋아 하고 나이 든 세대와 함께 문화를 소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점점 없어질 뿐 아니라, 모든 계층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세대간의 문화적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만큼 세대 간의 갈등을 풀고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확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세대 초월 문화콘텐츠는 미디어영역 뿐 아니라, 예술창작, 교육, 지역 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른 문화

○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서는 가족 형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 변화는 이미 상당한 정도 진행형이다.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가족형태는 '패치워크 가족'이다. 패치워크란 크고 작은 조각천을 이어 붙여 한 장의 천을 만드는 것으로, 이혼과 재혼의 일반화로 성이 다른 자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이런 가족형태는 이미 유럽의 경우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패치워크가족의 전망은 이미 여러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다. 2008년 TV드라마로 인기를 얻었던 '가문의 영광'에서는 네 커플의 재혼이야기를 그려 복잡한 가족관계를 보여주었고, 최근 방영되고 있는 KBS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도 자녀들의 이혼과 재혼 등을 코믹하게 다루어 이혼과 재혼이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1,2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 결혼 안하는 비혼족이 일반화되어 결혼하지 않고 독립해서 혼자 사는 1인 가족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또는 부부만 살거나 이혼 뒤 자녀와 사는 2인 가족형태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음식문화는 물론 여가레저문화 및 예술 공연 관람도 1,2인 가족의 관람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날 또다른 가족형태의 하나는 '공동체가족'이다. 이미 혈연 중심의 가족형태는 형해화되었으며 혈연과 관계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정서적 유대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는 가족공동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1인가족끼리 모여 공동식사를 하는 공동체도 있고,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홀로 된 노인들이 모여 사는 노인공동체도 나타나고 있다. 또는 다문화가정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이거나 결혼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본인은 물론 자녀들도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만 한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서는 여러 모습의 가족형태가 나타나는 만큼 그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요구될 뿐 아니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도 각양각색의 문화예술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소비형태의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뿐 아니라, 문화공간도 다양하게 구성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근린문화 시설이 더욱 많이 요구된다.

(3) 노인 친화형 문화 확대

○ 일반적으로 고령자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20세기 산업화시대의 유산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장수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애주기 역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중년기는 연장되고, 노년기는 늦추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실적으로 중년기는 69세까지, 노년기는 70세부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노년기는 다시 70대를 전기 고령기, 80대 이상을 후기 고령기로 설정할 수 있다. 또는 70대를 초기노인, 80대를 중기노인, 90대 이상을 초고령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다. 2000년 한국의 평균 수명은 76세였으나, 5년이 지난 2015년에는 82.6세로 6년이나 늘어났다. 그 결과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14% 이상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1천만 명 20.1%에 이를 전망이다. 점점 고령인구는 늘어나, 2036년에는 전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이고 2051년에는 40%대에 진입한다고 한다. 기대수명도 점차 증가해 2020년 83.2세(남성 80.3, 여성 86.1)에서 2025년 84.2세(남성 81.5, 여성 86.9)로 늘어날 전망이다.

○ 한국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해방 전후기에 태어난 높은 비중의 연령층(1944~1954년생)이 모두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의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노령화가 가속화되었다. 해방 이후에 태어나 노년기에 진입한 새로운 노년층은 이전 노년층과는 인생 이력이 다르다. “삶의 방식, 문화, 가치관 등에서도 해방 이전에 태어난 기존 노년층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대”이다(김양식, 2019). 이들은 전통적인 노년세대와는 달리 대부분 고학력 출신으로 현대적인 생활문화에 익숙하다. 70대에도 활력이 넘치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노년층의 비율과 장수문화는 앞

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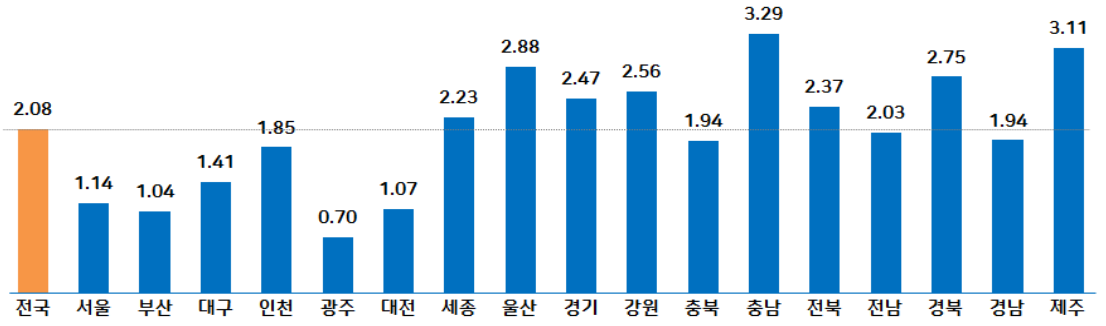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장수사회가 되면서 기대수명도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성이 90.8세, 남성이 84.1세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된다(김양식, 2019). 그 다음은 프랑스, 호주, 일본 순이다. 2017년보다 여성은 5.1세, 남성은 4.4세 증가한다. 세계 최고의 장수사회가 다가오는 지금, 제2인생기를 살아가는 신중년층, 베이비부머 출신의 젊은 노년층이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들 나이 든 중년층 내지 젊은 노년층은 기존 노년층과는 달리 자기계발에 적극적이다. 사회 활동도 능동적이다. 스스로 성공적인 노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실천하면서 인생 후반의 삶을 긍정적으로 설계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향하는 세대이다. 그에 따라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노화, 생산적인 나이듦, 성숙하게 나이 들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와 이들의 부상은 주목된다. 유튜브 활용도는 50대 이상이 평균 60%보다 많은 66.6%이다. 이는 2030보다 높은 비율이다. 소비활동 역시 왕성하다. 한달 평균 카드 사용액이 액티브 시니어층이 177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결과 시니어산업 규모 역시 급성장하여, 2010년 27조원에서 2020년에는 2.7배 증가한 72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에게서 “더 이상 사회적 돌봄의 대상, 젊은이에게 부담 주는 식충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약한 노년의 고정된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김양식, 2019). 그들은 젊은이에게 없는 장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나가는 그레이트 그레이, 꽃노년들이다. 그들은 분명 백세시대에 새로 나타난 신세대들이다. 이와 같이 백세시대 초고령사회에 새로운 신세대로 등장한 신중년층이 부상하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어느 인류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미국 “밀컨경제연구소는 인류가 전혀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자원이 고령자”라고 하였다(김양식, 2019).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고령층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가 중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실버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점차 고령층의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역할도 크게 주목받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 출현하는 백세시대의 새로운 장수문화를 육성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웹버족(Webver)’이란 인터넷과 실버 세대의

합성어인데, 디지털문화와 인터넷을 즐기는 실버세대가 점증하고 있다. 현재 60대 이상이 인터넷 사용률은 점차 높아지고 인터뷰 이용도 젊은 세대보다 노년세대가 많은 실정이다. 이미 노년세대가 디지털환경에 익숙해지면서 교육과 문화생활, 오락과 쇼핑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웹버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년세대를 위한 온택트 문화예술콘텐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노년층은 건강하고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계발에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거나 여가레저 및 스포츠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노년을 위한 여가레러 및 스포츠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그들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노년층은 외형적인 복지를 넘어서 내면적인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4)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충북의 새 문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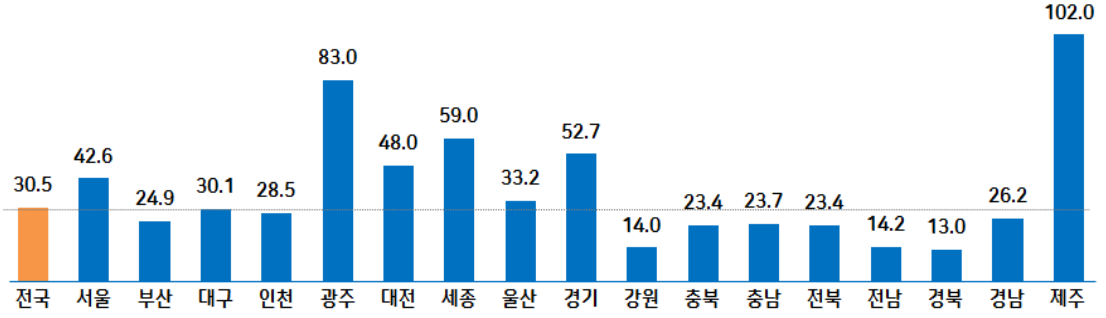
(1) 충북 지역문화 현황과 과제

○ 2017년 기준 충북의 문화 예산은 전국 평균 2.08% 미치지 못하는 1.94%에 불과하다. 그 결과 인구 1명당 평균 문화 관련 예산액도 전국 102,000원보다 약간 많은 106,000원에 불과하다. 예산은 문화 관련 사업량을 좌우하는 바로미터로,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문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3% 가까이 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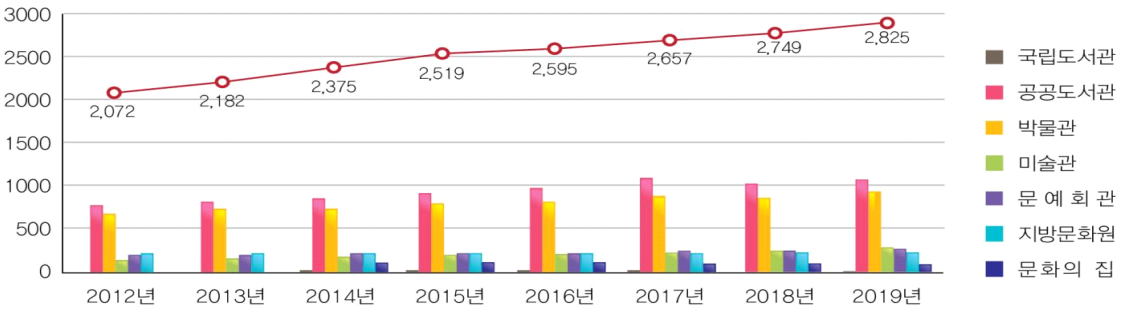
〈그림 Ⅳ-5〉 전국 시도별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

○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서는 생활문화가 진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충북의 생활문화시설은 전국 평균 30.5개에 미치지 못하는 23.4개에 불과하다. 고령화사회에서는 고령층의 문화시설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생활문화시설이 연차적으로 확충될 필요성이 있다.



〈그림 Ⅳ-6〉 전국 시도별 자치단체 평균 생활문화시설 현황

○ 충북의 생활문화시설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문화기반시설수는 그렇지 않다.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은 2010년 1,883개소에서 2019년 2,825개소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저출산 · 고령화시대 긍정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Ⅳ-7〉 전국 문화시설 현황

○ 문화기반시설의 연차별 증가는 충북의 문화기반시설도 동일하다. 충북 역시 2009년 87개였던 문화기반시설이 매년 증가하여 2019년 현재 130개 이른다. 공공도서관이 45개, 박물관 44개, 미술관 11개, 문예회관 12개, 문화원 11개 등이다. 특히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는 저출산 · 고령화사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평생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여건이 되므로 긍정적이다.

〈표 Ⅳ-14〉 충북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추이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2019	130	45	44	11	12	11	7
2017	126	44	44	8	12	11	7
2015	126	41	44	8	13	12	8
2013	111	36	43	7	13	12	
2011	101	32	39	6	12	12	
2009	87	28	32	6	9	12	

○ 그런데 충북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추이를 자세히 보면, 2015년 이후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외에는 각 시설수가 정체되었다. 박물관은 44개 그대로이고, 문예회관과 문화원은 1개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충북의 인구가 정체되고 앞으로 감소 가능성이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수를 보면, 충북의 현실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충북의 인구수는 1,620,935명인데, 인구 백만명당 전국의 문화시설수는 54.68개인데 반해, 충북은 80.20개로 월등히 많은 편이다. 이는

2011년 인구 백만명당 전국 39.18개이고 충북이 65.18이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앞으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충북은 저출산 · 고령화사회 문화환경 개선에 있어서 양적으로 문화시설수를 늘리는 것보다 질적으로 기존의 문화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정책기조가 요구된다.

〈표 Ⅳ-15〉 인구 백만명단 문화시설수

	인구수	문화시설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충북	전국						
2019	1.620.935	80.20	54.68	27.76	27.14	6.79	7.40	6.79	4.32
2017	1,603,404	78.58	51.82	27.44	27.44	4.99	7.48	6.86	4.37
2015	1,578,933	79.80	49.08	25.97	27.87	5.07	8.23	7.60	5.07
2013	1,565,628	70.90	16.25	22.99	27.47	4.47	8.30	7.66	
2011	1,549,528	65.18	39.18	20.65	25.17	3.87	7.7.4	7.74	

○ 예를 들어 충북 공공도서관은 2007년 26개소에서 2019년 45개소로 매년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열람석 역시 2007년 4,507석에서 2017년 10,293석으로 128%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이용자는 2017년 전국 평균이 279,248명이고 수도권은 363,203명이나, 충북은 168,445명에 불과하다(전국문화시설 총람, 2017년도, 22쪽). 특히 도서관 1관당 평균 이용자는 2007년 189,863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충북 도서관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이런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수의 증가보다 이용 증진을 위한 시책이 요구된다.

○ 박물관 역시 2007년 23개에서 2019년 4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박물관 연관람 인원은 1개관 당 전국 평균이 103,883명이나, 충북은 46,306명으로 극히 낮은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충북 박물관 1관당 평균 관람인원이 2011년 80,507명의 60% 정도에 불과한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홍보가 요구된다.

〈표 Ⅳ-16〉 충북 박물관 보유자원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점, 명)

	시설수	직원수	학예직원수	연 관람인원	1관당 평균	전국 평균
2019	44	227	82	2,037,478	46,306	103,883
2017	44	240	45	1,896,495	43,102	127,220
2015	44	206	52	1,780,798	40,473	122,731
2013	43	238	63	2,063,336	47,985	125,134
2011	39	622	57	3,139,782	80,507	128,640
2009	32	260	23	1,436,567	44,892	124,389

○ 충북지역 미술관 역시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확인된다. 충북 미술관 수는 2009년 6개소에서 2019년 11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연 관람인원은 2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술관 1관당 연 관람인원 역시 2017년 전국이 76,078명이었던데 반해, 충북은 18,58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북 미술관 이용률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충북 미술관 이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표 Ⅳ-17〉 충북 미술관 보유자원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점, 명)

	시설수	직원수	학예직원수	연 관람인원	1관당 평균 이용자	
					충북	전국
2019	11	57	29	204,477	18,589	73,992
2017	8	42	11	560,042	70,005	76,078
2015	8	44	11	211,359	26,420	63,676
2013	7	42	10	188,662	26,952	76,816
2011	6	16	7	216,136	36,023	82,590
2009	6	25	7	220,584	36,764	51,980

○ 이러한 문제점은 대표적인 지역 문화예술공간인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이다. 충북 문예회관수는 2019년 현재 12개인데, 2009년 현황과 10년 지난 2019년 현황을 비교하면 충북의 문화예술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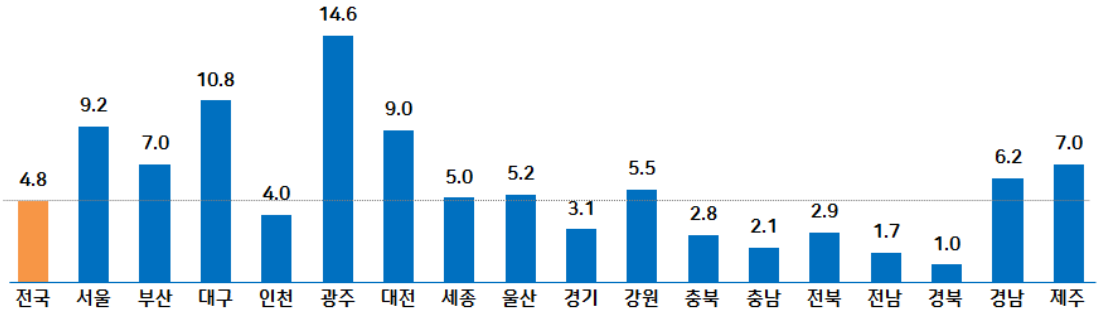
〈표 Ⅳ-18〉 충북 문예회관 보유자원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점, 명)

	시설수	직원수	전문직원수	공연일수	전시일수	유료관객수	총이용자수	유료 관객율	1관당 평균 이용자	
									충북	전국
2019	12	61	19	749	51	398,086	799,081	49.82	66,590	79,863
2017	12	59	19	1,199	403	339,279	818,193	41.47	68,182	103,615
2015	13	41	18	1,324	539	284,722	855,719	33.27	65,824	92,205
2013	13	56	17	1,340	721	71,776	800,811	8.96	61,600	117,803
2011	12	53	25	1,246	978	73,881	1,013,653	7.29	84,471	130,247
2009	9	84	62	712	838	203,644	884,616	23.02	98,290	118,884

○ 먼저 문예회관 전체 직원수는 2007년 84명에서 2019년 오히려 61명으로 줄어들었다. 전문직원수 역시 62명에서 19명으로, 전시일수는 838일에서 51일로 95% 가까이 감소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총이용자수 역시 884,616명에서 799,081명으로 줄어들었고, 2019년 1관당 평균 이용자는 전국의 79,863명에 미치지 못하는 66,590명에 불과하다. 단지 유료관람객만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충북의 양적인 문화시설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질적인 측면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만큼 기존 문화시설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마케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 충북의 지역문화예술법인 및 단체수는 전국 평균이 4.8개인데,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2.8개에 불과하다. 문화예술법인과 단체는 민간에서 지역문화를 이끌고 가는 주체적 역할을 하는 만큼, 충북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 · 고령화사회가 심화될수록 지역 문화예술인의 고령화 역시 가속화되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공공영역에서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민간의 주체적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그 비율이 점점 커지는 노년세대 가운데 지역문화인력을 양성하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8〉 전국 시도별 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법인 · 단체 현황

○ 특히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이 저조한 실정이다.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충북의 문화예술교육사는 인구 만명당 전국 평균 2.3명에 미치지 못하는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국 최하위이다. 앞으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사를 양성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

○ 충북의 열악한 문화환경은 소외계층에 대한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노인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수는 전국 평균이 4.0건인데 반해, 충북은 2.4건에 불과하다. 다만, 대문화 · 새터민 · 이주노동자 · 성소수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수는 전국 평균 1.7건보다 많은 2.1건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이와 같이 충북의 현 문화환경은 여러모로 열악할 실정이다. 저출산 · 고령화사회는 이전 시기보다 양질의 문화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을 필요로 한다. 특히 청년예술인은 감소하고 기성 예술인은 노령화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충북 차원에서 지역 문화예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 조응하는 문화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해야만 한다.

(2) 충북의 새 문화정책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문화 환경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을 통해 문화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에 기반을 둔 태교와 양육문화를 확산하여 아이를 낳고 싶은 출산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 어느 곳에서나 충북으로 와서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여가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장년문화를 육성하며, 인생3막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인 친화 웰빙문화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바,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전통에 기반을 둔 출산문화를 장려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충북으로 자리매김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난 과거 출산 및 육아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에서 가능성을 찾고 미래 출산문화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충북 청주는 세계 최초의 태교책으로 알려진 『태교신기』를 저술한 사주당 이씨(1739-1821)가 태어나 성장한 곳이다. 그는 용인으로 시집을 갔지만, 늘 어머니가 계신 청주를 생각하며 사모하는 시를 남기는 등 어느 누구보다도 고향 청주를 사랑한 여성 성리학자이다. 『태교신기』는 사주당 이씨의 아들로서 조선후기 한글학자인 유희가 임신부를 위하여 한문으로 지은 사주당 이씨의 글을 언해하여 1801년에 완성한 태교 지침서이다. 이는 세계 최초의 태교책으로, 원문 26장, 언해 43장, 합 69장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태교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본받아야 할 태교책이다. 이러한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려 현대적인 출산문화를 재정립하고 확산하여 아이 낳고 쉽은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 둘째,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청년문화를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세대간 · 계층간 문화 단절을 극복하고 노년시대 새로운 청년문화를 창출해야만 한다. 특히 충북은 저출산으로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충북지역으로의 청년층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청년예술인의 단절과 타지역으로의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문화 단절은 물론 지역문화의 노쇠화가 촉진될 것이다. 따라서 충북의 미래 청년문화 위기가 가중되는 만큼,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문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청년문화정책이 추진되

어야 한다. 충북지역 대학의 예술 관련 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이는 청년예술층을 양성하는 것 외에 차세대 청년문화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아닐 수 없다. 청년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창작스튜디오 등과 같은 플랫폼과 활동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원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안팎의 청년예술인들이 충북으로 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활동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공공문화시설을 청년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하여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청년예술인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북의 문화시설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반면,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청년 문화기획자와 예술가들에게 문화시설을 개방하거나 직간접으로 고용하여 활동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문화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문화다양성은 미래사회 문화의 한 축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통해 세대 및 계층간 문화 나눔을 꾀하는 동시에 다문화가족 및 인종이 살 수 있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문화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세대간·계층간·지역간·국가간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고 공감하며 재창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누구나 어디에서나 문화예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세대간 소통 부재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세대별 · 계층별 문화예술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 소비자인 동시에 창작자가 되도록 하여 문화르네상스를 열어나가야 한다. 특히 세대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노령층의 문화 소비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예술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살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만들기를 통해 인구 유입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유휴공간과 시설을 문화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저출산 · 고령화로 문을

닫는 여러 공간과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들을 근린 문화시설로 재편하여 문화 향유권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공간과 시설은 노년층의 문화 공간이나 여가레저시설로 활용하고, 또는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거점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생활예술인들에게도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정주환경과 문화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과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여섯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문화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기존의 노년정책은 거의 모두 노년층을 보호의 대상이자 약자로 인식하고 복지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였지만,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서는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에 맞춰서 지속가능한 생산적 노년 문화정책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산적 노년 문화정책이란 노년층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기존의 노년상을 해체하고 사회적 자본으로 재인식하는 동시에, 노년층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생산과 소비층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년층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건강한 장수문화를 활성화하고 노년과 함께 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공문화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5) 결론

○ 지금까지 저출산 · 고령화사회가 일반화되면서 나타나는 문화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라 충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출산 · 고령화사회는 많은 인구구성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문화환경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는 노년층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자기 계발 욕구가 강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추구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젊은 노년층 신세대이다. 전과는 다른 문화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서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추구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증가와 그들의 문화 욕구는 증대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활동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문화 활동이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서 가능하도록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공공문화정책을 통해 주어져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추구하는 삶의 질은 여가문화가 좌우할 정도로 점점 여가문화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인의 여가문화는 주로 TV 시청, 잡담이나 통화하기, 쇼핑/외식, 인터넷 검색, 산책 및 걷기, 친구만남, 음주, 목욕, 스포츠경기 관람 등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TV 시청시간을 줄이고 좀더 다양한 양질의 여가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친구 만남, 산책이나 걷기, 영화 관람, 쇼핑과 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들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를 통해 여가 활동이 워라밸문화로 확장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상승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 그를 위해서는 공공문화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먼저 세대 상생의 문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는 젊은 세대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고령층이 새로운 문화 주체로 부상하는 만큼 세대 상생의 문화를 지향해야만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사회는 비혼, 이혼, 재혼, 다문화로 인해 가족형태 역시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1인 가족, 다문화가족, 가족공동체 등으로 재탄생될 것이므로, 공공문화정책도 가족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홀로 사는 1인가족이나 가족공동체 또는 다문화 정책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추구해야만 한다. 특히 초고령화사회에 맞추어 기존에 소홀히 다루었던 노인 친화형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사회는 사회가 고도화되고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하면서, 건강하고 풍유로운 삶의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일반인들의 문화향유 수요 또한 크게 증대될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행복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그것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조건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앞으로는 물질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이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인구 이동 역시 건강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갖추어진 곳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모든 계층과 세대, 특히 고령층에서 더 뚜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사회는 다문화사회를 촉진할 것이다. 해마다 이주 노동자와 국제 결혼은 증가하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다문

화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화다양성을 충족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나야만 한다. 저출산 · 고령화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여가레저문화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공공문화정책도 여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증대할 것이다.

○ 4차산업혁명의 결과 문화 역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문화콘텐츠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창의지식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산업생태계가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창의인력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저출산 · 고령화사회 문화환경의 변화 속에서 충북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젊은 세대가 축소되면서, 세대 단절로 인해 세대 사이의 문화 단절과 격차가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문화 전승 주체의 단절과 세대 격차로 충북 지역문화의 쇠퇴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충북지역은 저출산이 심화되고 젊은 층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문화 단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청년문화의 쇠퇴로 악순환의 늪에 빠질 개연성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문화를 강화하고 고령층의 문화환경을 확대하여 고령층이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세대간의 소통과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대 공감 문화도 더욱 활성화해야만 한다. 아울러 앞으로 세대를 초월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혼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잘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확대해야만 한다.

3 지역개발부문

1) 서론

○ 저출산·고령화는 개인의 삶의 질에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역개발분야의 대응이 요구된다. 기존의 지역균형과 지역불균형, 수요공급중심과 대안적 지역개발이론들과 이들의 정책에서 잘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기가 어려웠던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대해서 거버넌스나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개발이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지역의 변화와 지역에 대한 도전을 살펴보고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요구되는 지역개발정책의 변화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충청북도에 맞는 지역 맞춤형 전략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 주요 이슈들[27)]

○ 우리나라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공간구조이론은 지역개발에 대한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60년대 이전의 지역개발은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지역개발을 위한 공간구조이론은 성장거점이론이나 불균형발전이론과 같이 국가나 중앙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하향식 접근방식을 취해왔다(강명구 외, 2017, 29).

○ 1970년대 이후의 지역개발은 지역 간 형평성이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같은 사회적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공간구조이론도 분산적 집중발전전략이론이나 지역균형발전이론과 같이 상향적 발전이론과 내생적 발전이론이 나타난다. 1980년대 이후에는

27) 강명구 외, (2017), 『지역개발론』, 박영사.

지방화시대의 전개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제기하면서 대량생산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이론과 같은 공간을 넘어서 환경의 영역을 포괄하는 공간구조이론들이 나타난다(강명구 외, 2017, 29).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와 지방화, 지식정보화 그리고 혁신의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서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의 공간구조이론을 넘어서는 접근방법과 이론체계가 요구되며 비가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론화가 시작된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공간구조이론들은 환경, 소통, 삶의 질의 향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가지게 된다(이성근 외, 2013). 이러한 이론들을 일반적으로 대안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산업이론, 환경이론, 그리고 사회이론으로 나뉜다. 산업이론 분야의 지역개발 공간이론은 집적과 학습,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이론들인 유연적 생산체제 이론, 클러스터이론 및 지역혁신체제론이 있고, 환경이론 분야의 지역개발 공간이론은 1980대 이후에 발전되어 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론과 생태도시이론이 있다. 사회이론 분야의 지역개발 공간이론으로는 거버넌스형 지역개발이론, 네트워크 기반 지역개발이론, 지역문화기반 지역개발이론, 사회적 자본이론과 창조적 자본이론이 있다.

(1) 지역 불균형 성장이론[28)]

① 극화발전이론

○ 허쉬만(A.O.Hirschman)은 국가의 성장은 반드시 불균형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성장점을 만들어 내고 지역적인 분화 혹은 분극화(polarization)가 발생하여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 간 교류와 보완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소득격차가 궁극적으로는 해소가 되며 이를 낙수효과(trickling-down effect)라고 규정한다.

○ 고병호(1995)는 저개발국가에서 부족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낙후된 경제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특정한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장의 확산이 첨단산업에서 후발산업으로 발전지역에서 미발전지역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극화발전이론의 핵심이다.

28) 이성근 외, (2013), 『최신 지역발전론』, 도서출판 집현재.

② 누적성장이론

○ 미르달(G. Myrdal)은 누적적 효과를 가지는 순환인과관계 모델이 실제 경제활동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중심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확산효과(spread effect)와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발생하게 되어 성장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확산효과는 중심지 투자로 인한 소비증가가 궁극적으로는 배후지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기술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역류효과는 중심지의 기능이 누적적으로 강화되어 인구와 자본이 중심지로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르달의 주장의 결론은 누적적 인과에 의한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향식 개발 모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③ 중심-주변부 이론

○ 프리드만(J. Friedmann)은 미르달의 누적적 인과모형과 허쉬만의 극화발전이론을 종합하여서 중심-주변부 모형(core-periphery model)을 발전시켰다. 이 모형에서 정책결정, 자본의 흐름, 혁신의 확산, 인구이동의 네 가지 요소에 따라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게 된다. 수출산업의 성장에 의해서 지역성장이 촉진되며 중심부는 강화되고 성장이 일어나는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주변부가 되어 중심부에 인력, 자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프리드만은 공간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중심지는 대부분 수도에 위차하여 전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

④ 성장거점이론

○ 성장거점이론은 페로(F. Perroux)의 성장극이론의 발전된 형태로서 개발 초기단계의 한정된 가용자원을 낙후지역 내의 거점에 집중하여 지역개발의 거점을 확보하여 이의 성장력을 주변지역에 까지 확산시켜서 지역전체의 성장을 만들어 내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모든 지역에서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은 확산과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보다는 불균형의 심화와 주변부의 소외,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통합개발이나 협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본 이론은 전형적인 하향식 개발이론으로 상향식 개발이론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2) 지역 균형 성장이론[29)]

① 고전적 균형성장 이론

○ 고전적 균형성장이론은 완전경쟁을 가정한 고전경제이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공간경제모형으로 지역 간 불균형은 일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지역들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가정한다. 정부의 역할은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있어서 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촉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고전적 균형성장이론에서 주장하는 완전경쟁시장 조건은 존재하기가 어려우며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은 국가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연적인 균형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고전적 균형성장이론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② 신고전주의 일반균형이론

○ 일반균형이론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지역 간 소득을 균형화시킨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발생하는 소득 격차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본과 노동이 보다 높은 이자율과 임금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균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주장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주의적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모형의 장점은 국가경제의 총량을 지역경제분석에 적용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내 성장과 지역 간 관계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술진보의 주재, 집적경제, 도시화 등 지역경제의 특성이나 기술발전, 그리고 다원적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3) 수요공급중심 성장이론

① 공급중시이론

○ 공급중시이론은 지역경제의 핵심은 해당 지역의 공급능력에 있기 때문에 공급을 결정

29) 이성근 외, (2013),『최신 지역발전론』, 도서출판 집현재.

하는 생산요소의 부존량에 의해서 지역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지역의 경제력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의 함수로 결정되면 여기에서 지역의 공급에 대한 수요는 항상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이는 신고전파 모형의 지역차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각 지역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노동과 자본이 이동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의 노동과 자본의 균등한 분포와 함께 소득수준이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수요중시이론

○ 수요중시이론은 공급중시이론과는 다르게 지역성장의 원동력을 수요, 즉 지역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외부 수요의 크기에서 찾는다. 지역의 공급능력은 항상 충분하다고 가정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제기반모형 혹은 수출기반모형에 의하면 지역의 경제성장은 해당 지역의 기반산업(혹은 수출산업)에 대한 외부의 수요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③ 수요공급혼합이론

○ 수요공급혼합이론에서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정립하고 이론을 전개한다. 리처드슨(H.W. Richardson)이 주장한 누적적 인과관계모형(cumulative causation model)과 펄로프(H.S. Perloff)가 주장한 변이-할당모형(shift-share model)이 수요공급혼합모형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 누적적 인과관계모형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외부수요의 증가는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늘여서 도시의 공급력을 확대하고 생산비와 수출가격을 낮추어 외부수요가 다시 확대된다는 논리이다. 변이-할당 모형은 한 지역의 경제성장이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 해당 산업의 성장과 해당 지역의 입지적 경쟁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4) 대안적 지역개발이론[30)]

① 유연적 생산체제 이론

30) 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2009),『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 유연적 생산체제 이론은 피오레와 사벨 (M. Piore and C. Sabel)에 의해 처음 제시되고, 허스트(P. Hirst), 자이틀린(Zeitlin)과 같은 제도학파 학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었다. 대량생산모델의 한계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생산방식을 유연적 생산체제라고 하며 기존의 규모의 경제가 아닌 범위의 경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 포디즘으로 불리우는 기존의 대량생산체제에서는 제품특수적 기계와 미숙련이나 반숙련 노동자를 활용한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반해서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제에서는 범용기계와 숙련노동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문생산을 한다는 점에서 대비가 된다. 제3이탈리아 지역이나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등에서 소규모 기업들 중심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높은 혁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첨단기술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독립적인 전문적 소기업들이 집적하여 상호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유연적 생산체제의 지역개발에서의 활용은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마샬이 1890년에 최초로 사용한 용어인데 전문화된 소규모 단일기업의 지리적 집적을 통해 외부경제를 확보하고 지구 내의 분업과 협력관계 구성,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지역 분위기 등을 말하고 있다. 산업지욱의 성장원인은 지역 내 소기업들이 시장수요의 변동에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반응하고 개발 기업들 간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자원의 재구성을 통해서 시장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② 지속가능한 발전이론

○ 1968년 국제연합의 결정에 의해서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인간환경에 관한 UN회의'가 개최된다. 여기에서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는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스톡홀름 선언문과 행동계획 등을 채택한다. 그리고 1989년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에 의해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어'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 '산림원칙선언', '의제 21'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에'생물종다양성 협정'과 '기후변화 협약' 등의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성과를 내게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주제로 다룬 이슈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라는 범세계적인 협력방안은 이제 환경을 포함하는 지역개발

정책의 새로운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는 인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되 기술혁신 등 창조적인 인간활동을 통해 자연의 수용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모든 인간활동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관리해야 함을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살펴본다면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환경자원이 고갈되며 훼손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하에서 탄생한 친환경적 발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용량을 고려한 발전방식으로 현재의 필요에 의한 발전이 후손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생태계와 자연환경 자원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재생 불능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및 요염물질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지역혁신체제 이론

○ 지역혁신체제 이론은 지역, 혁신, 체제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구성된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하고 습득하는 지식기반경제 기반의 기업과 산업이 존재한다. 둘째, 혁신은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해서 전파되고 습득된다. 기업의 경우도 내부적 이라기보다는 기업 간, 기업과 연구소 간, 기업과 공공부문 간의 연계망 속에서 발생하고 제도와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혁신을 체제(system)의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혁신체제는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지역이 되면 지역혁신체제가 되는 것이다. 넷째, 혁신에 더 나은 환경을 가진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다. 다섯째, 국가혁신체제보다는 지역혁신체제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여섯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 혁신 역량인 지역혁신체제를 갖는 것이 지역경쟁력의 핵심이다. 일곱째, 지역혁신체제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각 조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상호학습이 제도와 문화적 배경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혁신체제 이론의 장점은 현실적합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에서 이 이론을 배경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였다. 둘째, 낙후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영역의 구분의 모호성이라든지 산업분야에 따른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 한계로 남아 있다.

(5) 새로운 공간구조이론들[31)]

① 거버넌스형 지역개발이론

○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상호협력적 관계에서 추진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정부(government)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에 시민사회 영역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운영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도시의 공간적 확산, 대도시권 형성, 도시 계층 간의 기능적 연계와 네트워크형 도시 등 신지역주의 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단일 행정구역에 의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접 지역들 간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참여적 추진체제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지역 거버넌스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실현수단이 협력적인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의 참여범위, 참여방식, 참여단계, 상호작용 촉진 전략, 조정 및 중개 전략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② 네트워크 기반 지역개발이론

○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개발이론에서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에는 지역문제의 광역화와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된다.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는 지역 간의 광역서비스 공급 뿐 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확보와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여기에서 네트워크는 다양한 경제적 주체 간의 정보 및 자원을 교류하기 위한 긴밀한 연계망과 공식적인 관계형성을 포함한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지역은 그 물리적 규모나 실제적 기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③ 지역문화기반 지역개발이론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개발의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을 개발해 가는 이론이다. 이는 특별히 최근

31) 강명구 외, (2017), 『지역개발론』, 박영사.

주목받고 있는 창조적 자본이론 혹은 창조도시이론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의 '창조 계급의 부상(2002)'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어 온 창조 계급과 창조도시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 기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 계급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적 어메니티와 문화적 콘텐츠를 갖추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초점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에 초점을 맞춘 개발방식으로 지역문화개발을 위한 물리적 및 공간적 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상징성과 문화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문화적 어메니티가 좋은 지역일수록 창조계층의 유입과 비율이 높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문화 기반의 지역개발이론이 보다 구체화 된다면 유·무형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의 문화·생태를 활용한 테마 콘텐츠 개발, 한류 확산에 잠재력을 갖춘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에서 제작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가능한 콘텐츠 육성, 세계인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관광 연계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육성, 지역스토리 지도, 그리고 행정구역을 넘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문화권, 역사권 중심의 광역자치단체 간 컨소시엄 콘텐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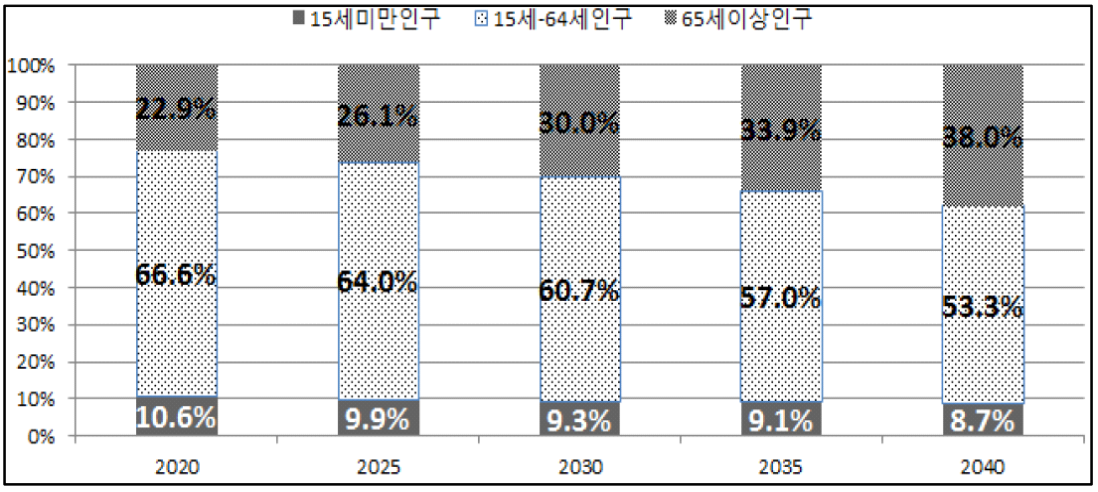
(1)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지역의 변화[32)]

○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역들, 특히 비수도권 지역들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은 대체적으로 인구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젊은 계층과 노동연령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인프라 및 공간의 문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사회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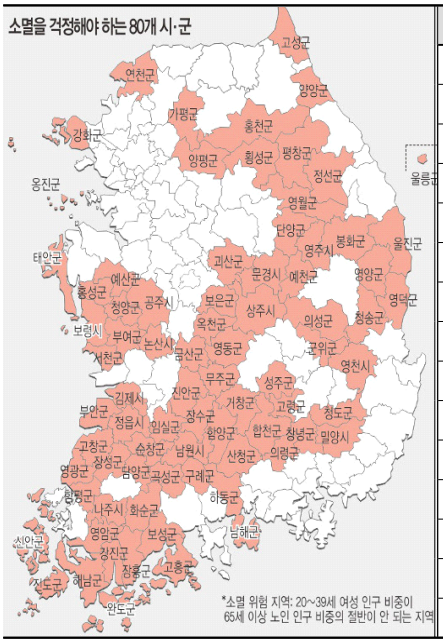
32) 기정훈, (2019),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한국형 사회복지, 아산재단 연구총서 451, 집문당.

향후 2031년 이후 인구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 다운사이징 효과'가 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의 〈그림 Ⅳ-9〉와 〈그림 Ⅳ-10〉 참조).



〈그림 Ⅳ-9〉 2040년까지 5년 간격 농촌의 인구 구성

자료: 통계청(2018) 이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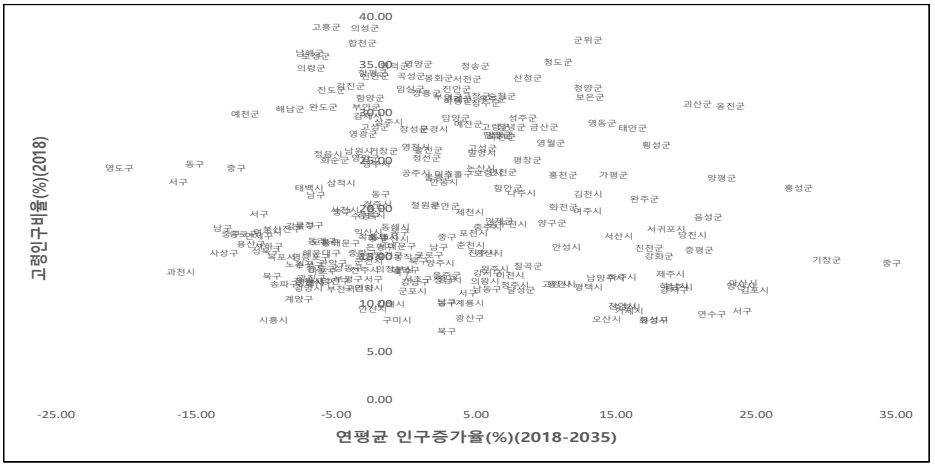


지역	전체인구	고령인구	위험지수
경북 의성군 신평면	811	444	0.047
경북 의성군 안사면	868	451	0.060
경북 군위군 산성면	1,265	607	0.066
강원 철원군 근북면	110	58	0.069
충남 서천군 시초면	1,349	660	0.070
경북 군위군 고로면	1,322	564	0.071
경남 거창군 가북면	1,448	658	0.073
경남 통영시 한산면	2,204	1,020	0.074
경남 합천군 쌍백면	1,922	980	0.076
경남 의령군 봉수면	1,056	507	0.077
경북 영덕군 창수면	1,856	893	0.077
경북 의성군 사곡면	1,581	718	0.078
경남 의령군 유곡면	1,298	636	0.079
경북 상주시 은척면	1,591	748	0.080
경북 영덕군 지품면	2,253	975	0.081

〈그림 Ⅳ-10〉 30년 이내 소멸할 위험이 높은 시·군 및 읍·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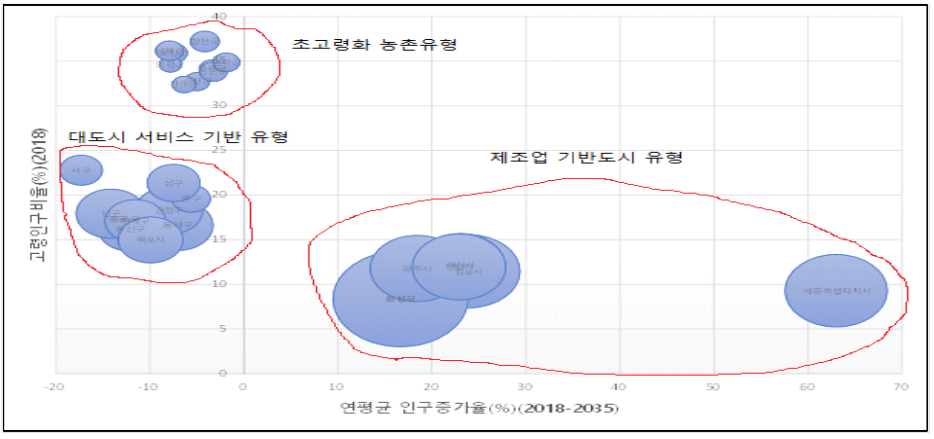
자료: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을 이용 재구성

○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고령인구의 비중이 향후 20년 동안 거의 40퍼센트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양상과 더하여 청장년 인구가 지방으로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의 지속가능성의 근간이 크게 흔들린다. 지방, 특히 농촌의 인구정체 및 감소는 산업화 시대 이후 대도시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지로서의 기능이 정지했다는 것과 함께 지방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도시와 지방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아래의 〈그림 Ⅳ-11〉과 〈그림 Ⅳ-12〉 참조).



〈그림 Ⅳ-11〉 전국 기초지자체 버블차트

자료: 기정훈(2019), 지방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아산재단 연구총서 451, 집문당



〈그림 Ⅳ-12〉 지자체-페르소나 버블차트

자료: 기정훈(2019), 지방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아산재단 연구총서 451, 집문당

(2)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지역의 도전

① 지역의 활력과 매력도의 감소

○ “출산율 감소, 고령화의 영향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특별히 해당 지역에 다양한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능력과 지역 활력 요소를 감소”시키게 된다(조선일보, 2009; 김광주 외, 2010, 권일 외, 2011: pp.7-8). 그리고 이러한 “재정능력과 지역 활력 요소의 감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매력도를 낮추어 인구를 다시 감소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양산”하게 된다.

② 지방재정에 악영향

○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의 구조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히 기초자치단체의 운영과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김종순과 장경원(2018)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노인인구비율은 지방세 규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출규모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입보다 세출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능식과 임성일(2007)도 출산율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비용의 부담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의 둔화와 재정의 세입기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지현(2015)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장기적인 전망이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는 사회복지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거래과세의 의존도가 큰 지방세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과 함께 세원의 신장성과 재정부담의 세대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소비세로의 중심 이동을 제시한다 (박지현, 2015:107-110).

③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복지수요 확대

○ 아동인구 비중의 감소는 아동인구에 대한 복지지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할 수 있으나 동시에 민간부문의 아동 양육비를 보조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수요를 확대하기도 한다.

④ 노인인구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

○ 노인인구는 은퇴 이후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과 의료정책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킨다. 이러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역별로 인구구성과 그 전개과정이 다르다면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재정규모도 달라진다.

⑤ 물리적 노후화

○ 저출생·고령화의 도전은 개별 도시에 물리적 노후화의 양상을 보인다. 물리적 노후화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인 설비가 결여된 열악한 주택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도시들에서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자 오히려 건축이 지체되어 오히려 인구감소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택의 노후화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도시기반시설과 도시서비스시설의 불출분한 공급 및 노후화 문제이다.

⑥ 경제적 쇠퇴

○ 저출생·고령화의 도전은 개별 도시에 경제적 쇠퇴를 가져와서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거주자의 기능수준과 제공되는 일자리의 불일치가 일어나며, 일자리 수요가 심각하게 부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심에서 상주 취업자 및 일자리 종사자의 감소와 동시에 직장과 주거의 분리가 확대되고, 상주 주민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맞지 않는 직종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하거나 감소하는 동시에 영세공장이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⑦ 사회적 문제 증가

○ 사회적 문제의 집중 차원에서 보면, 실업률이 높고 임금 수준이 낮아 빈곤층이 밀집해 있다. 또한 도심과 그 주변은 사회생활에 적응할 능력이 약한 사람들(주거 부랑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이 많이 거주하고, 동시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다. 이 경우 커뮤니티 의식 약화, 근린시설 수준저하, 범죄와 폭력의 증가 등 지역전체에 쇠퇴 현상이 만연하여 집단적 빈곤화가 나타난다.

4)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지역개발정책의 변화와 전망

(1)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지역개발정책에 요구되는 변화[33)]

○ 감소하는 인구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개발의 방식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시행해야 효과적이다. 농업, 산업 등 지역산업의 부족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 자원 확보가 관건이다.

①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와 인구이동현상을 반영하는 개발방식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에는 노인인구증가, 귀농귀촌 발생, 도시농업·정원활동 증가, 대도시지역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 귀농귀촌 발생, 도시농업·정원활동 증가, 대도시지역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생활양식 변화와 인구이동현상을 반영한 새로운 지역개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각 지자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② 인구희박지역과 저(低)이용토지의 관리기능 필요에 따른 소규모 개발의 필요

○ 수도권과 대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도시들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와 이에 따른 저이용토지의 관리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 해 왔던 대규모 개발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개발 및 연계망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③ 청년계층 및 노인계층의 필요의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한 인구의 유입효과 및 유출예방효과 도출

○ 청년계층의 필요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이 포함된다. 노인계층의 필요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실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이 포함된다.

33) 소진광 외, (2016),『지역개발모델구축 및 LH 참여방안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지역개발의 체계와 지역개발의 공간개념의 변화

○ 첫째, 지역개발체계에 있어서 개발중심의 계획에서 이용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가야 한다. 둘째는 도시정책에 있어서 도시 중심부의 재활성화와 교외 지역으로의 성장을 관리해야한다는 점이다.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확장은 비효율적이고 환경보전과 고령자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와 컴팩트하고 기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확산형에서 집약형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는 저출산, 초고령사회가 궁극적으로 일상적인 쇼핑이나 통원 치료를 위한 자동차 운전조차 불가능한 고령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도시권 중심 시가지 및 전철역 주변 등에 도시기능을 집약한 거점을 형성하고, 도시권 내부의 기타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해야한다. 거점에 대해서는 시가지정비를 통해 거주, 상업 등 각종 기능의 집적을 도모하되 기타지역은 밀도를 낮추고, 저밀도로 공동화하는 시가지는 자연 및 전원지역으로 재생해야 한다.

⑤ 지역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산업 및 자원 기반의 개발 방식의 도입

○ 내생적 개발을 위해서는 외부의 자원이나 산업이 아닌 지역 자체적인 자원과 산업이 중요하다. 지역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산업 및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개발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 인적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⑥ 교통망(계획) 연결 및 네트워크형 개발의 필요성 등장

○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생산·생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형 국토공간 구조 실현되고 있다. 융복합개발·결합개발의 활성화 및 기존사업모델들의 통합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결합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지역개발정책 대안[34)]

① 저출산·고령화 시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대통합

○ 재원지원에 비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복지부 추진 중심의 저출산고령화 시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합해서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내용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의 인구유입시책, 기업 및 창업 등 경제활력 제고, 육아 및 출산지원,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시책 등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단, 국가차원 출산강화정책은 복지부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일본과 같이 출산 및 육아, 지역활력 제고, 균형발전에 관련된 부처의 시책으로 사업 내용을 합리화하고 중범위 수준의 사업구성과 확대 규모의 사업구성이 가능하다. 사업추진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 패키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② 통합 및 개편

○ 저출산·고령화 시책, 국가균형발전시책, 농특회계 시책을 통합하여 개편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정책의 내용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의 인구유입 시책, 기업 및 창업 등 경제활력 제고, 육아 및 출산지원,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시책, 농촌지역 활력제고 시책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 정책의 추진은 지자체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 패키지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추진조직으로는 관련 위원회를 통합한 통합적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독자적인 지방소멸방지 시책 구성

○ 현재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을 설계해야 한다. 정책의 내용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의 인구유입, 육아 및 출산지원, 인구감소에 대응한 효율적 공간혁신 등으로 설계해야 한다.

*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문화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의 사업 중 상기 기준에 적합한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 정책의 추진은 지자체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 패키지에 대해서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가

34) 김현호, (2019),『지방소멸지역의 정책대응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되어야 한다. 추진조직의 경우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별도의 조직, 부처 간 협력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대한 법적 기반으로는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활력강화 특별법 혹은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방소멸 강화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비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이 비전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계정 등이 부재해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다. 일본 등의 정책에 비추어 보아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법적 지위 보유하고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처럼 조직의 통합,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출산 정책 등의 부재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인구감소 특례지역 지원

○ 인구감소 특례지역 지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구감소를 방지할 여력이 부족한 점에 착안한 특별한 정책 지원이라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의 전국화 등이 강화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부문적 처방이라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정책의 설계 등이 정책기획 및 설계에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점에 비해,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별도의 법률적인 기반 보다는 지방자치법 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3)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충청북도의 지역개발정책 제안

① 저출산·고령화 시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통합을 위한 세종시 와의 연계강화

○ 저출산·고령화 시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통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 도시인 세종시 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세종시와 연계하여 지역의 인구유입시책, 기업 및 창업 등 경제 활력 제고, 육아 및 출산지원,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시책 등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 패키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에 세종시 와의 공동사업을 확대해

가야한다. 여기에는 특별히 교통망 강화를 위한 시설 및 노선, 그리고 도로 건설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소도읍 중심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행정구역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 소도읍 중심으로 농촌이 활성화되어야 튼튼한 지방하부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소도읍 간의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조직으로는 지역 별로 통합한 통합적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충청북도의 독자적인 지방소멸방지 시책 구성

○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 정책의 내용에는 지역공동체 강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효율적 공간혁신 등으로 설계해야 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연구 및 학술 연계망 구축

○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비전과 전략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세우고 발전시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연구 및 학술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서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⑤ 인구감소 특례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 수혜

○ 충청북도의 도시 및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인구감소 특례지역을 지정하여 지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특례지역 지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구감소를 방지할 여력이 부족한 점에 착안한 특별한 정책 지원이라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비록 지방소멸의 전국화 등이 강화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부문적 처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정책의 설계 등이 정책기획 및 설계에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점에 비해,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5) 결론

○ 저출산·고령화는 개인의 삶의 질에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들, 특히 비수도권 지역들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은 대체적으로 인구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젊은 계층과 노동연령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인프라 및 공간의 문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사회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 다운사이징 효과'가 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역개발분야의 대응에 대해서 기존의 지역균형과 지역불균형, 수요공급중심과 대안적 지역개발이론들과 이들의 정책에서 잘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지역개발이론에 근거한 거버넌스나 네트워크 기반의 정책과 전략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지역의 변화와 지역에 대한 도전을 살펴보면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이동 현상과 인구희박지역의 관리기능 필요, 지역개발체계와 지역개발의 공간개념 변화, 맞춤형 주택공급의 필요, 그리고 교통망 연결 및 네트워크형 개발의 필요성 등이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요구되는 지역개발정책의 변화와 대안은 첫째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활용이고, 둘째, 지자체 맞춤형 재정 지원이다. 셋째,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들 수 있다. 특별히 충청북도에 맞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시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통합을 위한 세종시 와의 연계강화이다. 둘째, 소도읍 중심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행정구역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이다. 셋째, 가) 충청북도의 독자적인 지방소멸방지 시책 구성이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연구 및 학술 연계망 구축이다. 마지막 다섯째, 인구감소 특례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의 수혜이다.

4 행정부문

1)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충북전략의 필요성

○ 충북의 총인구는 감소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총인구는 203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충북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2045년에는 1,656만명이 된다.[35]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진전되고, 충북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충북이 안정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주민서비스의 제공은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행정 제도와 그 운용은 인구숙감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의 압축성장기에 마련되고 정비된 인프라와 공공시설은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를 필요로 하고, 인구감소의 진전에서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최적의 자원배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물적 및 인적자원의 적절한 교체는 인구감소시대의 사회경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인구증가모델에서의 행정서비스의 제공방법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의 필요성을 검토할 시기로 보인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인구감소시대에 행정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다. 과거로부터의 연장선에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상정하면서 착수해야 할 과제를 정리한다. 또한 행정부문에서의 과제를 가능한 한 폭넓게 정리하고 향후 충북의 시·군의 각 지역에서의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충북의 지자체전략의 기본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35) 충청북도, 2018, “충북인구구조변화-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충청북도

2) 미래를 상정한 충청 행정의 과제

(1) 스마트지자체로의 전환

① 도와 시·군 행정의 공통화의 필요성

○ 충북의 경영자원이 제약되는 가운데, 법령에 기반하는 공공서비스를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기술(AI와 로봇틱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36]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동화와 공통화를 도모하고, 소수의 공무원으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체제 구축이 불가결하다. 행정내부에서는 행정과 이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통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표 Ⅳ-19〉 정보시스템의공통화를 활용한 행정사무의 효율화

행정 내의 업무		집행체제의 간소화 및 효율화
• 대부분의 행정사무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내의 기초지자체는 효율화를 추진해 옴 • 지금까지 직원에 의한 행정사무를 시스템처리로 이행하는 것에 의해 효율화를 도모해 왔음 • 도내의 기초지자체가 부분최적화로 인해 전체로서의 정보시스템에 중복투자 발생	⇒	• 파괴적 기술에 의한 자동화(AI와 로보틱스의 도입으로 직원보다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시가 가능하게 됨) • 정보시스템의 공통화에 의한 표준화
주민 및 기업과의 접점		**편리성 향상**
• 서류 신청에는 기재항목이 동일해도 양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처리가 불가능하고, 주민 및 기업에 대한 부담 증가	⇒	• 일원적인 인터페이스의 구축과 활용

② 지자체간의 업무프로세스공통화와 AI/RPA의 활용

○ 동일한 법령이어도 (또는 동일한 정보시스템이어도) 지자체마다 서비스제공의 방법이

36) 파괴적 기술(Distruptive Technologies)이란 기존의 구태의연한 발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 기준에서 창의적인 생산 양식으로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신기술을 지칭한다.

다른 경우가 있다. 앞으로 단순히 정보시스템에만 머무르지 않는 업무프로세스의 자동화, 공통화가 과제로 된다. AI와 소프트웨어 로봇에 의한 업무자동화(RPA)의 도입이 우선시되어 주민으로부터의 신청서류와 타기관 등에서 송부된 서류를 다른 시스템에 손으로 입력하는 과정을 자동처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Ⅳ-13〉 파괴적 기술을 활용에 의한 업무의 자동화

(2) 민관협력에 의한 생활 형태의 유지

① 민관협력에 의한 플랫폼 빌더로의 전환

○ 충북도는 경영자원의 제약으로 과거의 방법과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상호협력하는 기반이 취약하다. 또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지원기능을 담당해 온 지역연고조직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기능이 저하한다. 인구감소에 의한 시장의 축소로 민간사업자의 철수와 서비스의 축소가 발생한다. 또 독거고령자세대와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가족의 상호부조기능도 저하한다.

○ 충북은 민관의 협력으로 기능 저하에 대응해서, 민관 상호간의 협력관계의 구축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해 가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에서의 요구는 가사지원, 지킴이, 자녀양육지원, 지역의 교류 등 폭넓게 존재하고, 앞으로 고령화와 가족형태, 지역사회의 변화에 의해 일상을 지탱하는 기능이 저하하고, 새로운 민관 협력관계의 구축으로 일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 Ⅳ-20〉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 요구의 대응

<table>
<tr><th>민관에 의한 요구 충족 기능의 저하</th><th>주민요구 충족기능의 필요성</th></tr>
<tr><td>• 지자체의 경영자원의 제약에 의한 서비스제공기능의 저하</td><td>• 인구감소에 의해 서비스제공기능이 낮아지지만 주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니즈의 충족불가결</td></tr>
<tr><td>• 주민 간의 관계성의 약화</td><td rowspan="4">• 도내의 기초지자체는 새로운 민관의 협력관계의 구축으로 주민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td></tr>
<tr><td>• 지역연고조직의 상호부조기능의 저하</td></tr>
<tr><td>• 가족의 부조기능의 저하</td></tr>
<tr><td>• 시장서비스의 저하</td></tr>
</table>

○ 주민 간의 관계성이 약해지고 공조에 의한 상호부조의 착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민이 개별 대응으로 서비스를 구입하여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상정되고, 지역의 공통과제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진다. 앞으로 주민요구를 만족시키는 요구에 의한 서비스제공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과제로 된다. 지역연고조직 등의 공조에 의한 상부상조가 행해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요구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이 비즈니스로 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공조에 의한 상부상조의 기반으로 되는 주체(지역운영조직 등)가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재, 자금, 노하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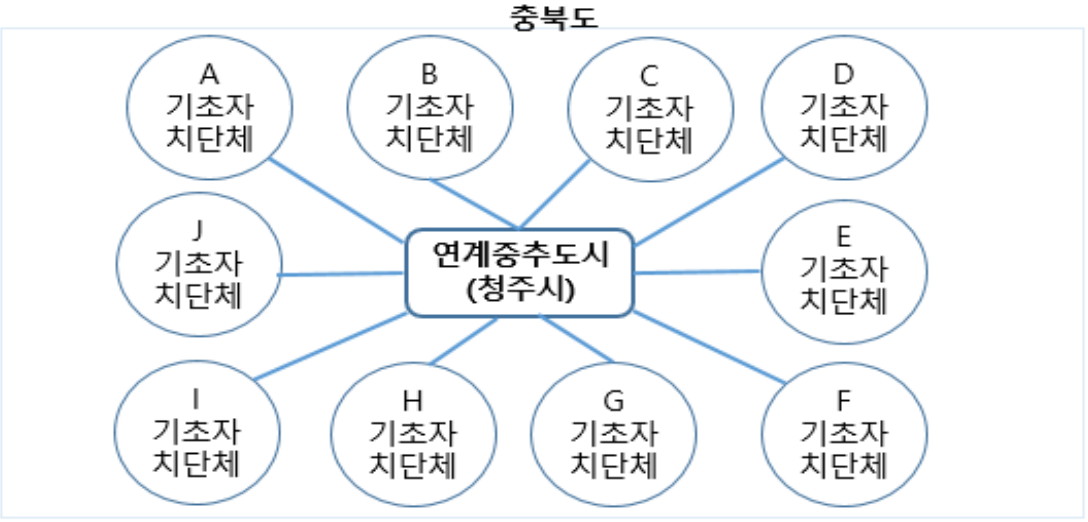
(3) 충북지역의 경영관리와 2층제의 유연화

① 시·군 간 연계와 충북도의 보완

○ 모든 행정서비스를 시·군이 개별로 제공하는 발상에서 전환하여 시·군 간의 연계를 유연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책면에서의 기본적 방침과 역할분담을 정한 지자체 간의 '연계협약'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시권에서는 연계협약을 활용한 연계중추도시권 등의 형성, 여건이 불리한 배후지역은 충북도에 의한 보완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② 연계중추도시권

○ 인구감소사회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경제를 견인해 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계중추도시(청주시)와 그 배후지역 혹은 2개 전략도시(충주시, 제천시)와 그 배후지역을 전략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계중추도시와 전략도시에서는 중추적인 도시가 그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 역할에 부응하는 재정과 기본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연계중추도시권에 기반한 정주자립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림 Ⅳ-14〉 충북의 연계중추도시권의 이미지

권역중추도시선언	⇒	연계협약체결	⇒	충북도내의 권역 비전 책정

- 충북도가 연계중추도시를 포함한 근린 시·군과 연계해서 도내 전체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연계중추도시 및 전략도시는 도내 전체의 경제를 견인해서 주민 전체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사를 표명
- 연계기초자치단체는 연계중추도시 및 전략도시와 경제, 사회, 문화, 주민생활 등에서 밀접한 관계 유지
- 충북도는 도내의 권역 비전을 책정하고 제시

③ 지역경영관리의 실현

○ 충북도의 중추연계도시와 전략도시에서도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전된다. 고도기술의 종합의료와 고등교육, 교통결절기능, 비즈니스지원기능, 상업시설 등 도시의 집적을 기반으로 지역 전체의 생활과 산업을 지탱해 온 도시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 연계중추도시권의 구상은 중심도시에서의 시설의 광역수용, 시설의 상호이용, 이벤트의 공동개최 등 연계하기 쉬운 영역에서 연계를 시작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시대의 위기에 대응해 가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부담의 분담과 이해조정을 동반하는 합의형성은 쉽지 않겠지만 충북도내에서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다양하고 중대한 행정과제에 대응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계중추도시와 전략도시를 중심으로 도내의 생활실태 등을 충북도의 정책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의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관점에서 도내의 실체성을 확립하고, 현재화시켜 중심도시의 경영관리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지자체 행정의 기본 틀

○ 충북도의 총인구는 계속 점증하다가 2035년을 정점으로 인구숙감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시간차가 존재한다.[37]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은 2015년부터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제천시, 보은군, 괴산군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음성군은 2025년, 청주시 2039년, 증평시는 204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

37) 충청북도, 2018, "충북인구구조변화-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충청북도

으로 전망된다. 다만 충주시와 진천시는 204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구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반면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45년에는 총인구의 38.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38] 향후 충북도내의 사회경제가 직면해야 할 노동력의 심각한 공급제약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충북도내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노동력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경영자원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전제로 기존의 제도, 업무를 대담하게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 충북도의 기초자치단체에 요구되는 기능도 변화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해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각 영역에서 주민 생활을 지탱하는 기능이 저하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는 "플랫폼 빌더"로서 새로운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충북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관련 이해당사자와 함께하고 관련 행정업무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매니저로 될 필요가 있다. 시·군은 민관협력을 지탱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워라벨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쉬운 지역으로 만들어서 정년을 전후해서 새로운 활약의 장과 높은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인재가 유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충북의 지자체가 주민서비스를 지속적이며 동시에 안정적으로 제공해 가기 위해서는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파괴적 행정'으로 AI, 로보틱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민관협력을 구축하여 지금보다 더 소수의 공무원으로도 본래의 업무기능이 작동되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직면하는 과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충북의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인구숙감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인구증가의 시대에는 인구증가와 도시의 확대에 수반하여 증가하는 행정과제를 개개의 지자체가 현장의 지혜와 다양성에 의해서 창출한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극복해 왔다. 요약하면, 자립한 지자체가 추구하는 개별 최적의 합으로 전체 최적을 만들어내는 구조였다. 하지만 인구숙감기에는 행정이 직면하는 과제의 해결방법이 다양해지고 충북의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행정서비스의 질과 수준에 직접 관련되지

38) 전게서

않는 업무형태는 오히려 전체의 최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향후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수준에 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인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공통기반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39]

○ 인구감소시대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개별 시·군 단위에서의 대응을 넘어선다. 인구 숙감과 함께 도시권의 기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의 총량도 줄어든다. 개별 시·군이 단기적인 개별 최적을 추구하고 과잉시설의 유지와 충북도내에서의 자원쟁탈을 계속하면 숙감하는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게 되고, 기초자치단체 전체, 나아가서는 충북도 전체가 쇠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연대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개별 최적과 전체 최적을 양립 가능하게 하는 충북도의 경영관리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충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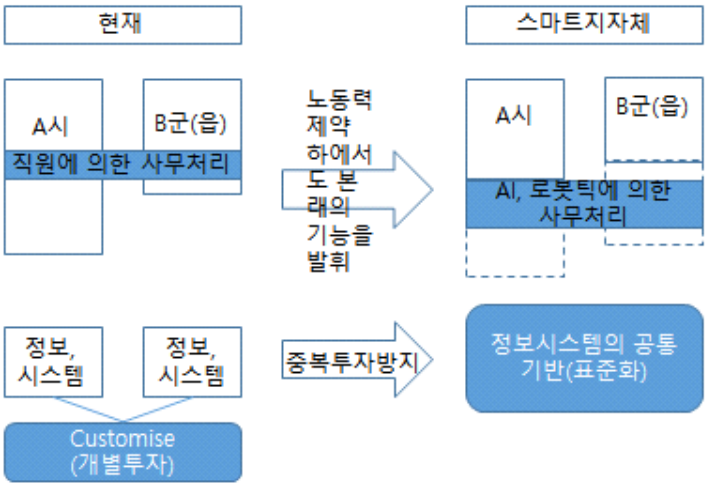
○ 다가오는 충북의 위기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충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가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 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설치하고, 연대해 갈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다가오는 위기를 충분히 인식한 다음 미래의 지역 모습을 상정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강구해 갈 것인지, 위기를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그 실시가 요구된다. 충북도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전개해 갈 필요가 있다. 위기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이다. 충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화될 수 있는 과제요구의 필요성을 재점검해서 미래의 시점에 서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최우선으로 착수하는 것이 지금 절실히 요구된다.

39) 이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공통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차선책으로 충북도의 차원에서 공통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 스마트 충북으로의 전환

▮ 직원감소와 효율적 충북 행정

○ 충북도내의 최대의 제약요인은 노동력이다. 향후 지자체에서는 노동력의 공급제약을 공통으로 인식해서, 미래의 시점에 서서 스스로의 모습을 재확인하고, 미래의 주민과 지자체 직원을 위하여 현시점에서 업무의 모습을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노동력 제약에 대한 대처로는 민관을 불문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된다. 충북도가 타지역에 앞서 모든 분야에서 파괴적 기술(AI, 로봇틱스,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공설비의 투자로서 인식을 전환해 가면 새로운 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충북도의 관점에서는 도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소수의 공무원으로도 업무기능이 작동되고, 복잡한 과제들을 양과 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5〉 기술변화에 의한 시·군 행정시스템의 전환[40]

40)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2018)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第2次報告". 충청북도(2018), p.39에서 재인용.

② 파괴적 기술과 스마트지자체로의 전환

○ 상기와 같은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북의 모든 지자체에서 업무의 자동화, 효율화에 연결되는 파괴적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업무를 자동화, 공통화하여 AI, 로보틱스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은 기획 및 정책 업무와 직접적인 대주민 서비스 제공 등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주력하는 스마트지자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지자체로의 전환은 지자체공무원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기회이다. 스마트지자체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변화한다. 높은 전문성과 기획조정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시점에서 직원의 능력개발과 교육, 훈련이 요구된다.

○ 충북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프로세스와 제도 자체의 복잡함과 불필요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개별 시·군의 내부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도내의 시·군 간의 비교에 의해서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의 실행을 촉구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AI, 로봇틱스의 도입, 운용을 포함해서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재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는 해당 인재가 복수의 지자체 업무 수행도 가능한, 도내의 기초자치단체의 틀을 넘은 '파괴적' 인사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③ 충북의 지자체 행정의 표준화 및 공통화

○ 행정내부의 정보시스템에 관해서 부분 최적의 추구에서 발생하는 중복투자를 억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충북도의 차원에서도 정보시스템의 공통화에 의해서 정보시스템 비용이 경감되는 한편, 개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데이터실행, 연수 및 훈련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서 개별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는 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해 매뉴얼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마다 매뉴얼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커스터마이즈되어 있어 서류작성은 공통적이지 않다. 또한 행정과 이용자와의 행정절차(인터페이스)에 관해서 주민과 기업의 편리성의 관점에서 일원화해서 전자화와 양식의 공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 기존의 정보시스템과 신청양식의 공통화를 실효적으로 진행해 가기 위한 선도적 광역지자체로서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3) 민관협력에 의한 생활의 유지

(1) 플랫폼 빌더로의 전환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동반해서 지자체직원의 감소, 지역연고조직의 약체화, 가족에 의한 부조기능의 저하, 민간사업자의 철수 등이 발생하고 민과 관이 각자의 영역에서의 유지능력이 떨어진다. 충북도는 민과 관의 상호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빌더"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신'민관협력관계의 기반정비를 위해 도내 공무원이 프로젝트매니저로 될 필요가 있다.

○ 지자체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칫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과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지역사회와 가족이 담당해온 영역에도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관이 민간부문과의 연대를 전제로 해서 생활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노동력 및 재원이 제약되는 가운데서도 필요한 재원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관으로서의 지원과 환경정비를 하는 한편, 미래 재원의 모습에 관해서도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

(2) '신'민관협력관계의 구축

○ ICT이용의 보급에 의해 소셜비즈니스로서의 공유경제를 위한 활용가능성이 급속히 확대할 것이다. 아마추어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북도내의 지역경제 실태에 부합하도록 법령(조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에 의해서 니즈를 충족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소셜비즈니스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과 이용 기회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이 노동력의 공급제약을 받는 가운데서는 정년 후의 세대는 물론, 현역세대도 일정시간은 상호 도움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인 다역'이 가능하게 되는 사회 환경 정비가 필요해진다. 고령자도 포함해서 누구나가 지원하고 동시에 지원받는

측으로도 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된다.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인 니즈를 보다 지속적이며, 동시에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셜워크 등 기능을 습득한 공무원이 수시 대응이 가능한 조직적인 중개기능이 요구된다.

(3) 생활 유지를 위한 담당역할자의 확보

○ 주민 간의 관계성이 희박한 도시지역에는 지역연고에 의한 공조의 역할자가 부족할 수 있다. 부담을 같이 나누고, 생활을 떠받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서, 공조의 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인을 설치할 필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활약의 장을 요구하는 정년퇴직자와 출산을 계기로 퇴직한 사람, 구직난으로 인해 지금까지 충분히 활약의 장을 부여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령화와 가족형태의 변화에 동반하여 필요한 대인서비스의 역할자로 되어서 그것에 대응하는 기능을 습득하고, 자부심으로 다양하게 일하는 방법이 가능한 장소가 필요하다. 청년 및 실버인재센터 등의 사람들의 생활을 떠받치기 위하여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일을 하는 새로운 구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기능도 요구된다. 충북도는 이러한 방법의 실현으로 고령자가 연금 이외에 수입을 얻는 기회를 늘려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감소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도 전망된다.

○ 충북지역에서는 종래로부터의 지역연고조직과 보다 활동의 폭을 넓힌 지역운영조직이 공조에 의한 상부상조의 기반으로 해 오고 있지만 고령화와 인구유출에 의해서 급속하게 약체화될 우려가 있다. 지속적인 활동에 필요한 인재, 자금,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연고조직의 법인화 등에 의해 조직적인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자가 부족한 상황 하에서는 충북도내 외국인이 서비스제공의 역할자로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 전제로서 도내에서의 외국인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관해서 지역에서의 공통이해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

4) 충북의 지자체경영관리와 2층제의 유연화

(1) 지자체 단위에서의 행정의 표준화

○ 충북지역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인구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충북지역의 중심도시도 인구감소는 예외가 아니다. 향후 고도의료와 고등교육, 교통결정기능, 비즈니스지원기능, 상업시설 등 도시의 집적을 기반으로 해서 권역 전체의 생활과 산업을 지탱해 온 도시가능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이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종합행정과 타의 지자체와의 승자없는 경쟁에서 탈피해서 충북도 단위에서의 행정을 표준으로 하고, 전략적으로 충북의 도시기능 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도시공간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도시권의 출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 현상의 연계에서는 중심도시의 시설의 광역수용, 시설의 상호이용, 이벤트의 공동개최 등 이해충돌 없이 비교적 연계하기 쉬운 분야에서 그 착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도시기능(공공시설, 의료, 복지, 상업 등)의 역할 분담 등, 부담의 공유와 이해조정을 동반하는 합의형성은 쉽지 않지만 권역지역단위에서의 대응을 피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행정과제로의 착수를 진행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권역내의 기초자치단체간의 이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심각화하는 광역적인 과제로의 대응력(충북도내의 거버넌스)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와 산업 등, 권역단위에서의 정책수행이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도 권역이 주체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설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권역에서의 정책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제도에 권역을 빌트인하고, 연계를 촉구하는 규정만들기와 재정지원, 연계를 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의 가시화 등, 도내의 기초지자체간의 조정 난간을 뛰어넘는 일의 순서가 불가결하다.

○ 인구의 숙감과 함께 도시권 전체로서 유지할 수 있는 제3차산업, 행정서비스, 공공시설, 인프라, 의료자원 등의 총량도 숙감한다. 생활의 유지에 불가결한 니즈는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북권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역의 중심도시가 가지는 권역전체를

지탱하는 도시기능의 집적유지가 필요하다. 도시기능이 집적한 중심도시와 권역내의 물리적인 거리는 ICT로 적극적으로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 지역이 생활실태 등에 맞추어서 자주적으로 형성한 권역을 충북도와 도내의 기초지자체의 정책기능(앱 기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도 단위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서 인정하는 법률상의 틀을 설치하고, 실체성을 확립해서 현재화시켜, 중심도시의 관리 및 조정능력을 높여, 합의형성을 용이하게 해 가는 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북도 전체의 경제를 견인하는 지역견인 허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합리성에 기반하는 착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충북도와 시·군의 이층제의 유연화

○ 충북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으로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등에서는 군청 유지를 위해 필요한 노동력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인구 1인당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도 급증한다. 유년인구의 감소에 의해 초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 및 통합의 증가도 상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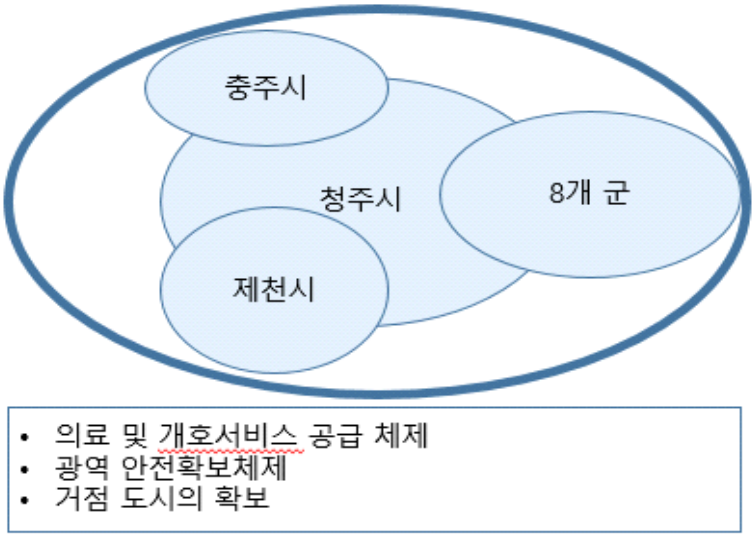
○ 인구감소가 선행해서 진행되어온 군지역에서는 사회인프라 등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위탁과 도와 군의 직원이 사무 장소를 공유해서 지역의 과제해결에 착수하는 사례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충북도와 시·군의 이층제를 유연화하고 각각의 지역에 맞는 도와 시·군의 기능을 결집한 행정의 공통기반을 추진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충북도는 구역내에 책임을 가지는 광역지자체로서 도의 핵심 역할의 하나인 보완기능, 광역조정기능을 발휘하고, 핵심으로 되는 도시가 없는 농촌지역의 보완, 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내의 행정은 도시 등의 배후지역의 시·군간 연대에 맡기고, 도의 보완 외에는 지원 수단이 없는 시·군에 자원을 중점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소규모의 군(읍)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재가 생활에 불가결한 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족쇄로 될 수 있다. 도와 시·군의 조직의 벽을 넘어서 희소화하는 인재를 유연하게 활용해 가는 구조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

5) 충북도의 도시권 플랫폼

(1) 충북 전체에서의 경영관리 플랫폼

○ 충북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넘는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과제에 관한 연락조정의 구조로서의 충북도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다. 다만, 이해충돌이 없는 연계하기 쉬운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연계를 보다 심화시켜, 도내 전체에서 부담의 공유와 이해조정을 수반하는 합의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충북의 도시권은 입원 및 개호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고, 절대량으로서 방대한 의료 및 개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충북권역 단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행정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한편 충북도는 수도권에 이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과제에 관해 11개 시·군을 포함하는 충북 전체에서 지역경영관리를 해나가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Ⅳ-16〉 충북도의 경영관리 플랫폼

① 충북의 의료 및 개호서비스 공급체제의 구축

○ 충북도내 도시권에서는 의료 및 개호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75세 이상의 고령자의 증가가 현저하게 될 것이다. 도시권에서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이 향후 충북도 전체에 있어서의 위기로 된다. 앞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의료 및 개호서비스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충북도 전체에서 서비스의 공급부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도내의 시·군이 연계해서 장기에 걸친 의료 및 개호서비스공급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경영자원의 변화

○ 충북도의 총인구는 2015년 1,583천명에서 2035년에는 1,710,9천명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의 공무원수는 2019년 12월 말 현재 3859명이다.[41] 지금까지는 국정과제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이 계속되어왔지만 향후 공무원의 수가 감소되고, 도내의 총인구의 감소가 본격화되는 2035년무렵에는 공무원의 감소에서 나오는 효율적 행정운영의 적응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의 직원 채용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일 수 있고 직원수의 감소를 고려해서 직원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전제로 하면 현재보다도 더 적은 공무원으로 행정운영을 해야 할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감소에 동반하여 충북의 기초지자체의 인구 규모도 축소경향을 보이고, 생산연령인구는 인구 규모가 적을수록 감소하고, 75세 이상 인구는 인구규모가 클수록 증가한다.

○ 세입에서는 소득과 지가가 하락하면 지방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가-지방에서의 국민부담에 관련하는 합의형성이 필요하게 된다. 저출산·인구감소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을 비롯해서 노후화한 공공시설 및 인프라의 갱신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증가도 상정된다. 지금까지의 공무원의 정원 증가로 인건비의 비중이 증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지가 과제로 된다.

41) 충청북도 홈페이지, 인사정보공개.

③ 충북지역의 경영관리와 행정경영개혁

○ 2020년 충북도의 3개 시의 인구는 도내 인구의 74.4%를 차지한다.[42] 3개 시와 8개 군의 인구수와 구조에는 폭이 있고, 향후 그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등록초·등본, 세무, 복지 등의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외부의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운용하는 '지자체클라우드'로의 이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운용비용삭감과 집중감시에 의한 보안 수준의 향상 등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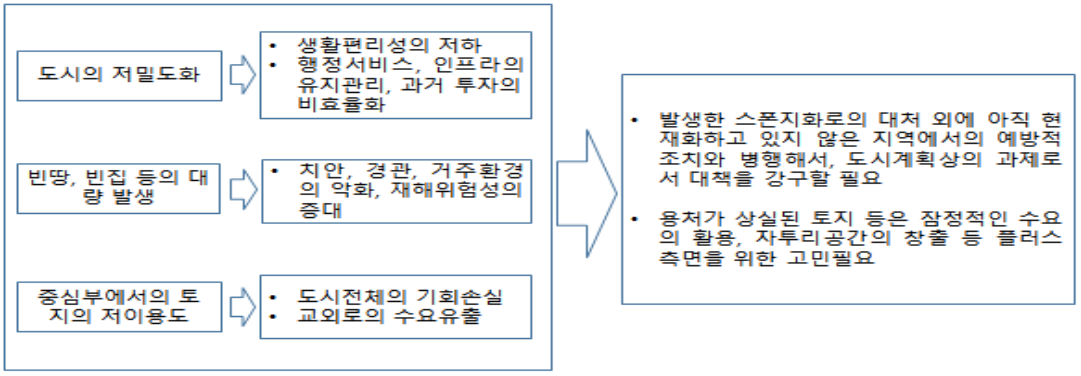
6) 미래를 상정한 충북도의 위기와 그 대응

○ 앞 절에서 미래를 상정한 개별분야와 지자체 행정의 과제에 관해서 고찰해 왔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충북의 사회경제는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표 Ⅳ-21〉 도시의 스폰지화에 대한 대응

- 인구감소사회에서의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편리성이 확보된 도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밀도가 적절하게 유지된 시가지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콤팩트시티정책을 추진
- '도시의 스폰지화'[43]는 도시 전체에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 콤팩트시티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되기 쉬움
- 인구감소에 동반하여 도시 전체의 인구밀도와 토지이용밀도가 저하하는 '도시의 저밀도화'가 나타남

42) 충북 시·군별 총인구 추계치임. 충북연구원, 2018, "충북인구구조변화-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충북연구원, 충청북도
43) 도시 내부에서 빈집, 빈땅 등의 공간 및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작은 부지 단위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현상



〈그림 Ⅳ-17〉 도시에서의 스폰지화의 초래와 그 대응[44]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위기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이 절에서는 미래에 다가오는 충북도의 행정상의 위기와 그 대응을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집약해서 정리한다.

(1) 지역내의 청년을 흡수하면서 노후화해 가는 도시권과 보완기능을 상실해 가는 배후도시권

○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경기침체의 장기화, 지역균형의 지체 등은 동일 지역내에서도 도시권으로 인구이동을 촉진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젊은층의 인구유출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충북지역에서의 고령화속도는 서서히 감속하면서 2060년 무렵에는 피크를 맞이하고 안정화된다.[45] 도내의 지역에 따라서는 65세 이상 인구는 2045년 무렵에 감소한다. 한편 베이붐세대의 마지막 연령이 2028년 무렵에 고령기를 맞이하는 것에 의해 인구보너스를 향유해 온 도시권은 급격한 고령화 국면에 돌입한다. 지금까지의 충북지역의 고령화에 대해서는 도시권 등에서의 경제활동과 세수가 지방의 의료 및 개호서비스 등의 증가를 지탱해 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도시권 등의 고령화를 어떻게 떠받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책이

44)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2018)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第2次報告”를 근거로 편집하여 가공.
45) 충청북도(2018) 및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추정.

필요하다. 또 고령화가 진전되면 요구되는 의료 및 개호의 내용도 달라진다. 장기부전과 노쇠, 치매(인지증) 등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기능이 저하하는 질환이 증가한다. 생활에 익숙해진 지역에서 개호와 생활지원 등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고령자가 증가한다.

○ 초고령사회에 이르는 인구감소국면에서는 대인서비스의 기여자와 수급자의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가 현재화한다. 충북도의 지역의 관점에서는 가족과 지역의 연결이 고령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 국면에 돌입하는 도시권에서는 지역운영조직의 수가 줄어들고, 지역의 의료와 개호를 지탱하는 잠재적인 역할자로서의 지역의 연결이 취약해지게 된다. 게다가 생애기간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생애미혼율의 상승, 수명의 연장, 독신세대의 증가를 배경으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증가도 전망된다.[46] 지역과 가족이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과 가족의 연결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농촌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의료 및 개호인재의 유입을 막으려고 하면, 도시지역에서의 건강한 고령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고령자를 돕는 老-老케어구조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젊은 노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러한 구조는 농촌지역만이 아니라 충북의 도시권 전체에서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 도내에서 중요한 정보수집과 AI에 의한 진단 등 기술혁신 성과의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하는 도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대인서비스의 일꾼 부족을 완화하는 구조도 함께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저출산화의 제동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된다. 보육서비스를 맞벌이사회로의 이행으로 증가하는 요구에 대응시켜 젊은층에 보다 안정적인 취업노동환경과 일과 직장의 균형을 실현하고 통근의 직주환경을 만드는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에서는 역할자가 많을수록 개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줄어든다. 현재는 역할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감소하에서 의욕있는 역할자에 대한 집약이 진행되면 평균소득의 증가가 전망된다. 도 차원에서 파괴적 기술의 활용에 의한 생산체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46) 통계청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하게 진행되는 농촌 및 산간지역 등에서는 집락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저밀도화가 발생한다. 일정 규모의 집락생활권 가운데 고령자가 도보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집락의 이전을 포함해서,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기능을 유지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선택지로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질 수 있다. 이때에 지역주민이 주체로 되어 집락생활권의 미래상의 합의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간지에서는 인구감소에 의해 경지와 산림의 관리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경지로 유지하는 방법과 산림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잠재력을 저비용으로 해서 경지를 유지하는 방법과 산림을 침엽-활엽혼재림으로 하여 조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표준적인 인생설계의 소멸에 의한 고용·교육의 기능부전

○ 충북도의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현상의 심화가 가속되고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3개 시 지역의 집중도도 심화한다. 군지역에서는 진천을 제외하고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낮아진다.[47] 과거의 세대주 고용모델에서는 세대주의 소득으로 생활이 유지되는 구조였고,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서 고용수준에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의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일하는 방법을 전제로 하면, 세대주 고용모델은 더 이상 표준적인 취업노동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 세대주 고용모델에서 맞벌이 고용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 남녀 모두 라이프스테이지에 대응해서 창업도 포함해서 활약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취업노동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취업형태와 결부된 각종 제도의 개정 등이 필요하게 되지만 그것에 의해서 유연하게 일하는 방법이 용이하게 되면 다양한 인재가 서로 혼재하는 가운데 새로운 창업과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된다. 충북도는 미래의 취업모델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에 부합하는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동반하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와 15세-64세의 생산연령인구의

47) 충청북도(2018). “충북인구구조변화-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충청북도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령자의 취업 의욕은 높고, 평균적인 체력과 운동능력도 일관해서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고령자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15세에서 64세까지가 '생산연령인구' 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원기있고 의욕있는 고령자가 일하고, 계속해서 활약할 수 있는 '충북고용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큰 과제는 능력과 요구의 매칭이다. 국가적 지원체제의 구축과는 별도로, 충북고용체제의 틀에서 개인의 활용가능한 능력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매치할 수 구조를 마련하게 되면 충북의 새로운 고용모델로 될 수 있다. 일하고 싶은 여성과 고령자, 구직난을 겪은 불안정한 취업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유연하게 일하는 방법을 전제로 한 취업노동의 장이 마련될 수 체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된다. 향후는 노동 인구, 특히 인간적인 부가가치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 간의 상부상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향후 충북도의 시·군지역에서 공조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유연하고 동시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숙련을 익히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스킴과 취업노동모델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 혁신을 초래하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충북도내의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을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착시켜갈 것인가 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에 빈약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힘에 의해서 풍요롭고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를 구축해 왔다. 그 원동력으로 된 것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이다. 그러나 충북의 학령인구는 1980년 39만 9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98천명으로 1980년대비 50.31%가 감소했다.[48] 그러나 양의 저하가 질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보육의 양적 요구의 감소를 질의 향상 계기로 파악하고, 양질의 시설을 남기면서 적정한 배치를 하고, 새로운 교육에 대응한 질 높은 교직원을 확보해서 자녀들에게 충실한 교육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충북지역에는 2018년을 기준으로 18개의 대학이 있고 전문대학 1개교, 4년제 대학 11개교, 교육대학 1개교, 기타 1개교로 구성된다.

48) 충청북도(2018). "충북인구구조변화-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충청북도

〈표 Ⅳ-22〉 충북의 대학 수의 변화

		2000	2010	2015	2018
충북	계	16	17	17	18
	전문대학	6	5	5	5
	4년제 대학	8(1)	10(1)	10	11
	교육대학	1	1	1	1
	기타	1	1	1	1

주: 2018년부터 일반대학 학교 수에 분교가 포함되어 괄호는 미처리함. 전체학교수에 도 포함됨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 충북의 대학교 학생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까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감소했고 향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49] 18세 인구의 감소는 대학 수의 감소와 더불어 대학의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권에서의 대학의 자연적인 도태가 현시점에서도 대학진학률이 낮은 지방권에서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있지만, 이것이 더 큰 상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게 되면 지방권의 청년의 유입과 정착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으로 된다. 지식경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로서의 손실도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생애를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 능력을 획득하는 배움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충북에서는 이러한 학문의 배움과 고도의 STEM교육(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장으로서 지역에서 어떻게 세련된 고등교육기관을 확보할 지가 과제로 된다.

○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것에 의해 젊은이의 노동력은 절대량이 부족하고 희소화해 간다. 그 가운데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형의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 사회를 지탱하는 인재를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충북은 민간부문과 공적부문에서의 노동력 배분, 각 분야에서의 필요인재의 확보, 민과 관의 조직의 틀을 넘은 폭넓은 교류 등을 추진하고,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시점이 요구된다.

49) 전게서.

(3) 도시의 스폰지화와 인프라의 노후화

○ 충북은 지역성장의 중심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주도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정비해 왔다. 인구감소 등의 급속한 진행에 동반하여, 충북의 많은 지역에서 빈집·빈땅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작위하게 발생하는 "도시의 스폰지화"가 현재화하고 있다. 무질서한 스프롤화를 방지하려고 한 인구확대기의 방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해결방안의 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스폰지화를 이대로 방치시키면 도시에서의 인구밀도가 저하하고, 인구집중지구(DID)면적은 축소하고, 도시의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충북지역의 도시기능이 약해지면 의료와 개호, 쇼핑 등의 생활기능과 행정기관, 문화시설의 집적도가 낮아져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도시공간이 상실한다. 지역의 성장과 함께 충북의 다양성을 체현해 온 충북 소재 도시의 매력과 문화는 상실된다. 또 인구 및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에 정비된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된다. 충북지역 인프라의 노후도는 도로부문(64%), 도로교량(81%), 철도부문(73%), 상수도(49%) 등[50] 노후화가 심각하고 인구가 감소해 가는 가운데 모든 인프라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새롭게 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도시기능과, 의료와 개호, 쇼핑 등의 생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을 유인하고 매력있는 도시를 구축·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지정관리자와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법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에 대응해서 양을 줄이면서 기존 스톡을 유효하게 활용해 가기 위해서는 IoT를 활용한 인프라 점검도 중요하게 되지만 단순한 관리의 효율화에 머무르지 않고, 활용방법의 다양화 등에 의해 공공시설의 가치를 높여, 매력있는 공간형성의 핵으로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충북의 학교시설은 1982년 이후 238개의 폐교가 발생했다.[51] 지역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에 위치한 학교를 살려갈 필요가 있다.

50) 노후도와 관련해서는 부문별로 연수 구분이 일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준공된지 10년 이상을 노후인프라로 규정했음. 이에 대한 근거는 충북연구원(2018)의 "충북인구구조변화-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서의 내용을 참고로 했음.

51) "충청북도 교육, 폐교자산 현황 및 활용 실태(2018.01)". 충북연구원(2018), p.181의 자료에서 재인용.

○ 상기의 현황들은 충북의 현시점에서 보면 이미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현재화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은 늦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충북이 선구적으로 대응해 가면 인구감소에 대응한 사회경제의 모델을 제공하는 기회로 될 수 있다. 이들 위기를 현시점에서 속도감을 가지고 착실하게 충북도와 시·군이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해서 극복해 갈 필요가 있다.

7) 미래를 향한 충북 행정의 방향성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본격적인 인구감소를 맞이하는 충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충북도의 정책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취약한 재정과 사회의 기능부전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회구조의 강인성을 반영하는 '레질런스(resilence)의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의 재정효과를 노리는 정책만들기와 그 실행만으로는 충북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과제와 논점은 충북의 행정제도설계의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그 실행에 대한 고민이다. 충북의 과제는 행정 내부에서의 개혁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정분야에서의 착수와 병행해서 충북의 지자체 행정의 근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의료, 개호, 인프라, 공간관리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북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도내의 모든 시·군이 정책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지속가능한 주민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역할자가 되어야 한다. 향후 충북도의 모습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스스로의 의사로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충북도가 도민과 함께 건설적인 논의에 임하고, 충북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조속한 단계에서 마련하고, 도민에게 실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관의 최적 조합의 모습과 방법은 충북의 시·군의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충북도는 도내의 전략본부로서 제도와 조직,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자원(시설과 인재)을 효율적이며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충북의 시·군이 개별적으로 부분의 최적을 추구하는 것에 의해 합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해서 충북도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도민의 합의형성을 조정하는 역할이 더 절실히 요구되게 된다. 충북도내의 각 지역마다의 민관의 최적 조합으로 이행해 가기 위해 충북도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장을 설정할 “플랫폼 빌더”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충북도내의 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등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고령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행정주의를 배제하고, 기초지자체의 행정권역단위로 혹은 시·군의 경계를 넘은 도시·지방의 기초지자체 간에 유기적으로 연대하는 것으로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보장해 갈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가 선행해서 진행되어 온 보은군, 옥천군, 단양군에 있어서는 도와 시·군이 일체로 되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서 지역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도와 시·군의 이층제를 유연화하고, 개별 지역에 적합한 행정의 공통기반의 구축을 추진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 생산가능인구 및 청년층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경영자원으로서의 인재 확보가 점점 어렵게 되고, 민관의 최적 조합으로 사회 과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정년퇴직자와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등, 기업 등에서 축적해 온 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이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활약의 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도 증가할 것이다. 취업의 빙하기를 맞이하는 작금의 청년세대에게는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활약의 장이 마련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충북도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충북도가 시·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대담하게 표준화, 공통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ICT의 이용에 의해서 처리가능한 업무는 가능한 한 ICT를 이용하는 ICT의 활용을 전제로 한 충북행정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 충북도는 3개시 8개군의 도민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을 정비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다. 도내의 기초지자체는 다가오는 위기를 스스로의 위기로 인식하고, 인구감소의 본격적 도래를 상정하여 지역상황에 부합하는 필요한 대책에 착수해야 한다. 요구되는 것은 사회의 기능부전을 스스로 극복하고, 유연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의 지속가능성이다. 위기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기회가 된다. 본 절에서 기술한 행정의 제도설계에 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 방향성을 근거로 향후 인구감소를 상정한 충북도의 전략으로서 행정 경영개혁 및 시·군별 경영관리의 형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1 결론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으로서 인구감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2032년부터가 아닌 2020년대 초반으로 10년 정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경향신문, 2018). 특히,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예상보다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다는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는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구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 까지 복합하게 나타날 따라서 충북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사회·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인구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외부 자원을 이용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사회라는 시대에서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부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 둘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스스로 배울수 있도록 시민이 속한 사회 현실을 다각도로 이해하면서 삶 속에서 시민이 배움에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세대 단절로 인해 세대 사이의 문화 단절과 격차가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청년문화를 강화하고 고령층의 문화환경을 확대하여 고령층이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세대간의 소통과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대 공감 문화도 더욱 활성화해야만 한다.

○ 넷째,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지역개발이론에 근거한 거버넌스나 네트워크 기반의 정책과 전략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하는 지역의 특성과 개발의

방식에 따라서 맞춤형 지역개발이 시행되어야 한다.

○ 다섯째,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대담하게 표준화, 공통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ICT의 이용에 의해서 처리가능한 업무는 가능한 한 ICT를 이용하는 ICT의 활용을 전제로 한 지방행정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 여섯째,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충과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 위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집적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혁신정책 지원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일곱째, 현재의 고령 근로자와는 달리 앞으로 고학력과 전문성을 지닌 고령 근로자가 증대하여 종래의 재취업 정책과는 다른 고령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여덟째, 고령친화식품은 고령화가 진전 될수록 니즈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친화식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이러한 고령친화식품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면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홉째, 전문적인 노후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금융인력 확보를 위해 충북 내 금융기관 종사자 중 금융전문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첫째, 충북은 출산율감소 인구의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시·군의 인구구조변화는 유사하지만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 인구감소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광역적 행정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계획된 대책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고용증대 및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셋째,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의 버려진 농지와 빈집이 증가하고 치안이 악화 등으로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한계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넷째, 지역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생산성이 높은 젊은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에서 육성한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역 스스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문가 좌담회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변동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참석자 : 최용환(충북연구원), 김두환(인천대), 최남희(한국교통대), 홍영교(숙명여대)

최용환 : 오늘 미래학에 대한 전문가 4분을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소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령층이 많으면 고령층의 정책적 수요의 증가로 인한 복지정책을, 청년층의 유출이 심화되면,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주제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최남희: 기회라기 보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안의 다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여유로움 같음. 인구구조 모델링을 해 보면, 아주 임시적인 상황으로 출생아수가 적으면, 아래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다. 인구 구조

적인 측면에서는 아래가 많아야 사회적 건강성 회복되어야 한다. 출생아 수가 중요한 기초 구조로서, 기둥은 없고 지붕만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30만의 출생아으로 올해에 27만 5천명으로 대략적으로 2만 5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10년사이 인구가 10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산술적으로 앞으로 계속 출생아 수가 줄게 되면, 다음 세대의 출산 인구가 반으로 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인구가 감소하면 사회가 붕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지원과 혼인과 출산의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홍영교: 인구문제는 출산도 문제인데, 양육이 문제. 출산 스트레스보다 양육의 문제. 버려지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봄의 문제이다. 즉, 인구구조변화의 흐름을 바꾸거나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 관건, 성별, 연령별 사회활동 참여 비율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 비혼, 미혼, 무자녀, 한자녀 가족이라거나 기존 가족구성원과 다른 모습으로 가정을 꾸린 가구에서 양육하게 되는 자녀에 대한 차별화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매몰되면 안된다. 중산층 이상에게 한달에 20만원, 30만원을 주지 않더라도 저소득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더 많은 비용을 주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김두환 : 인구구조에 따른 변화는 선언적 의미이다. 인구구조 변화라는 것이 실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미래에는 인구 피라미드가 중요하며, 연령별 분포의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세대별 인구 분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인구변화는 왜? 중요한가. 경제적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 생산력 & 소비력 이다. 인구의 연령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전체 인구 연령대의 구조와 발란스가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가이다. 10년~20년전의 인구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효과 없다. 지금 시작해야 10~20년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구변화는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 영역에 영향을 줌. 세대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필요한가?

최남희 : 시·공간적 인구의 변화는 시장의 기회를 변화시킨다. 인구의 변화는 부동산의 평수 선호도 변화. 레저 스포츠 변화 등의 기회가 모두 달라진다. 지역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다르며, 사회기반 등을 만들어가야 한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복잡한 시그널들이 혼잡하게 얽혀지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수요, 장·단기 정책 믹스가 되어야 한다. 장·단기적인 시장의 선호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지금 이 세대야 말로 변곡점이 많은 시점이다.

홍영교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지역인재 보존, 신규 인력 수용)이다. 그 다음은 생활의 편리함(지역의 매력도)이 있어야 한다.

김두환 :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모든 현상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그래야 기회가 발생한다.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에서 돌봄을 받는 인구이다. 65세 이상이면. OECD나 UN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65세가 노인의 정의를 하였다. 따라서 60~70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노인의 나이 재정립 필요하다. 지금 나이의 0.8을 곱해야 한다. 생물학적 노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교육, 산업, 고용, 복지 등 사회·경제시스템을 어떻게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가?

최남희 :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니즈, 기술 변화 등이 다양화되어 VUCA(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시대이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정책이 조심스럽게 설계 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 사회경제 시스템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보다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홍영교 : 교육은 수시로 스스로의 역량을 upgrade 가능하게 하며, 전공과 자기 계발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은 인적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ICT, 로보틱스로 바뀌어야 한다. 고용은 안정적, 정년퇴직 없애야 한다. 현재는 과도기로서 임금피크제, 비정규직화 등을 통해서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양질의 일자리 재창출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복지는 인구구조 변화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변화 필요하다.

김두환 : 연령별 인구분포에 맞는 세대별 정책 필요하다. 나이보다는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인구구조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본다. 각 도시마다 역량이 다르다. 대도시 집중 현상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완충시키도록 해야 한다.

4) 저출생에 대한 교육분야의 영향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최남희 : 20~30대의 고등 교육에 대한 니즈이다. 플랫폼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다. 교육 서비스를 최대화이다. 지역에서의 삶과 정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으로 그 역할이 지역과 사회조직이 할 수는 없다. 지역재정에 대한 상당한 지원 및 산-학 연계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고용이나 생산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홍영교 : 전 연령과 전 세대에 대한 교육 패러다임이 진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나갈수록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즉, 영재교육, 보편 & 직업교육, 창의성 교육 등으로 3분화 필요하다.

김두환 :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모든 현상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직업교육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다. 고령화의 핵심은 평생교육과 노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남희 : 50~60대는 자기계발을 원한다.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역의 역할이 필요하며, 평생교육대학 같은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이들이 산업의 역동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5)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층의 생활용품의 구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홍영교 : 농촌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언어로 하는 ICT 기술 활용 및 주문 배달이 필요하며, 3D Printer를 활용한 제조 및 보급되어야 한다.

최남희 : 노인의 생필품 구입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스템 구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택배 등의 플랫폼 및 복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두환 : 농촌지역 고령층과 도심지역 고령층 독거노인의 생필품은 택배나 ICT 활용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충북 : 기회와 도전

○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18.

○ 이상호.(2020) .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지역고용리뷰.

○ 이상림.(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 2018-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마스다 히로야. (2015). 지방소멸(김정환 역.). 서울: 와이즈.

○ 지역발전위원회.(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정책 방향. 방송통신정책연구 2019-0-01708.

○ 최창식, (2020.2.25.). “국가단위 노후인프라 유지관리 정보화 기반의 연계 통합 운영방안”, 국토매일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16.

○ 교육부. (2020.8.27).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보도자료

○ 통계청. (2020).「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20.9.28.). 2020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2020) 전국주민등록인구현황

○ Coleman, D., (2006).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n the EU, in Cloke, P., Marsden, T. and Mooney, P.H.(eds.), Handbook of Rural Studies, Sage, London, 278-290.

○ Mallach, A., Haase, A., & Hattori, K. (2017). The shrinking c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trasting dynamics and responses to urban shrinkage. Cities, 69.

제3장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경제부문

○ 관계부처합동(2019.9), 인구구조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2편, 3편, 4편)

○ 광주광역시(2020.5), 광주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 국토연구원(2018), 저성장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 연구.

○ 국회예산정책처(2017.10),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 국회예산정책처(2020.8), 지속성장을 위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 김원규, 황원식(2017),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 박경진,김선기(2017.12),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 전략 연구.

○ 산업연구원(2017.12) 지역경제 지료지수 Report.

○ 서울대 산학협력단(2018.12),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 이삼림 외(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외(2019), 출생 및 인구규모 감소와 미래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이윤경, 김세진(2019),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 이왕기(2020 2), 인천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인천연구원.

○ 이재준(2020), 저출산 및 인구구조 고령화 심화와 대응 필요성, KDB미래전략연구소.

○ 장기천(2016),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KDB미래전략연구소.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2019),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전남대 산학협력단(2018.11),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 조성희 외(2019), 2019 인구포럼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은행(2018.1), 인구구조 고령화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과 정책과제

○ 통계청(2020), 통계청홈페이지 통계자료.

○ 통계청. 각년도, 장래인구추계(https://kosis.kr)

○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 노동부문: 충북 사회의 구조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이영성.(2008).「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국토계획』. 43(7), pp.7-16.

○ 최충·최광성·이지은.(2018).「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 김지운.(2018).「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KDI 경제전망』.

○ 안선영·김동헌.(2014).「노동력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가? 한국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 유경준·류덕현.(2012).「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대한 재해석」.『노동경제논집』. 25(1). pp.89-122.

○ 이계오·김윤수·유정빈(2001).「충청북도 분기별 GRDP 추계방안 연구 – 소지역 추정법의 적용 -」.『한국조사연구학회』, 2001(0). pp.47-64.

○ Schor, J.(1987).「Does Work Intensity Prespond to Macroeconomic Variables? Evidence from British Manufacturing 1970-86」. Mimeo.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통계청,「지역소득」

○ 통계청,「지역통계총괄과」

3. 식품소비 부문

○ 김상효·허성윤.(2017).『고령자의 식품소비 여건 및 현황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 김상효·이용선·허성윤.(2017).『고령친화식품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 천용기·김범근·이상훈·박동준.(2017).「고령자용 식품을 위한 국내외 기술 및 산업현황」.『식품산업과 영양』. 22(2). 6~14pp.

4. 금융산업과 가계금융부분

○ 구본성.(2018).「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금융브리프』. 27(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2019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보고서』

○ 금융감독원.(2018).『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금융감독자문위원회

○ 금융위원회.(2020).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구축 세부 설명자료

○ 김광민·이창민.(2019).『충북의 가계소비 여건 점검 및 시사점』. 한국은행 충북본부

○ 김민정.(2009).『은퇴자가계의 금융자산인출전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혁·박진우.(2019).「고령화가 금융기관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예보의 역할」.『금융안정연구』. 20(1)

○ 김병덕.(2012).『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 김병덕·이석호.(2011).『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 김석기·임진(2015).「평균수명 증가가 연령별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고령층을 중심으로」.『KIF 연구보고서』. 2015-04

○ 김태섭·송상현(2016).『충북지역 금융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충북본부

○ 박경훈.(2017).『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 박영상.(2006).「고령화 저출산이 경제 산업 금융에 미치는 영향」.『산은경제연구소』

○ 박창균.(2005).『고령화와 금융부문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보건복지부.(2020).『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송홍선·정광수.(2017).『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OECD 국가 경험』. 자본시장연구원

○ 송훈.(2005).『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금융부문의 대응과제』. 금융

○ 오영수·류건식·임병인·김재현.(2005).「고령화 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금융연구』. 19권

○ 유영선·김낙현·강규휘·조은정.(2020).『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2017).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2017-31호

○ 윤덕룡·이동은.(2016).『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성훈.(2010).『저출산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익·유진아·변혜원.(2011). 『저출산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험연구원

○ 이병윤·이순호.(2019). 「우리나라 지방은행의 발전방안」.『KIF VIP 리포트』. 2019-15.

○ 이석호.(2015).「저성장·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KIF 연구보고서』. 2015-01

○ 이승호.(2018).「인구 고령화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와 자본시장의 과제」.『자본시장포커스』. 2018-18호

○ 이인호·신관호.(2012).「고령화의 진전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주요국의 대응사례와 시사점」.『KIF Working Paper』. 11-10

○ 이현복·이수연.(2019).「노인의료비 추계와 건강보험에 대한 시사점」.『보험학회지』. 117권

○ 장동구.(2011).『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 정채림·이태진.(2017).「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연령대별 사망 전 의료비의 변화를 중심으로」.『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4)

○ 조관일.(2012).「저출산 대책과 금융기관의 역할」.『금융』. Vol.698

○ 최공필·박대근·이창용·남재현.(2005).「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대응」.『금융연구』. 19권

○ 황선경.(2019).『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황미진·배순영.(2019).『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산출연구』. 한국소비자원

○ 황미진·배순영·전상민.(2020).「충북지역 소비생활문제 진단과 과제」.『생활과학연구논총』. 24(1)

○ Bengen, W. P. (1994).「Determining Withdrawal Rates Using Historical Data」.『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7(1)

○ Bengen, W. P. (2001).「Conserving Client Portfolio During Retiremenet」.『Part IV,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14(5)

○ Brooks, R. (2006).『Demographic Change and Asset Prices』. IMF

○ Evensky, H. & Katz, D. B. (2006).『Retirement Income Redesigned』. New York: Bloomberg Press

○ Poterba. J. M. (2001).「Demographic structures and asset returns」.『Review of Economocs and Statistics』. 83(4)

○ 이데일리.(2017.9.11.).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상속·유언·치매 관련 금융상품 뜬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5606616059136&mediaCodeNo=

○ 이지경제.(2020.03.04.), 시중은행 영업점 지역 불균형 심각…점포 10개 중 7개 서울 · 경기 등 수도권 집중.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8530

○ 이지경제.(2019.02.18.). 시중은행 영업점, 지역 양극화 극심…‘서울 5958명’ vs. ‘전북 1만

7909명'.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03

○ 충북일보.(2017.8.30.). 충북 '전세가 역전 현상' 곧 해소될 듯.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06377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index.do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ecos.bok.or.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s://kosis.kr/index/index.do

제4장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변화와 전망

1. 교육부문

○ 교육부. (2018). 중장기('19-'30) 교원수급계획. 2018.5.1.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1). 평생교육백서.

○ 김선숙. (2000). 주요국의 노인교육 비교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아영. (2014).「미래 교육의 핵심역량」.『교육심리연구』. 28(4).

○ 김진숙. (2016).『일본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지역격차해소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 김학실·심준섭. (2020).「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활동」.『한국정책학보』. 20(3).

○ 박남기. (2018).『저출산 시대 초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5차 저출산고령화 포럼(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

○ 박상헌·백영미·이원학·김인중·이광연. (2018).『지역대학 소멸위기와 강원도 대응연구』. 강원연구원.

○ 사토우 가츠고. (2004).『NPO 교육력』. 동경대학 출판부(일본어판).

○ 육동한·박상헌·이광연. (2019).『강원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대학』. 2019.2.26. 제737호. 정책메모. 강원연구원.

○ 이삼식·최효진. (2019).「고령자의 노인기준연령에 대한 인식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연구』. 30(2).

○ 이소영·이윤경·김세진. (2019).『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강은나·김경래·주보혜·고영호·김진현·남재량·문종철·백혜연·이동민·조현승·김세진. (2019).『고령인구 증가와 미래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지현. (2015). 고령화 사회의 지역중심 노인교육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호선. (2010).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효원. (2016).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교육방안 모색.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주희. (2014). 「2030 미래사회 및 직업생활의 변화와 교육적 접근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 장주희·한상근·이지연·서용석. (2013).「2013 년 8 월: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한 미래의 직업생활분석: 직업교육 관점을 중심으로」.『직업교육연구』. 32(4).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오미애·강은나·김경래.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규복. (2017).「일본의 인구감소 문제와 '학교시설 복합화'」.『월간교육』. 21.

○ 조대연·정홍인·강현주·이종민·장은하·최지수·박선민. (2019).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방향 예측」.『휴먼웨어 연구』. 2(1).

○ 조상식·김기수. (2016).『미래 한국교육의 교육철학적 기초-진단, 과제 그리고 방향』. 경기도교육연구원.

○ 충청북도. (2018). 『충북 인구구조 변화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충북발전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6). 『일본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지역격차 해소 정책』. 교육정책네트워크 이슈페이퍼, 2016-01-7.

○ https://blog.naver.com/dgeduon/221419213139[해외평생교육사례: 일본, 영국, 독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2. 문화부문

○ 김난도 외, (2019),『트렌드 코리아 2020』, 미래의 창.

○ 김난도 외, (2016),『트렌드 코리아 2017』, 미래의 창.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2014),『문화예술트렌드 중장기 경향 분석 및 전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2012),『미래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와 문화수요』, 대왕사.

○ Yong-Ki Cho, (2019),「Humanistic Study on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

○ 민경선, (2018),「워라밸 세대의 여가와 삶의 만족도」,『한국웰니스학회지』, 13(3).

○ 강윤주, (2014),「생활예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자료집』.

○ 김지영, (2010),「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와 문화 정책적 대응 방안」,『문화정책논총』, 제23집.

○ 김영옥, (2007),「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2호.

○ 문화체육관광부, (2019),『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8),『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9),『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3. 지역개발부문

○ 강명구 외, (2017), 『지역개발론』, 박영사.

○ 권일, 김정연, 마상열, 송미령, 오용준, 이만형, 장경석, (2011),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과제」, 『도시정보』, 1월호, 2011, pp.5-21.

○ 기정훈, (2019),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한국형 사회복지, 아산재단 연구총서 451, 집문당.

○ 김광주, 송미경, 조병설, 이만형, (2010), 「인구감소세대의 도시관리 정책에 대한 동태적 분석」,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1(4), pp.77-96.

○ 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2009),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 김종순, 장경원, (2018),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김현호, (2019), 『지방소멸지역의 정책대응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리차드 플로리다, (2002), 『창조계급의 부상』, 전자신문사.

○ 박지현, (2015), 『장래인구변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소진광 외, (2016), 『지역개발모델구축 및 LH 참여방안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성근 외, (2013), 『최신 지역발전론』, 도서출판 집현재.

○ 이원종 외, (2015), 『지역발전정책론-이론과 실제』, 율곡출판사.

○ 조선일보, (2009),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못해」, 이슈 & 현장, 조선일보 2009년 3월18일.

○ 통계청. (2018),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통계청.

○ 하능식, 임성일, (2007),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1호, 2007, pp.77-9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017 농업전망』, 농촌경제연구원.

4. 행정부문

○ 곽채기.(2016).「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 역할 구조와 재정운영시스템의 변화 방향」,『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

○ 심재승.(2018).「인구감소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지자체 발전 전략」.『한국지적정보학회』. 20(3). pp.104-106.

○ 전대욱. (2017).「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지방행정연구』. 31(1). pp.63-84.

○ 충청북도. (2018).「충북 인구구조 변화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충청북도.

○ 충북도 홈페이지.「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충청북도 통계시스템 http://www1.chungbuk.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

○ 행정안전부. (2015).「인구구조변화와 지속가능한 행정기능 발전방안」. 지방자치분권실

○ 행정안전부.

○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2018).「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第1次報告」.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2018).「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第2次報告」. 自治体戦略2040構想研究会.

○ 文部科学省. (2018).「Society 5.0 に向けた人材育成」. 大臣懇談会, 文部科学省.

○ 内閣府.(2019).「AI戦略等を踏まえたAI人材の育成について」. 内閣府.

○ 図書館協議会. (2019).「2040年頃に想定される社会構造の変化とその影響等」. 図書館協議会.

○ 経団連. (2018).「Society 5.0 -ともに創造する未来-」. 経団連.

연구진

연구책임	최용환(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구배경 및 목적, 전환기의 충북
참여연구진	정삼철(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제부문
	양서우(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노동부문
	김미옥(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식품소비부문
	김민정(충북대학교 교수)	금융산업과 가계금융부문
	김학실(충북대학교 교수)	교육부문
	김양식(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문화부문
	기정훈(명지대학교 교수)	지역개발부문
	심재승(청주대학교 교수)	행정부문

2020 창의기획과제

저출생·고령화사회에 따른 충북사회의 구조변화

발행인 | 정 초 시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충북연구원
전화 043-220-1107 팩스 043-220-1199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문화동 15)
ISBN | 978-89-6455-499-9 93330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충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2020년도 창의기획과제 본보고서의 전문은
충북연구원 홈페이지(www.cri.re.kr)를 참고바랍니다.

CRI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15)
TEL : 043) 220-1107 FAX : 043) 220-1199 www.cri.re.kr

비매품/무료
93330
9 788964 554999
ISBN 978-89-6455-499-9